기본연구
—
2025-07

지역의 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 연구

유진영, 변숙영, 전종호, 서유정, 정준서, 김미란

KRIVE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본 저작물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2025년도에 작성하여 제공한 '지역의 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 연구'(유진영)이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www.krivet.re.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머 리 말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입학 인구 부족,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지역 인구 소멸 시기의 위기 앞에서 지역인재양성 및 정주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 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양질의 지방 일자리, 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역인재 정책은 주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고 직업계고 졸업생들은 대졸자보다 지역 정주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중등직업 교육기관은 지역 정주 가능성이 높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직업계고 고등학교 전체 취업률은 2023년의 경우, 55.7%, 2024년은 55.3%의 취업률을 보였으며, 2024년 지역별 취업률은 경북(69.5%), 대구(65.3%), 대전(61.1%) 등 8개 시도가 전체 취업률 평균(55.3%)보다 높게 나타났다(교육부, 2024). 이러한 취업률과 함께 동일 지역에 정착 경향성이 높은 직업계고 청년층의 지역 정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평균 동일 권역 정착률은 69% 수준이며, 최근 정부는 지역인재양성 및 정주기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여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교육발전특구를 전국에 도입하고 이를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 등 지역이 구상한 자율적 학교발전모델 구현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산업수요와 맞물린 인재 정책이 환경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지역의 중등 직업교육 운영체계(교육과정, 거버넌스, 인프라 등)가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협력체계가 어떠한지,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의 인재양성정책과 중등 직업교육기관의 협력 체계에 관하여 대경권(대구, 경북)과 호남권(광주, 전남)의 사례를 분석하고 설문조사와 포럼을 통해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여해 주신 각 지역별 교육청·지자체 관계자, 지역연구기관, ISC·RSC 및 졸업생, 기업관계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본 연구는 유진영 연구위원, 변숙영 선임연구위원, 김미란 명예위원, 전종호 선임연구위원, 서유정 선임연구위원, 정준서 연구원(이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연구하였다. 1장은 유진영이 집필했고, 2장은 김미란, 전종호, 변숙영이 작성했으며, 3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유진영, 정준서가 작성했다. 4장은 서유정, 변숙영, 전종호가 작성했으며 5장은 연구진 모두의 논의를 담아 유진영, 정준서가 정리하였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25년 10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고 혜 원

제목 차례

요 약_ix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1

제2장 지역기반의 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슈 고찰_19

제1절 지역인재의 개념과 지역인재 정책 협력체계 ····· 21
제2절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인재양성 제도 및 정책 ····· 36
제3절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인력양성 이슈 ····· 49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60

제3장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사례조사 및 분석_63

제1절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사례 선정 기준 ····· 66
제2절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국내 사례 ····· 69
제3절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해외 사례 ····· 100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133

제4장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실태조사 및 분석_145

제1절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현황 설문조사 ····· 147

제2절 권역별(대경권, 호남권) 포럼 실시 ····· 180
제3절 소결 및 정리 ····· 200

제5장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운영 개선 과제_205

제1절 이슈와 쟁점 정리 ····· 207
제2절 정책 개선 방안 및 제언 ····· 219

참고문헌_249

부록_263

표 차례

〈표 1-1〉 중등 직업교육을 둘러싼 거버넌스 구축 방안(안) ····· 8
〈표 1-2〉 권역별 지역인재 정책의 주요 이슈 정리 ····· 12
〈표 1-3〉 전문가 자문회의 일시 및 주제 ····· 16
〈표 1-4〉 권역별 포럼 실시 일시 및 장소 ····· 17
〈표 1-5〉 정책세미나 실시 일시 및 장소 ····· 17

〈표 2-1〉 ISC의 구성 현황 ····· 31
〈표 2-2〉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 기관별 역할(안) ····· 45
〈표 2-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관련 지원 기관별 주요 역할 ····· 48
〈표 2-4〉 연도별(2011~2023) 특성화고 학교 수 변화 동향 ····· 51
〈표 2-5〉 유형화 분석 결과에 따른 지역별 특성 ····· 53

〈표 3-1〉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의 이슈와 쟁점 분석 및 고려 요인 · 67
〈표 3-2〉 대경권·호남권 지역별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학교 유형 67
〈표 3-3〉 학력별·지역별 전문기술 부족 인원 및 부족률(2023년 기준) ·· 70
〈표 3-4〉 대구의 직업계고 입학 현황, 중도 이탈률 및 취업률 ····· 71
〈표 3-5〉 경북의 직업계고 입학 현황, 중도 이탈률 및 취업률 ····· 72
〈표 3-6〉 대구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참여 기관 ····· 76
〈표 3-7〉 경북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참여 기관 ····· 79
〈표 3-8〉 광주·전남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 추이 ····· 82
〈표 3-9〉 광주·전남의 학력별·지역별 부족 인원 및 부족률(2023년 기준) ·· 83

〈표 3-10〉 광주의 관내 직업계고 취업률 현황 ····· 85
〈표 3-11〉 전남의 지역 소멸위험 현황 ····· 86
〈표 3-12〉 전남의 중학교 졸업생 및 고등학교 입학생 수(2018~2024) ··· 87
〈표 3-13〉 광주의 지역 전략산업 인력 현황 ····· 89
〈표 3-14〉 기술직업교육 단계별 발전 과정표 ····· 108
〈표 3-15〉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수 ····· 110
〈표 3-16〉 고등학교 기술직업교육 핵심인재 양성 목표 ····· 112
〈표 3-17〉 고등학교 유형별 교과목 편성 및 교육 시간 ····· 113
〈표 3-18〉 졸업 학력에 따른 취업 경력 지표(%) ····· 122
〈표 3-19〉 노동시장서비스의 직업훈련자리 촉진책(명) ····· 124
〈표 3-20〉 회사 간 견습직업훈련 참여 및 지원 현황 ····· 124
〈표 3-21〉 이원화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권한 ····· 126
〈표 3-22〉 매년 초기직업훈련을 위해 훈련생 개인에게 지원하는
공적 지출(2019/20) ····· 127
〈표 3-23〉 산업별 직업훈련생의 수 ····· 129
〈표 3-24〉 30개 이원화 직업훈련 직종 직업훈련생 수(2023년) ····· 130
〈표 3-25〉 오스트리아의 연방 및 주정부별 직업교육훈련 지원 내용
(2024년 현재) ····· 131

〈표 4-1〉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인식조사 대상 ····· 148
〈표 4-2〉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인식조사 설문 문항
구성 ····· 149
〈표 4-3〉 조사 응답자 일반 현황 ····· 151
〈표 4-4〉 최근 3년간 졸업생의 진로 현황 ····· 152

〈표 4-5〉 학교 관계자 담당 보직 및 경력 ····· 153
〈표 4-6〉 중등 직업교육 협력기관 ····· 154
〈표 4-7〉 중등 직업교육 협력기관과의 밀접도 ····· 154
〈표 4-8〉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계획 수립자 ····· 155
〈표 4-9〉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활동 운영 필요 자원 ····· 156
〈표 4-10〉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자원 확보 방법 ····· 156
〈표 4-11〉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현재 진행 여부 ····· 156
〈표 4-12〉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지속가능 이유 ····· 157
〈표 4-13〉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중단 이유 ····· 157
〈표 4-14〉 참여하고 있는 지역인재양성 협력체계(복수 응답) ····· 158
〈표 4-15〉 지역인재양성 협력체계 참여 목적 ····· 158
〈표 4-16〉 산학협력위원회 설치 여부 ····· 159
〈표 4-17〉 산학협력위원회 명칭 ····· 159
〈표 4-18〉 산학협력위원회 전담인력 또는 전담조직 구성 ····· 160
〈표 4-19〉 지역인재양성 협력체계 전담인력/조직 필요성 ····· 160
〈표 4-20〉 지역인재양성 협력체계 전담조직 필요 이유 ····· 161
〈표 4-21〉 지자체 중등 직업교육 협력위원회 운영 여부 ····· 161
〈표 4-22〉 지역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문제 정도 ····· 162
〈표 4-23〉 지역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문제점 ····· 163
〈표 4-24〉 지역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사업장 연계 시 어려운 점 ··· 163
〈표 4-25〉 지역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운영 필요도, 운영 효과,
지역사회 협조 정도 ····· 164
〈표 4-26〉 지역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강화 추진과제 필요성 ····· 166
〈표 4-27〉 지역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조 필요성· 166

〈표 4-28〉 지역사회에서 중등 직업교육이 당면한 문제 ····· 167
〈표 4-29〉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항 ···· 168
〈표 4-30〉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 현황 ····· 169
〈표 4-31〉 프로그램 참여 경로 ····· 170
〈표 4-32〉 프로그램 참여 이유 ····· 170
〈표 4-33〉 협력 현황 ····· 171
〈표 4-34〉 관련 업무 담당자 ····· 171
〈표 4-35〉 직업계고의 적극성 및 지자체 지원 수준 ····· 172
〈표 4-36〉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 ····· 173
〈표 4-37〉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수행 업무 ····· 173
〈표 4-38〉 프로그램 참여 시 문제점 ····· 174
〈표 4-39〉 향후 지역기반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의향 ····· 174
〈표 4-40〉 지역기반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중단 이유 ····· 175
〈표 4-41〉 지역 협력체계 활성화 추진과제 필요 정도(기업 관계자) ··· 176
〈표 4-42〉 지역 내 협력 프로그램 인센티브 필요 정도 ····· 177
〈표 4-43〉 중등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 178
〈표 4-44〉 사업 운영 시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 ····· 179
〈표 4-45〉 지역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 179
〈표 4-46〉 2025년 권역별(대경권, 호남권) 관계자 포럼 개요 ····· 182

〈표 5-1〉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 방안 ····· 219
〈표 5-2〉 산학협력 관련 법령의 정비 및 보완 ····· 224
〈표 5-3〉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 연계 모델의 운영 개발 ····· 239

그림 차례

[그림 1-1] 전국 특성화고 현황 ····· 6
[그림 1-2] 학력별 산업기술인력 현황 ····· 7
[그림 1-3]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안) ····· 13
[그림 1-4] 2025년 연구 추진체계도 ····· 18

[그림 2-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조도 ····· 28
[그림 2-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본위원회의 거버넌스 구조 ····· 29
[그림 2-3] ISC 회의체 구조도 ····· 32
[그림 2-4] 지역인재 정책 관련 주요 이슈와 권역별 전략 ····· 34
[그림 2-5] 2018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추진전략 ····· 39
[그림 2-6] 2018 평생직업교육훈련 중등 직업교육 혁신방안 ····· 40
[그림 2-7] 2023년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 8대 과제 ····· 41
[그림 2-8] 협약형 특성화고 참여 주체별 지원 사항 ····· 42
[그림 2-9] 직업교육 혁신지구 추진체계 ····· 43
[그림 2-10] 지역인재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체계 ····· 46
[그림 2-11] 교육발전특구 선순환 체계(안) ····· 46
[그림 2-12] 교육발전특구 추진체계 ····· 47
[그림 2-1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추진체계도 ····· 48
[그림 2-14] 전문대 이하 및 2년 미만의 현장경력 수준 미충원율 ····· 50
[그림 2-15] K-U시티 수요 공급 모형 ····· 55

[그림 3-1] 대구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인재 성장 경로 모형 ····· 77
[그림 3-2] 경북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추진체계도 ····· 78
[그림 3-3] 전남도교육청 프로젝트 중심 교육과정(안) ····· 91
[그림 3-4] 광주의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거버넌스 구축 방향 ····· 93
[그림 3-5] 광주의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 협력체계도 ··· 93
[그림 3-6]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거버넌스 구축(광주여상 중심으로) ··· 94
[그림 3-7] 전남 교육발전특구 추진체계 ····· 95
[그림 3-8] 국가별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 102
[그림 3-9] 대만 고등학교 개황통계(2023) ····· 109
[그림 3-10] 중등 직업교육 단계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직업훈련생의
현황 추이(2013~2023) ····· 128
[그림 3-11] 오스트리아 연방주별 직업훈련생 수(2022~2023) ····· 129

[그림 5-1]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방안 ··· 221
[그림 5-2]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 ····· 229
[그림 5-3]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233
[그림 5-4] RISE 사업에서 직업계고와 대학 연계 방안 ····· 241
[그림 5-5] 중등 직업교육 협력을 위한 주체별 협의체 구축 방안 ···· 245
[그림 5-6] 지속가능한 중등 직업교육 협의체 구축 단계별 실행 방안 ··· 247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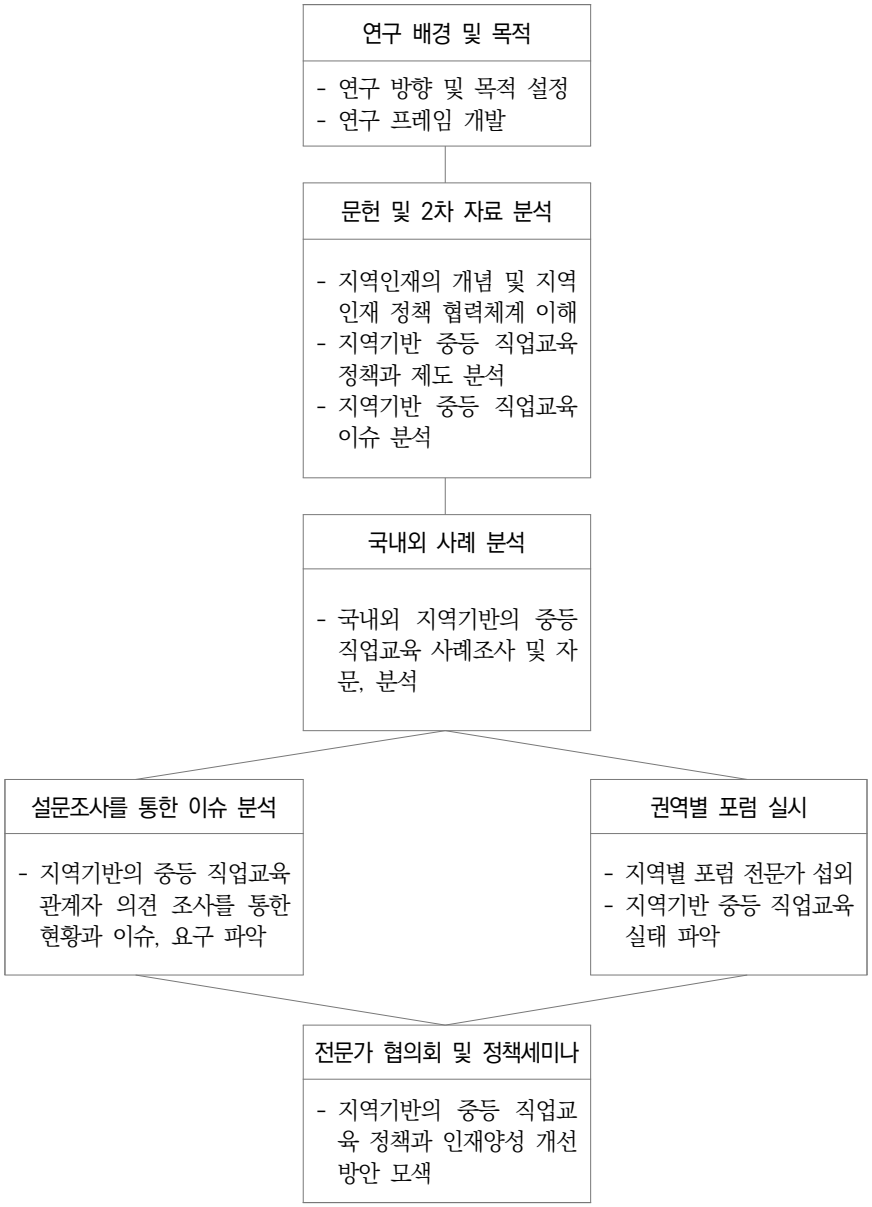
-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에 있어서 지역인재 양성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역인재 양성 정책은 대부분 지방대학에 집중되어 있었다. 실제 직업계고 졸업자의 지역 정주가 대졸자보다 높지만,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송낙현, 2023; 김성남 외, 2022).
- 지역의 산업수요와 맞물린 인재 정책이 환경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지역의 중등 직업교육 운영체계(교육과정, 거버넌스, 인프라 등)는 연계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역의 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지역기반 인재양성의 효과적 운영 방안과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분석 : 지역인재의 개념 및 법적 기반 검토 / 지역인자위(RSC)와 산업별인자위(ISC) 협력체계 및 운영과 성과 검토 / 중등 직업교육 제도 및 정책 분석 / 지역기반 인력양성의 여건 변화와 이슈 고찰

- 국내외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운영 실태 분석: 지역 산업수요, 직업교육기관의 수, 학생 수, 산학협력의 수준 등 분석 / 대경권(대구, 경북)과 호남권(광주, 전남)의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분석 / 대만, 오스트리아 사례 분석
-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지역 인재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의 운영 현황 / 협력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을 위한 요구 및 건의 사항
- 권역별 포럼 실시: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기관 협력체계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럼 실시
-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지원 모색: 정책세미나 개최

[요약 그림 1] 2025년 연구 추진체계도



제2장 지역기반의 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슈 고찰

1. 지역인재의 개념과 지역인재 정책 협력체계

지역인재의 개념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등을 고찰하고, 지금까지의 지역인재 양성 논의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들의 한계는 첫째, 지역인재 개인의 삶에 대한 중요성보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더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다는 점이다. 즉,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논의에서 개인보다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우선순위가 더 높음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책 대상과 정책 수단을 협소하게 정의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에서의 지역인재'를 해당 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통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인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역대 정부들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해 가장 큰 한계로 지역인재 정책과의 연계가 부족했다는 점이 부각된다. 그래서 지역인재 정책의 운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지역인자위(RSC)와 산업별인자위(ISC)를 중심으로 인재 정책에서 협력체계의 내용과 운영, 역할과 성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지역중등 직업교육정책에서 협력체계에 대해 그 필요성이 지역인력정책 측면에서 중요하게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전재식 외(2022)의 연구에서는 거시적 수준으로 협력체계 구축 측면에서 다음의 경우를 주목했다.

첫째, 지역인재 정책의 협업체계 구축에서 지역인재 정책 거버넌스에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지역경제의 순환구조에서 인력 육성과 공급을 담당하는 교육 분야를 가장 핵심적인 축으로 보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이 협업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역소멸이나 지방대학 위기 문제는 지자체가 당면한 가장 우선순위의 현안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의 인재양성 정책이 광역자치단체와 연계성이 없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 정책의 거버넌스 운영에서 효율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실적인 주체이자 주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인재양성 제도 및 정책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인재양성 제도 및 정책을 살펴보았다. 우선, 2018년 '평생직업교육 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범부처 직업교육훈련정책 연계·조정(「산학협력법」에 근거), 지자체 주도의 직업교육훈련 유관기관(교육청, 고용청, 노·사단체, 지역인자위 등)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안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2023년 '중등 직업교육 발전방안'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정책이 소개되었다. 협약형 특성화고에는 지역기반의 산업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산업)SC-특성화고 등이 참여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제도적·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지자체(광역/기초), 지역 산업체, 특성화고(이상 필수 협약 주체), 대학, 연구소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지역주도 거버넌스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재를 양성해서 결국 지역에 정주하게 하는 모델이다. 세 번째

로 지자체·교육청 협력으로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살펴보았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자체(광역/기초)와 시·도교육청의 협력(컨소시엄)을 기반으로 지역 고졸 인재 성장경로 마련을 위해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 기업, 직업계고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한다. 2021년 5개 지구 선정(3년)을 시작으로 2025년 기준 15개의 혁신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네 번째로 지역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를 살펴보았다. 교육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 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정책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2024년 총 56개 특구(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지정(3년)하여 2025년 현재 운영 중이다.

3.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인력양성 이슈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인력양성 이슈로는 지역별 연령별 인구수의 변화, 지역별 직종/산업별 인력수요의 변화, 중등 직업교육 입학 인구의 감소 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우선, 지역별 연령별 인구수의 변화를 고찰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입학자원이 꾸준히 존재해야 하지만, 15세 미만 연령이 전국적으로 연평균 2.4%씩 감소하고 있다. 전북, 전남, 경북은 3%대, 경남은 약 2.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자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지역별 직종/산업별 인력수요의 변화를 고찰하여 지역별 직종별 취업자 비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문직과 단순노무직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능원 및 조작·조립직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능원 및 조작·조립 종사자의 취업 비율이

충청도 및 경북 지역에서는 유지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세 번째로 중등 직업교육 입학 인구를 살펴보면, 특성화고 학교 수와 학생 수는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학교 수 감소 폭에 비해 최근 들어 학생 수 및 충원율 등의 감소 폭이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많은 수의 특성화고가 정원 미달 및 폐교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중등 직업교육의 비중 감소와 함께, 특성화고 운영 성과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증가하면서 현재 특성화고는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 산업 특성에 기반한 지역인재 정책은 단순히 인구 유입이나 인재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교육, 복지, 문화,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제3장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사례조사 및 분석

1.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사례 선정 기준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산업수요 가운데 중등단계 직업교육 졸업생에 대한 수요,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의 수, 학생 수, 지역기반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산학협력과 사업 등이 진행되는 곳을 중심으로 국내의 사례 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지역인재 정책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고찰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 지역으로 국내에서는 2개의 권역(대경권, 호남권)을 선정하였다.

〈요약 표 1〉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의 이슈와 쟁점 분석 및 고려 요인(단위: 개교, %)

구분		직업계고 학교 수	지역별 취업률	정착률	취업유지율
대경권	대구	20	65.3%	82.5%	83.3%
	경북	55	69%		-
호남권	광주	12	55.9%	59%	-
	전남	43	평균 이하		-

자료: 연구진 작성.

〈요약 표 2〉 대경권·호남권 지역별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학교 유형

학교 유형 선정 지역		마이스터고(개교)	특성화고(개교)	직업교육 혁신지구(개교)	협약형 특성화고(개교)
대경권	대구	5	15	12	-
	경북	7	48	24	1
호남권	광주	2	10	10	-
	전남	4	39	-	-

자료: 연구진 작성.

해외 사례로서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대만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주요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대만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중등 직업교육의 지역기반 운영이 체계적으로 정착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만 정부는 직업교육기관을 지역 산업, 지역사회, 지역주민과의 연계 속에서 기능하는 '지역 특화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업교육의 발전 전략 또한 지역기반의 접근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이원화 직업교육체제를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국가 중 하나로, 고등학교 수준의 직업교육이 전체 교육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2.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국내 사례

국내 사례 중 대경권의 경우, 지자체(대구광역시청 등)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산업체, 지역 대학,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장기적으로 정주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체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구광역시의 인재 정책은 대학생과 19세 이상의 청년에 대한 정책은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정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경북의 경우, 경북지역 지자체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지원은 타 시·도에 비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교육청, 지자체, 산업체, 학교 간의 역할 확대 및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지원 방안 마련을 포함한 지역 산업(정주)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호남권 광주·전남 지역의 당면 문제로는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 고령화, 인재 유출의 삼중고를 들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광주·전남은 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통한 학생의 입학, 졸업, 취업, 지역 정주 등을 위한 지역인재 정책의 범주 가운데 학교를 둘러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은 교육청과 학교가 담당한다는 인식이 여전한 듯 보이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정주 기술인재 양성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한다. 전남의 경우, 최근 7년간 직업계고 학교 수, 학급 수, 입학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 정원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충원율은 85%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하고 있는데, 우선 일자리, 학업 등의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을 수용할 지역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인 교육 회복 및 강화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미래 학교를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3.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해외 사례

해외 사례 중 대만의 경우, 최근 들어 정부가 지역인재양성에 필요한 산·학협력의 실질성 제고를 위해 연계범위를 '지·산·학'으로 확대하고 있다. 산·학 협력의 출발을 지역 산업 및 사회에 관한 관심과 이해에 두도록 권유하며 고등학교 이하는 지역의 전문대학, 기술대학, 과학기술대학 등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에 중등 직업교육기관은 지역의 기술 직업교육 대학과 연합하여 참가함으로써 직업교육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 회생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가운데 지역의 산업 발전에 관심을 두게 되어 취업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중등 직업교육과 관련된 인재 정책과 직업교육훈련 연계 협력의 특징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중등 직업교육훈련의 핵심인 이원화 직업훈련 체계의 권한과 책임이 연방정부 수준과 주정부 수준, 지역 수준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연방노동경제부(BMAW), 연방직업훈련 자문위원회(B-BAB), 연방교육·과학 및 연구부(BMBWF)가 중심 역할을 한다. 주정부 수준(Landesebene)에서 보면, 각 연방주의 경제 회의소에 설립된 교육훈련사무소(Lehrlingsstellen)가 일차 직업훈련기관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갖고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방정부 차원과 주정부 차원에서 직업훈련생에게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제4장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실태조사 및 분석

1.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현황 설문조사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으로 학교 부문은 대경권(대구, 경북) 및 전남권(광주, 전남)에 소재한 직업계고 130개교를 선정하였는데, 각 학교의 취업 및 진로·진학 업무 담당자(예: 취업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등)가 응답하였다. 기업 부문은 동일 권역 내 직업계고와 산학협력을 진행 중인 산업체 343개사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각 기업의 산학협력 업무 담당자가 응답하였다.

조사 대상의 구체적인 현황은 〈요약 표 3〉과 같다.

〈요약 표 3〉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인식조사 대상

구분	모집단	표본 목표	조사 대상
학교	130개교	100개교	취업 및 진로·진학 업무 담당자
기업	343개소	100개소	산학협력 업무 담당자

설문조사 각 영역에 포함된 주요 문항의 내용은 〈요약 표 4〉와 같다.

〈요약 표 4〉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인식조사 설문 문항 구성

구분	설문 주요 내용	직업계고	기업체
Ⅰ.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에 대한 이해/인식	협력 운영 여부	●	●
	협력체계의 필요성 및 목적	●	●
	협력체계 참여 동기(학교/기업체)	●	●

〈표 계속〉

구분	설문 주요 내용	직업계고	기업체
Ⅱ.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운영 현황	협력체계 조직/인력, 예산, 활동 내용	●	●
	협력체계 운영 성과(만족도, 운영 효과 등)	●	●
	협력 프로그램의 문제점 파악 및 대응	●	
	지역인재 정책 및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도		●
	지자체의 협력위원회 참여 여부	●	●
	협력체계 체결 및 주요 활동		●
Ⅲ. 협력 프로그램 운영 현황	협력 프로그램의 중요도/용이성	●	
	협력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	
	협력 프로그램의 중도탈락 개선책	●	●
	협력 프로그램 매뉴얼, 사전교육, 계약서 등		●
	협력 프로그램 관련 업무 수행 태도 및 능력에 대한 인식		●
	각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 여부		●
Ⅳ.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을 위한 요구 사항 및 건의/제안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	●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
	지역사회(지자체, 지역)와의 협조 현황/협조 필요성	●	●
	지역사회(지자체, 지역)와의 당면 문제	●	●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원 사항 (중앙부처/교육청/지자체/산업체/기타 등)	●	●

주: 설문 문항의 큰 틀과 일부 문항은 유진영 외(2023)를 참고하여 구성됨.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관련 요구 분석 결과, 학교와 기업의 경우 현황과 문제점,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와 기업 간의 인식은 부분적으로 다르지만, 협력의 필요성과 의지, 개선의 방향성에서는 분명한 접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접점을 현실적인 제도 설계와 운영체계로 구체화하는 것이 향후 지역 직업교육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이다.

먼저, 학교와 기업 모두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협력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공감하고 있었다. 학교 측은 학생 진로 지원과 교육의 질 제고를, 기업 측은 우수 인재의 조기 확보와 인력 충원의 용이성을 주요 이유로

들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실제 협력 경험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약 90%는 향후에도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의 중도 탈락 원인에 대해서도 양측의 인식은 매우 유사하였다. 학교와 기업 모두 진학 및 진로 변경, 적성 불일치, 참여 의지 부족을 탈락의 주요 사유로 지적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참여 동기, 사전준비도가 협력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변수임을 양측이 모두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장 운영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학교는 전담인력 부족, 과도한 행정 부담, 예산 확보의 불안정성을 가장 주요한 운영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특히 학교 내부에 산학협력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고, 업무를 겸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도 다수였다. 기업은 실습 이후 채용에 대한 부담, 실습지도 인력의 부족, 기업 내부 여건의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지자체의 지원 부족 등을 주된 문제로 인식하였다. 즉, 학교는 주로 교육기관 내부의 실행 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기업은 외부 환경과 행정 지원 체계의 미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적 가치와 학생 중심의 성과에 비중을 두는 반면, 기업은 프로그램 참여가 실질적인 채용과 연결되는가에 따라 효용성을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이런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학교와 기업 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한 소통 구조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기업은 학생 평가 결과를 학교에 환류하고, 학교는 기업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설계나 사전교육을 체계화하여 신뢰를 높여야 한다. 둘째, 지자체와 지역 교육청의 실질적 역할 강화가 절실하다. 양측 모두 지역사회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족을 지적했으므로, 협력체계의 조정자이자 보조자 역할을 수행할 공공기관의

기능 정립이 요구된다. 셋째, 산업체와의 협력에서 학생의 전공 일치성 확보, 근무 환경 개선, 학생 맞춤형 진로탐색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생의 중도 이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진학-취업 경로를 아우르는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기업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산점, 보조금 지급 등 구체적 인센티브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결국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는 학교,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이 각자의 목적과 관점을 이해하면서 공동의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로 정비되어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의 품질과 학생의 진로를 중심에 두고, 기업은 실질적인 채용과 직무 적합성을 고려하며, 지자체는 이를 조율하고 자원을 연결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2. 권역별(대경권, 호남권) 포럼 실시

대경권과 호남권의 포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경권의 경우, 특히 경북은 농산어촌 지역이 많고, 지역별 학교 수가 제한적이어서 권역 단위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과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지방 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이 학교 졸업 후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중등 직업교육의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경북은 광역권 단위의 협의체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일부 시도도 했지만, 제도화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도-교육청-산업계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협의체와 실무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며, 광역권 단위 정책 공조(대구-경북 RISE, 대경권 AI

캠퍼스 등)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제안 가운데 대구·경북형 '중등 직업교육협의회' 모델 도입 필요도 나왔고, 광역권 단위 '교육청-지자체-산업계-대학-TP' 연계 거버넌스 설계에 대한 논의도 전개되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등직업교육 단계에서의 Glocal/RISE 사업과 연동하여 지역 대학뿐 아니라 직업계고도 포함하여 '지역인재 생애이음 전략'을 실현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 기업에 대한 우수 인력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계점으로 직업교육협의체 필요성 인식과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의 장기적·통합적 중등 직업교육 정책협의체나 플랫폼이 부재한 점을 꼽았고, 정책 변화나 담당자 교체 시 협력관계가 약화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좀 더 구체적인 논의로는 광역 공동협의체를 설치해 장비투자 통합계획, 교육·커리큘럼 공동 개발, 취업·후학습 통합 플랫폼 운영 등으로 예산 절감과 지역 정착률 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지역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산업별 접근보다는 직무나 기능 단위로 세부적 기술 역량 강화에 교육적으로 접근한다면 보다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무엇보다 지역인재양성에 주요 축인 지자체장의 중등 직업교육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현재 고등교육에 집중된 인재양성 관련 지원의 중등 직업교육으로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지자체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도 논의되었다.

호남권 포럼에서는 대경권과 달리 광역권 논의보다는 지역 안에서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지역 사정으로 특히 전남은 특성화고 수가 많지만, 정책적 지원은 부족하다고

보았고,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발생하며, 매해 4~5천 명의 청년 인구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 지역인재 정책은 중등·고등 나눌 필요 없이 정주·성장·재교육까지 포괄해야 하며, 협력체계 논의는 중등 직업교육보다는 지역인재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지금까지는 정책 사업의 주체 및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단발성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산학협력법」이 고등교육에만 적용되어 중등 직업교육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고, 지자체 내의 타 부서와의 협업은 제한적이며, 실질적 성과 중심 협력이 미흡하다고 분석하였다.

광주의 경우, 직업계고부터 대학까지를 포함한 통합적 전략을 추진 중이고, 시청과 교육청의 협력이 잘되고 있는 편이지만, 역할 분리가 더 분명해야 하고 교육청 중심의 직업교육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광주와 전남 모두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등 직업교육을 유지하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실상 교육청 직업교육팀만이 중등 직업교육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광역권 협의체 구축에 있어서는 광주·전남의 행정적 차이로 인해 단일 호남권 거버넌스 구축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광역 거버넌스 구성은 이상적이나 행정적으로 현실상 어려움이 크다고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광역 단위로 접근하기보다는 소규모 지역 단위로 협의체를 시범 운영해 점진적으로 확장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제5장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운영 개선 과제

1. 이슈와 쟁점 정리

앞에서 고찰한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 설문조사,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역인재양성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에 관한 이슈와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슈와 쟁점
1. 지역인재양성 법제와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미흡
2. 정주 지역인재 확보는 중등 직업교육을 위한 학력 자원 확보와 활성화가 우선
3.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의 지역 협력체계 운영 실태 점검·보완
4. 지역별로 산업수요와 직업계고의 특성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필요
5. 지역별로 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지역인재 정책 필요
6. 지자체-교육청-산업체-학교 간 협력체계 합리적 모델 개발 필요
7.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을 연계하는 모델 필요
8. 지역인재양성정책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개선안 마련
9. (지역별) 학교와 기업 간의 신뢰 구축 체계 필요
10. 지역인재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
11. 직업교육 기반 협의체 구축을 위한 접근 전략 및 예산 확보 필요
12. 광역권 단위의 협의체 구축 필요

2. 정책 개선 방안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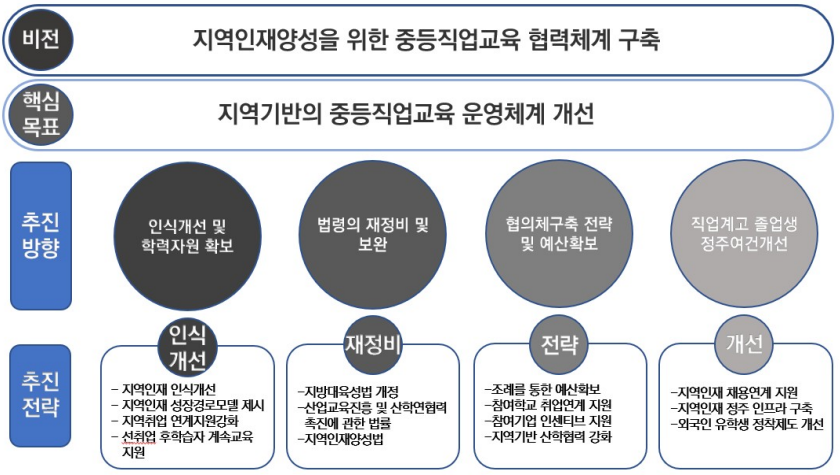
위의 이슈와 쟁점에 따라 개선 방안 및 정책을 1. 실태 파악 및 인식 개선, 2. 운영 지원, 3. 모델 개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요약 표 5〉와 같다.

〈요약 표 5〉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 방안

구분	이슈와 쟁점	개선 방안/제언
1.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현황 파악	1. 지역인재양성 법제와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미흡 10. 지역인재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지역인재의 대상 확대와 지원을 위한 법령 제·개정 - 「지역인재양성법」 개정으로 지역인재에 지역 대학 졸업자 외에 지역 고교 졸업자도 포함, 지역인재 지원 확대 방안 강화 -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 제시
	3.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의 지역협력체계 운영 실태 점검·보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실태 모니터링 체제 구축
	8. 지역인재양성정책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개선안 마련	지역별 직업계고의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성공 모델 개발
2. 협력체계 개선을 위한 운영 지원	2. 정주 지역인재 확보는 중등 직업교육 위한 학력 자원 확보와 활성화가 우선 5. 지역별로 직업계고 졸업생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정책 필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 정주 지원 방안 - 지역별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방안 포함
	11. 직업교육 기반 협의체 구축을 위한 접근 전략 및 예산 확보 필요	지역별 지·산·학 기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 - 직업교육 기반 협의체 구축 및 운영 전략 수립 - 직업교육 기반 협의체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3. 협력체계 개선을 위한 모델 개발	4. 지역별로 산업수요와 직업계고의 특성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필요 6. 지자체-교육청-산업체-학교 간 협력체계의 합리적 모델 개발 필요	지역별 지역 산업인재 양성을 위한 지·산·학 기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7.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을 연계하는 모델 필요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지역인재 양성 연계 방안
	9. (지역별) 학교와 기업 간의 신뢰 구축 체계 필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와 지역 산업체의 산학협력 방안 - 지역별로 산업수요와 직업계고의 특성에 따른 협력체계 모델 구축
	12. 광역권 단위의 협의체 구축 필요	광역권 단위의 협의체 모델 개발 - 광역권 협력 모색과 광역권 협의체의 법정·상설화 및 기존 프로그램 활성화

이러한 개선방안과 정책에 따라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위한 추진방향, 핵심목표, 비전을 다음의 [요약 그림 2]와 같이 설정하였다.

[요약 그림 2]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방안



자료: 연구진 작성.

주제어	지역인재양성(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System), 지역산업수요(Regional Industrial Demand), 직업계고(Secondary Vocational School)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인구의 도시 집중,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데,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기업 본사·사업체·R&D 인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이상돈 외, 2020, 11).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출생아 수는 23만 명, 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0.72로 현저하게 낮다(이상훈 외, 2024, 요약 xi). 또한,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이다.

한편, 최근의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지역소멸 위기는 우리 사회의 기술 진보와 사회변화의 복합적 관계를 압축해 제시해준다. 디지털 기술 혁신, 기후변화 대응, 산업구조 변화 등은 일자리의 공간적 재편을 초래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경제, 지역균형발전이 서로 다른 정책 영역인 동시에 중첩되는 의

제이기도 해서, 국가 인재 정책과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류기락 외, 2023, 요약 xx, 3). 이러한 복합전환은 지역의 산업과 기술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기회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지원을 필요로 한다.

지역 발전에 대한 논의는 균형 성장론과 불균형 성장론이라는 두 이론적 흐름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어 왔다. 균형 성장론은 대규모 투자(Big Push) 전략을 통해 모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osenstein-Rodan이나 Nurkse와 같은 균형 성장론자들은 한 지역의 경제 발전은 다른 지역과의 연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차재권·류태건, 2014, 163). 불균형 성장론은 한정된 자원을 비교우위를 지닌 지역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전체의 성장 효과를 이끌 수 있다고 본다. Hirschman이나 Myrdal과 같은 불균형 성장론자들은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에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투자전략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전성만·정현민, 2023, 58). 한국은 1962년 이후 불균형 전략을 채택하여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수도권 자원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전성만·정형민, 2023; 차재권·류태건, 2014, 163; 장혜정 외, 2024, 15-16 재인용).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분권을 목표로 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교육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2023. 9. 14.)을 추진하고 있다(송낙현, 2023). 2023년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내놓았다(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2023. 9. 14.)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역인재 정책은 주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전개했기에 직업계고 졸업생들은 대졸자보다 지역 정주율이 높음에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송낙현, 2023; 김성남 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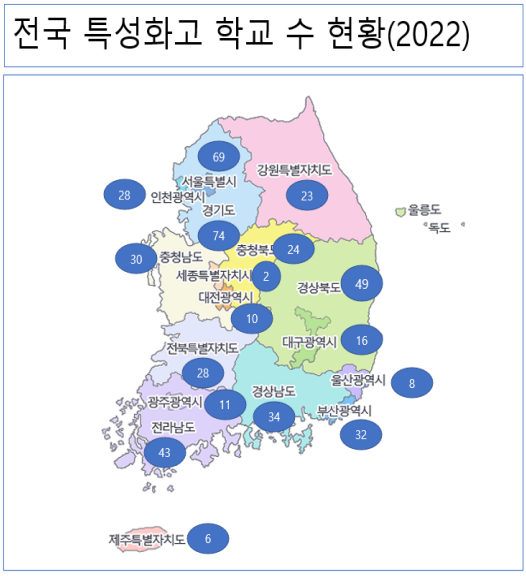
중등직업 교육기관은 지역 정주 가능성이 높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핵심

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2024b)의 '학력별·산업별 산업기술인력 현황'에 따르면, 학력별 인력은 고졸이 750,52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사(526,468명), 전문학사(301,699명) 순이다. 고졸과 전문학사 인력은 전자 분야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 2024c). 직업계고 고등학교 전체 취업률은 2023년의 경우, 55.7%, 2024년은 55.3%를 보이고, 지역별 취업률은 2024년 기준 경북(69.5%), 대구(65.3%), 대전(61.1%), 경남(59.5%), 세종(59.4%), 충남(58.2%), 강원(56.2%), 광주(55.9%)로 8개 시·도가 전체 취업률 평균(55.3%)보다 높다[교육부(2024. 11. 6.),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결과 발표].

특성화고 졸업자의 동일 권역 정착률은 평균 69%로, 일반고 졸업자에 비해 높은 정주성을 보인다. 예컨대, 동남권의 직업계고 졸업자의 동일 권역 장착률은 82.5%인데 일반고는 75.2%이다. 이는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체계가 지역인재 유출 방지에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관계부처합동, 2023b). 특성화고 졸업생은 마이스터고 졸업생보다 동일 지역 정착률이 높은데, 특히 경기 지역의 정착률이 두드러진다(최수현 외, 2023). 유지취업률 역시 경남(84.4%), 충북(84.1%), 대구(83.8%) 등 특정 지역에서 높으며, 2024년 기준으로는 서울(70.8%), 대전(69.3%) 등이 상위권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24, 35).

그러나 지난 20년간(2005~2024년) 특성화고 입학생은 약 65.2% 감소하였고, 특성화고는 약 31.7% 줄어들었다(이상훈 외, 2024, 4).

[그림 1-1] 전국 특성화고 현황



자료: 교육부(2022a),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2022. 4. 1. 기준) (전체 487개교, 학생 수 182,801명).

기술 인력의 부족이 예견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그림 1-2] 참조), 지역인재와 특성화고 졸업생의 감소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림 1-2] 학력별 산업기술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23년 산업기술인력			
	현원(A)		부족인원(B)	부족률(B/(A+B))
전체	**1,716,846**	**100.0**	**39,190**	**2.2**
고 졸	750,529	43.7	17,480	2.3
전문대졸	301,699	17.6	6,264	2.0
대 졸	526,468	30.7	12,515	2.3
대학원졸	138,149	8.0	2,932	2.1

□ **학력별 현원**

- 전체 산업기술인력 중 **고졸 인력은 가장 많은 750,529명으로 43.7% 비중**
- 전체 산업기술인력 중 **전문대졸 인력은 301,699명으로 17.6% 비중**
- 전체 산업기술인력 중 **대졸 인력은 526,468명으로 30.7% 비중**
- 전체 산업기술인력 중 **대학원졸(석·박사) 인력은 138,149명으로 8.0% 비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4), 2024년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공표자료, p. 35.

정부는 지역 정주 기반과 인재 양성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협약형 특성화고 등 자율적인 학교 발전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교육부, 2024b, 17).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지역의 산업수요 및 직업교육과의 유기적 연계 없이 단편적으로 추진될 경우,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중등 직업교육 거버넌스, 교육과정, 인프라 등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등 직업교육 정책은 전반적으로 지난 5년간 학생들의 취업 전 역량 강화,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 고졸 일자리 확대, 취업 이후 사회 안착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취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김성남 외, 2022, 23-24). 그러나 학생의 사회 진출과 졸업 후 병역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정부 부처 간 협력은 미흡하였다. 그 과정에서 산학교육, 산학협력의 중요한 축인 SC나 ISC의 역할도 명시되지 않았고, 구조적인 한

계를 보이고 있다(장명희, 2022, 163; 이승봉 외, 2023, 123-125).

또한 많은 정책 가운데 지역공동체와 청년을 잇는 정책도 두드러지지 않으며, 협력체계(거버넌스)를 통한 전달체계가 분절되어 있다. 중등단계 직업교육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정부부처 간, 시·도교육청-지자체의 인재양성정책과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관계부처합동, 2023b. 8, 4-5).

〈표 1-1〉 중등 직업교육을 둘러싼 거버넌스 구축 방안(안)

구분	추진과제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거버넌스 체제 구축	◦ 직업교육의 개념 및 직업교육기관의 범위 명확화 ◦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별도 법령 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및 명확화 ◦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통합적 접근 ◦ 중등 직업교육에서의 국가 책무성 강화 ◦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질 관리 강화 ◦ 직업교육 재정지원의 통합 관리
중앙-지방-직업교육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중앙정부의 직업교육협의체(컨트롤타워) 구축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협의체 구축 ◦ 직업교육기관별 직업교육협의체 구축
직업교육기관 내 참여적 거버넌스 구조 개편	◦ 중등 직업교육기관 내 거버넌스 구축 ◦ 고등직업교육기관 내 거버넌스 구축 ◦ 중등 직업교육-고등직업교육의 연계 및 차별화

출처: 허영준 외, 2021, 요약 xxviii.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역인재 정책과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에 기반을 둔 직업교육 체제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직업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직업계고와 지역 기업 간의 산학협력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와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허영준 외, 2021; 유진영 외, 2023). 이에 본 연구는 단순히 산학협력 모델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지역별 직업계고의 운영 실태와 지역인재양성과 관련된 핵심 이슈 및 쟁점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고찰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중등 직업교육과 지역인재 성장을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국가를 선정하여 그 제도 및 운영 방식, 정책적 지원 구조 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직업계고, 지역 기업,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 주체 간의 연계 구조와 협력 메커니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고, 나아가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주와 한계

본 연구에서는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에서의 지역인재'를 해당 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통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인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1] 최근에 지

1) 참고로 산업통상부(2024a). 2024년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공표자료 (p.2)에서는 산업기술인력에

역마다 지역기반의 산학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인재(인력)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지역기반'에서의 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15조)에 의거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군(광역시의 군 포함)·구(자치구) 등을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 4항)이 포함되었다. '중등단계 직업교육'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의미한다.

그리고 '중등 직업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정책에 따른 직업교육 혁신지구, 교육발전특구 내 협약형 특성화고를 포함하고 일반고 직업계반은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연구지역을 전국적으로 살펴보기 어렵고, 지역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인재양성 정책도 전체 지역을 포괄하기가 어려워 몇몇 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했다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설문조사 및 포럼에서 접촉한 해당 대상자만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우선 밝혀 둔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교육과정 운영과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주로 다루고 졸업 이후의 지역인재 정책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대해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 및 정보통신 업무 관련 관리자, 기업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전문가 논의를 통하여 "지역인재는 지역의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지역 산업체에 취업하거나 지역 대학에 입학하여 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에 정주하면서 종사하는 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경력개발 등을 통해 고숙련 전문가로 성장을 하는 인재"로 범주가 확장되기도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지역의 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지역 기반 인재양성의 효과적 운영 방안과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정책 및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별 사례 분석을 통해 협력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등 직업교육과 지역 인재 정책 간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지역 산업수요와 인재 정책, 중등 직업교육 간의 연계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문제 제기를 다룬다. 1절에서는 지역인재의 개념과 법적 기반을 검토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대육성법」 등을 통해 기존 지역인재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특히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지역인재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중심으로 협력체계의 운영과 성과를 살펴본다. 2절에서는 중등 직업교육 제도 및 정책을 중심으로, 2018년 평생직업교육 혁신방안, 2023년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 협약형 특성화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정책과 프로그램을 고찰한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 산업체, 특성화고 등이 협력하는 구조에 주목하여 지역 중심의 교육-산업 연계 모델을 분석한다. 3절에서는 지역기반 인력양성의 여건 변화와 이슈를 다룬다. 지역별 인구구조, 산업·직종별 인력수요 변화, 직업교육 대상자의 감소 현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복합 요인을 고려하여 산업·교육·복지·문화·주거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인재 정책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특히, 수

도권 외 지역 중 부산, 대구,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과 연계한 중등 직업교육 인재 정책의 쟁점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의 운영 사례를 고찰한다. 국내 사례로 지역 산업수요, 직업교육기관 수, 학생 수, 산학협력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수 또는 주목할 만한 지역을 선정하고, 특히 대경권(대구·경북)과 호남권(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체계의 실태와 지역인재 정책 간 연계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해당 권역의 교육과 노동시장 간 미스매치, 산학협력의 운영 실태, 거버넌스 구조 등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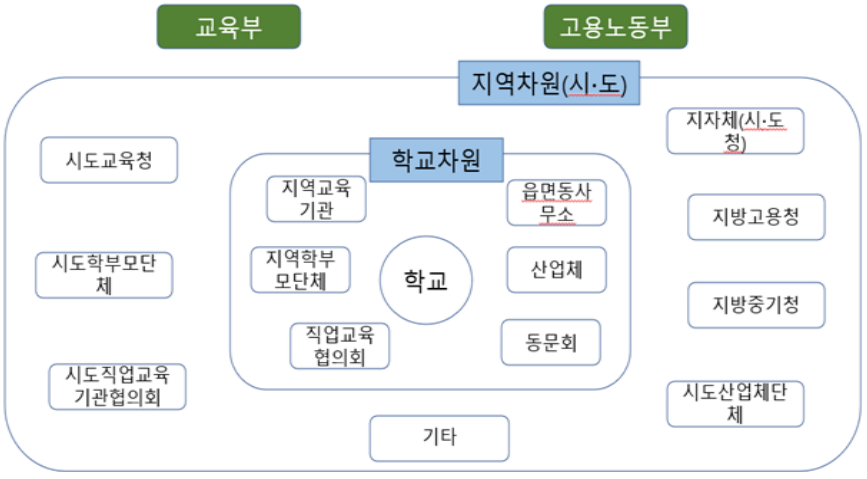
〈표 1-2〉 권역별 지역인재 정책의 주요 이슈 정리

권역	주요 이슈	전략
충청권	- 신성장산업 등 주력산업의 혁신역량 부족, 지역균형발전 동력 약화 - 수도권보다 취업, 소득, 교육 등 정주여건 열악 - '인서울' 열풍을 타고 지역인재의 유출 심화	1. 충청권 내 산업의 상호 보완성 강화와 동반성장 전략 2. 도시·농촌 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전략 3. 지역인재유출 방지 전략 4. 충청권 노동시장의 선순환 인적자원 시스템 구축 전략
호남권	- 반도체 및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계획 - 인구 감소, 고령화, 인재 유출의 삼중고, 고용흡수력 낮음 - 일자리의 양적, 질적 수준도 낮음	- 남부권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재전환 필요 - 민관 협력형 인재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교육기관-지자체의 역할 고도화 - 글로벌 인재 영입을 위한 개방적 인재 생태계 조성 - 상생형 일자리 신규 모델화 전략 필요 - 광주·전남 미래인재 양성 거버넌스 구축 전략

권역	주요 이슈	전략
대경권	- 전국 대비 낮은 성장률과 둔화 추세 - 주력 제조업 생산 비중의 감소, 중간재 생산 경제구조 - 고용 및 일자리 흡수력 낮음 - 주력업종에 대한 낮은 전문성 및 전문인력의 양적 부족 현상 - 교육시장과 노동시장 간 미스매치 현상	- 지자체, 대학, 기업의 역할과 상호 관계 역량을 극대화하는 전략 필요 - 교육과 지역 노동시장 연계 전략 - 플랫폼 경제로의 대전환 - 산학 눈높이 맞추기 전략 필요
부울경권	-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노인 건강, 의료, 생활 편의 관련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 - 지역인재 배출이 많으나 산업별·직종별 인력수급 미스매치가 큼 - 자동차, 조선, 항공, 수소산업 육성, 디지털 신산업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및 취업지원 확대 전략: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체계 구축 필요 - 근로 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확대 - 신성장산업 육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 전략 - 지역인재 육성 컨트롤 타워 구축 전략

자료: 전재식(202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지역인재 정책 이슈 및 전략. The HRD Review, 26(2), 8-17 요약.

[그림 1-3]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안)



작성: 연구자 정리.

이와 함께, 해외 사례로는 중등 직업교육과 지역인재 정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대만(아시아)과 오스트리아(유럽)를 선정하여, 이들 국가의 직업교육지원정책과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검토한다. 국내외 사례 분석 외에도 전문가 회의, 설문조사, 포럼 등을 통해 실제 현장의 운영 실태와 협력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제4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에 관한 학교 관계자,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지역별 관계자 포럼을 통해 운영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제5장에서는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교육기관, 정부, 지자체, 산업체 등 주요 주체의 역할을 정리하고, 중등 직업교육의 교육과정·거버넌스·인프라 등 운영체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헌 및 정책자료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관련 전문가 협의회 및 면담, 설문조사, 지역별 전문가 포럼 개최, 정책세미나 개최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2장에서는 관련 문헌 및 정책자료를 분석하였고, 제3장에서는 문헌고찰과 관련 전문가의 협의회와 심층면담을 통해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 연구 방법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었으며,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와 국내 지역별 포럼을 실시하였고, 제5장에서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가. 관련 문헌 및 정책자료 분석

연구 내용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 정부부처 관련 정책, 시·도교육청의 직업교육 운영 계획, 관련된 연구 논문, 정책자료 등을 수집하여 지역인재양성과 노동시장분석 등과 관련한 정부 정책 및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기관의 운영체계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고,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국내외 사례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국내외 사례조사
- 지역인재 정책 담당자, 지역기반 직업교육과정 담당자, 직업교육과정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 직업교육과정 운영체계의 쟁점을 심층 논의하고 개선 방향 모색
-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사례연구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체계 쟁점 및 개선 방향, 정책과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논의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운영체계에 관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되는 정책 및 지원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6차례 가졌다.

- 대상: 권역별 중등 직업교육 관계자 및 해외 중등 직업교육 전문가 6명
- 시기: 2025년 4~5월

〈표 1-3〉 전문가 자문회의 일시 및 주제

차례	일시	전문가	주제
1	2025. 4. 4.	김○○	해외 사례(오스트리아) 지역인재 정책 및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2	2025. 4. 4.	오○○	해외 사례(대만) 지역인재 정책 및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3	2025. 5. 29.	최○○	대경권(대구) 지역인재 정책 및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4	2025. 5. 29.	최○○	대경권(경북) 지역인재 정책 및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5	2025. 5. 29.	문○○	호남권(광주) 지역인재 정책 및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6	2025. 5. 29.	박○○	호남권(전남) 지역인재 정책 및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다.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와 관련된 두 권역(대경권, 호남권)을 선정하여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운영 모델(협약형 특성화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과 관련된 지자체, 학교, 시·도교육청, 기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기반 직업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조사하였다.

- 시기: 2025년 6~7월
- 대상: 권역별 중등 직업교육 관계자 및 산업체 담당자

라. 권역별 포럼 실시

중앙(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및 지역(시·도교육청 등)의 직업교육 정책 담당자, 관련 전문가, 학습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기반 직업교육과정 운영 실태 파악 및 쟁점을 도출하였다.

포럼은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기관 거버넌스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 권역별 심층면담 대상: 권역별 중등 직업교육 관계자, 지자체 관계자, 인자위 등 협회 관계자, 졸업생 등 11명
- 시기: 2025년 7월에 대경권과 호남권을 구분하여 실시

〈표 1-4〉 권역별 포럼 실시 일시 및 장소

권역	일시	장소	참석자
대경권	2025. 7. 8.	대구역 KTX 회의실	교육청, 지자체, 협회, 학교, 산업체, 지역 연구원, 졸업생 등
호남권	2025. 7. 15.	전남 여성가족재단 회의실	교육청, 지자체, 협회, 학교, 산업체, 지역 연구원, 졸업생 등

마. 정책세미나

마지막으로 정책세미나를 통해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제안하고자 한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정책 개선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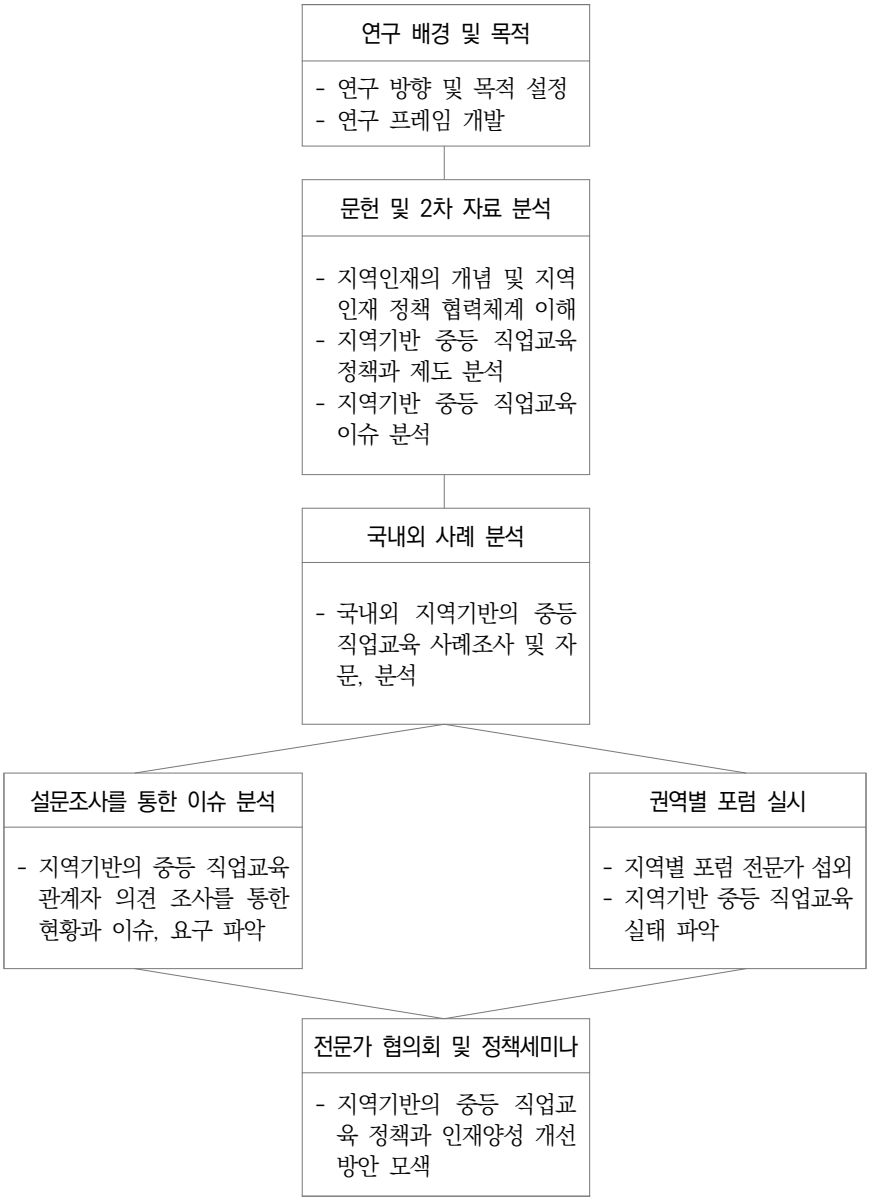
정책세미나는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기관 협력 기관 및 거버넌스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 정책세미나 참여자: 연구진, 교육정책 전공 교수 및 직업계고 관련 전문가 등 10명
- 시기: 2025년 10월 21일 오송역 회의실

〈표 1-5〉 정책세미나 실시 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시간	참석자
2025. 10. 21.	오송역 회의실	12:00~15:00	연구진, 교육정책 전공 교수, 직업계고 현장 전문가, 지역 정책연구원 관계자 등 (10명)

[그림 1-4] 2025년 연구 추진체계도



제2장

지역기반의 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슈 고찰

제1절 지역인재의 개념과 지역인재 정책 협력체계
제2절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인재양성 제도 및 정책
제3절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인력양성 이슈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2장 지역기반의 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슈 고찰

제1절 지역인재의 개념과 지역인재 정책 협력체계

1. 지역인재 정책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산업화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1960년대 이후 시기별로 구분하여 전개하였다. 1960~1970년대는 이른바 '경제발전 도약기'로, 수출 주도형 전략과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해 연평균 두 자릿수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지역 간 경제 격차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류기락 외, 2023, 120-121).

1980~1990년대는 '경제 고도 성장기'로, 산업구조 고도화, 정보기술 중심 산업의 육성, 대외 경제 개방 등의 정책을 본격화하였다(류기락 외, 2023, 120-121). 이 시기에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 틀을 국가 차원에서 점차 구축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나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적 주요 과제로 삼았다(전재식 외, 2022, 3).

2000년대 이후는 '경제성장 안정기 및 정체기'로서, 지역개발정책도 경제 중심에서 벗어나 인프라, 기술, 사회 기반 강화 등 보다 다층적인 접근으로 전환하였다(류기락 외, 2023, 120-122). 2003년에는 대통령직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지역인재에 대한 정책 논의는 여전히 미흡하였다.

지역인재양성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04. 4. 1. 시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20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014) 등을 제정했는데, 이들 법령은 산학협력, 지방대학 졸업자 우대, 지역 정착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담고 있다(백원영 외, 2024, 43-44). 그러나 이들 법령에서는 지역인재 개인의 삶에 대한 중요성보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더 중요한 것으로 논의하고 있고, 지역인재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정책 대상도 국가나 지방정부의 전략에 맞춘 집단적 관점에 치우쳐 있다(백원영 외, 2024, 44). 정책 수단 또한 교육과 노동시장 이행 단계에 집중하고 있어서, 산업과 사회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어렵기만 하다.

예컨대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르면 지역인재는 최종 학력 기준으로 규정되는데, 이는 개인의 실제 활동 지역이나 성장 과정, 지역과의 관계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국토교통부 예규 제639호). 더욱이 지역 인구 감소의 원인을 '인재 부족'으로 단순 환원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및 정보통신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이들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으로 인재가 이동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더 크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제조업 기술인력은 감소하고, 단순노무직과 일부 서비스직의 비중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산업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기존의 인재양성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려움을 보여준다(백원영

외, 2024, 45-46).

그래서 최근에는 지역인재에 대한 개념도 재정립하고 있다. 백원영 외는 지역인재를 단순한 출신지나 교육 배경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 기반의 전문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백원영 외, 2024, 47). 이는 단순한 인력 확보가 아닌,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인재 전략으로서의 접근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역인재 정책 간의 유기적 연계는 여전히 부족하고, 교육과 산업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 역시 미흡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의 '지역'과 '지역인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1. '지역기반'에서의 '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15조)에 의거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의미한다.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 5항).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을 말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지역의 정의도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 4항)이 포함된다.

2. '중등단계 직업교육'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교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지역인재, 즉 '지역기반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의 '지역인재'는 해당 지역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통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인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최근 지역마다 산·학·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인재(인력)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시·군·구) 가운데 중등단계 직업교육 졸업생에 대한 지역 산업의 수요,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의 수, 학생 수, 지역기반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산학협력과 사업 등이 진행되는 두 곳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지역인재 정책에서 협력체계(거버넌스)의 현황과 주요 이슈

지역인재 정책은 단순한 인력양성 사업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위원회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인력에 대한 정책을 지역(또는 권역) 단위에서도 계획 및 집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기본 방향과 부처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 즉 지역균형발전 이슈가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대통령실 직속의 이들 위원회를 통해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며, 지역 산업이나 인력 관련 정책을 계속 추진하였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정책 집행(government)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참여와 조정을 바탕으로 하는 상향식 거버

넌스(governanc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는 행정 조직만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내 산업계와 여러 교육기관, 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2]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로 최근에는 광역 또는 권역 단위의 행정 협력과 통합 논의가 지방정부들 사이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또한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차원의 자율성과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는 대표적인 지역기반의 인재 정책 거버넌스 사례로 주목받는다. 이 위원회는 지역 내 고용수요에 맞춘 인력개발을 목표로 하며, 실업자훈련, 직업교육, 노동력 수급 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 특화 전략,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력개발을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지역의 일자리는 산업구조, 인력수급, 정주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순환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정책 설계와 집행에 있어 지역 맞춤형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와 같은 조직은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지역 거버넌스의 실제 모델로 작동하고 있다.[3]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함께 지역경제진흥원, 지역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원정책'을 통해 세제 혜택,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역 지원 방

2) 김미란 외(2019)의 19-23쪽과 30-37쪽 참조, 하혜수, 김철회, 박경순(2018)의 135쪽 참조.
3)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웹페이지 https://www.hrd4u.or.kr/rsc/ (검색일 2025. 5. 14.) 참조

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정책은 지방시대위원회의 비전과도 연계되며, 산업과 인재양성의 유기적 연결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부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ndustrial Sector Council, ISC)'를 운영하며 약 20개 산업 분야에서 민간 주도의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업종단체, 대표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산업기술진흥원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4] 이는 산업정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속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RSC와 ISC는 지역과 산업의 맥락에서 실질적인 인재양성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역인재 정책의 협력체계로서 이 둘의 운영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정리한다.

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의 협력체계와 역할

고용노동부는 중앙-지방 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흐름 속에서, 지역과 산업에 적합한 인력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즉 지역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5] 이를 바탕으로 2013년에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이하 지역인자위)'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지역 단위에서 인력정책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역인재 정책 거버넌스를 제도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

4) 협의체의 임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직도(kiat.or.kr/front/dept/selectDeptMap.do)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41호[2025년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5-04-24]를 참조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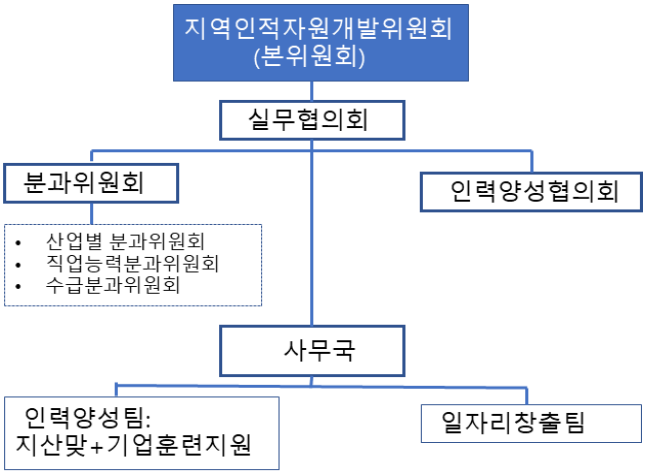
5) 이러한 인식의 근거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지역균형발전'이 국정과제로 설정된 것임. 2003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9년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 이후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등으로 현재에 이름.

지역인자위의 법적 근거는「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제22조의 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제2019-3호)를 통해 세부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법령에 따르면, 지역인자위는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고용노동관서, 지자체,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등 지역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 구성되며, 지역의 인력 및 훈련수요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지역기반 인력정책 거버넌스 기구로 정의된다.

조직은 '본위원회'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 '인력양성협의회', '실무협의회' 등으로 구성되며, 실제 집행 기능은 사무국이 담당한다([그림 2-1] 참조). 사무국은 '인력양성팀'과 '일자리창출팀'으로 나뉘어 고용노동부의 지역 인력정책 일부를 집행하고 있다.[6] 사무국 운영은 고용노동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초기에는 산업인력공단(2013~2016년)이, 이후에는 지방고용노동청(2017년~)이 직접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7]

6)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과 고용부가 부여한 훈련사업 일부를 함께 수행함.
7)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www.hrd4u.or.kr/ 2025. 5. 14.) 자료 참조.

[그림 2-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조도



출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www.hrd4u.or.kr/ 2025. 5. 14)를 참조해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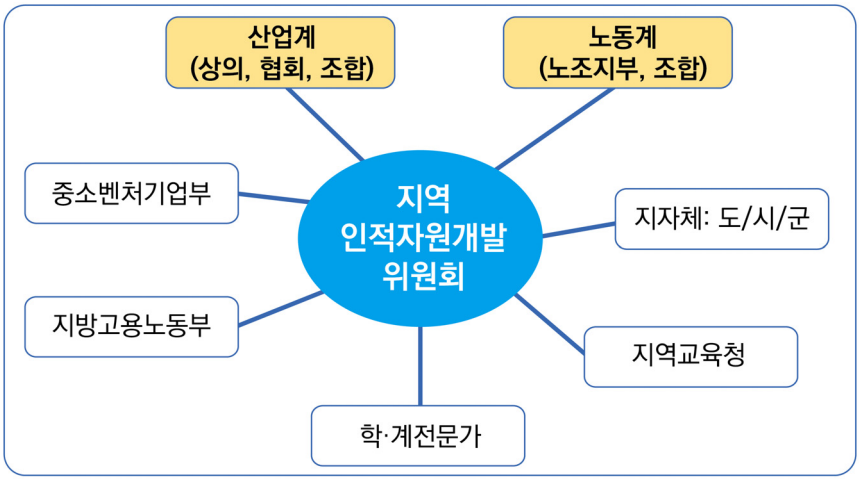
지역인자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산업인력공단은 위원회 운영 모니터링, 사업 계획 승인, 예산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직업능력연구원은 지역 단위 훈련수급조사, 사무국 역량 강화, 훈련과정 심사 및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위원회를 간접 지원하고 있다.[8)]

거버넌스로서 지역인자위의 구조는 [그림 2-2]와 같다.[9)] 위원회의 운영체계는 본위원회를 중심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지방정부, 교육청, 노사단체, 고용노동관서, 중소벤처기업청,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되며,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10)] 본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지역 고용 및 인력 문제를 공식화하고, 인력양성 기본계획을 수립·심의하며, 인력양성사업과 일자리창출사업의 연계 및 평가를 총괄하는 것이다. 특히 분과위원회

8)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www.hrd4u.or.kr/rsc/ 2025. 5. 14.) 자료 참조.
9) 역할과 기능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www.hrd4u.or.kr/rsc/ 2025. 5. 14.) 참조.
10)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운영).

에서는 산업별 훈련수요와 수급 불일치 문제를 다루고, 실무협의회는 안건 조정과 실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마련한다.

[그림 2-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본위원회의 거버넌스 구조



출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www.hrd4u.or.kr/rsc/ 2025. 5. 14.)를 참조해 연구진이 작성.

지역인자위의 기능에 대하여 정재호 외(2023, 188)는 "지역 내 인력 및 훈련수요·공급 파악, 기본계획 수립, 재원 배분 및 연계 평가, 정책 제안"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다음 실적에 기초하여 위원회가 지역 고용 거버넌스로서 논의를 이끄는 주체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선 본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인력양성협의회 등 회의체 운영에서 산업계의 참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산업계(47.6%), 정부기관(18.9%), 학계 및 전문가(10.1%), 지자체(9.8%), 노동계(7.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정재호 외, 2023, 188). 주된 논의 주제는 공동훈련센터 운영, 특화훈련 개발 등 훈련수요 기반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정재호 외(2023, 184-185)는 위원회 운영이 구조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개선 과제를 제안했는데, ▲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에 따른 재원의 실질적 배분 및 중복 사업 조정 권한 확대, ▲ 성과에 기반한 평가 및 재정 조정 체계 강화, ▲ 훈련수급 분석 역량 제고와 사무국 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 지역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역할 분담 및 협업 확대 등이다. 이는 지역인자위가 명실상부한 지역 인력정책의 거버넌스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나.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운영체계와 역할[11)]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이하 산업별인자위)는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5년 고용노동부 주도로 출범하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ISC의 주요 목표는 산업현장의 직무 변화와 인력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산업별 역량체계(SQF)를 개발·개선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12)]

산업별인자위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2조 및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법적 근거로 한다.[13)] 현재 전국적으로 20개 산업별 ISC가 구성되어 있으며(〈표 2-1〉 참고), 각 ISC의 참여 주체는 사업주단체, 기업, 업종별 협회, 근로자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4)]

---

11) 문한나 외(2021), 22-49 참조.

12)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홈페이지. www.hrdkorea.or.kr/1/1/3/6 (검색일: 2025. 5. 6.)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소양)을 국가 차원에서 산업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임.
** SQF(Sectoral Qualification Framework):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직무와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도출하고, 해당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학위-자격-교육·훈련-경력을 구성해 놓은 체계임.

13) 고용노동부 개정 고시 제2022-19호.

〈표 2-1〉 ISC의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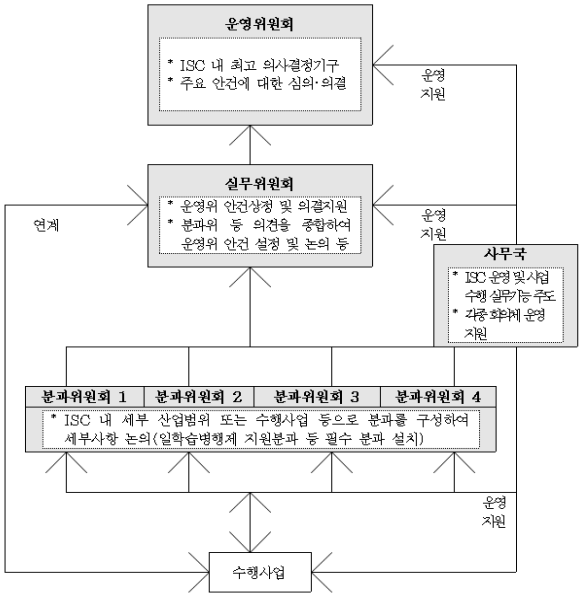
ISC명(대표기관)	산업 범위	참여 기관 및 기업
정보기술(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사업관리, 정보기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벤처사업협회 등 26개
경영·회계·사무(한국생산성본부)	기획사무, 총무·인사, 재무·회계, 생산·품질관리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생산관리학회 등 24개
유통·물류(한국물류산업진흥재단)	상용물류	한국물류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물류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3개
디자인·문화콘텐츠(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문화콘텐츠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애니메이션협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19개
건설기계·재료(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건설장비, 금속재료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한국비파괴검사학회, 한국용접·접합학회 등 24개
음식서비스·식품가공(한국외식산업협회)	외식서비스, 식품가공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푸드코디네이터협회 등 34개
건설(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품질, 토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25개
기계·소재(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설계, 기계조립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정밀측정학회,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등 26개
섬유·화학(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 화학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한국염색가공학회 등 24개
금속(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금속가공, 표면처리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대한금속재료학회 등 25개
자동차·바이크(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정비, 자동차부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등 26개
전기·에너지·자원(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 에너지·자원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기전자학회, 한국전력공사 등 26개
조선·플랜트(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조선, 플랜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등 19개
반도체·디스플레이(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 디스플레이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25개
바이오·헬스(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 제약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21개
환경·에너지(한국환경공단)	환경, 에너지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27개
산업안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SK하이닉스(주), 한국안전학회, 한국산업위생학회 등 30개
정보기기(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기기	정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등 30개

출처: 고용노동부(2024. 2. 21.),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선언 [보도자료].

14) NCS 소분류 기준 67.8% 포괄함.

산업별인자위의 참여 주체는 사업주단체, 업종별 협회, 기업, 근로자단체 등 산업계 중심의 이해당사자이고,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의 회의체,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각 ISC를 대표하는 기관에 설치되어 ISC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그림 2-3] 참조).

[그림 2-3] ISC 회의체 구조도



출처: 문한나 외(2021)의 p. 23 재인용.

산업별인자위의 주요 기능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15]

1) 회의체 운영: 연 2회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분과위원회를 열어 산업계 인력양성정책 및 ISC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15) 문한나 외(2021)의 pp. 22-49(ISC)의 운영 체계 현황과 이슈에 대한 논의)를 참고로 요약함.

2) 인력수급 분석 및 직무 변화 대응: 연 1회 산업인력현황보고서를 통해 인력 및 훈련의 수요를 파악하고, 분기별 이슈리포트를 통해 산업별 핵심 이슈를 진단하며, 직무맵을 수정·보완하는 등 직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한다.
3) 자율기획사업 운영: 각 ISC는 해당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인력양성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수행한다. 예를 들어, 일자리 연계 채용 행사, 산업계-학교 간 협력사업, 취업 연계 문화 확산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16]
4) 개별 사업 수행: 산업별 역량체계(SQF) 구축, NCS 개발 및 개선, 기업 대상 NCS 활용 컨설팅, 산업계 주도 국가기술자격 개편 등 세부 사업을 실행한다.

산업별인자위(ISC)는 지역인자위(RSC)와 달리, 특정 지역보다는 특정 세부 산업 수준에서 신규노동자 및 재직노동자의 숙련 향상과 이를 위한 숙련 개발체계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산업 중심의 정책 설계와 실행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직무 중심의 인재개발과 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 지역 및 권역 수준의 통합적 거버넌스 관련 이슈

인재 정책에서 지역의 주도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동안 진행된 '지역인자위(RSC)'와 '산업별인자위(ISC)'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 평가와 향후 제안은 다음의 연구들로 요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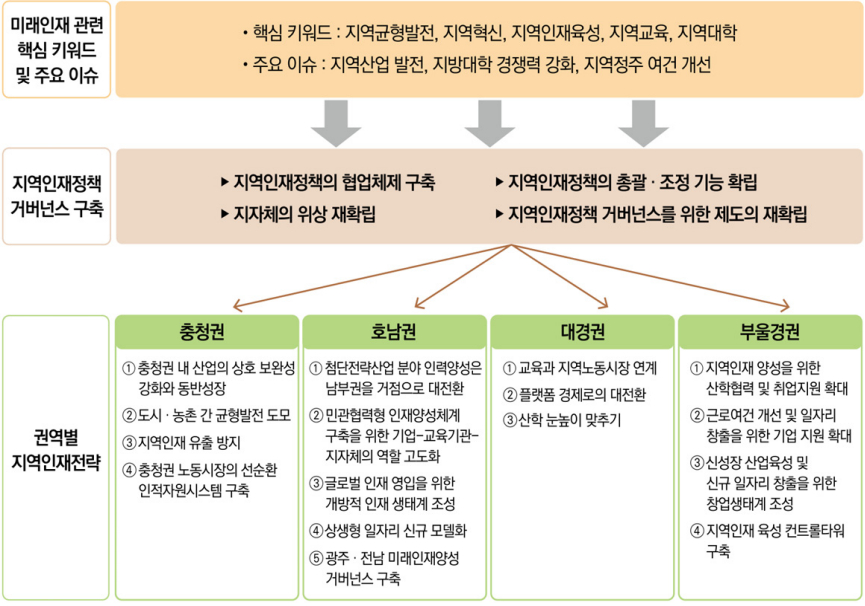
이승봉 외(2023)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가 실질적 협력체계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도적 한계에서 찾았다. 그는 RSC의 역할이 고용

16) 산업계 내부 또는 산업계-학교 간 일자리 창출·연계·문화 확산을 위한 채용 행사 등(고용노동부, 2024. 11. 7.).

노동부 일부 사업의 집행에 국한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도 소수 중심의 폐쇄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자율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수직적이고 경직된 3단계 조직체계는 참여 주체의 수동성을 심화시키며, 결과적으로 RSC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 다른 연구로 전재식 외(2022)는 지역인재 정책을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산업·교육·고용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게 통합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주도의 분절적 정책이 아니라, 지역 내 협업체계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림 2-4] 지역인재 정책 관련 주요 이슈와 권역별 전략



자료: 전재식 외(2022)의 p. 231 재인용.

실제로 호남권, 대경권, 부울경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재양성 거버넌스를 전략과제로 삼아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산학협력 확대, 인재육성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인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협업체계 구축, 정책 총괄 조정 기능 확립, 지자체 위상의 재정립, 관련 제도의 정비가 제시된다.

결국 최근의 연구들은 RSC와 ISC가 효과적인 인재 정책 거버넌스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참여 주체의 다양화,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 총괄 기능 강화 등 실질적 실행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2절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인재양성 제도 및 정책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인재양성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이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였다.

1. 중등 직업교육 인재양성 제도

가. 중등 직업교육 관련 법령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0조, 91조)에 따라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되는 고등학교로, 각각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계고는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들 학교는 국가·지자체·산업체 등과 협력하는 산학연협력의 주체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5년 단위의 산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조정·심의하는 상위 거버넌스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이들 학교를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규정하고, 시·도교육감에게 취업 지원, 교사 배치, 프로그램 설계 등 실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직업교육을 단순 교육이 아닌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적 영역으로 위치시킨다.

최근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직업교육은 평생학습체계와도 연계되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지역사회와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제공의 거점

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들 학교는 산업, 고용, 평생교육을 아우르는 다층적 교육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으며, 향후 인재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나. 중등 직업교육 운영 관련 정부기관

중등 직업교육과 관련된 주요 정책 거버넌스로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법적 기반과 기능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교육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9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출범하였으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2. 7. 21. 시행)에 따라 교육의 장기적 방향과 국민 의견 수렴을 담당하는 최고 수준의 교육정책 조정기구이다. 위원회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기준 고시, 정책 조정 및 공론화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한 방향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중심 부처로, 교육 법령의 제정·관리, 국가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고등교육, 재정·예산 등의 구체적인 운영과 실행을 담당한다. 중등 직업교육에 있어서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정책 개발과 직업계고 정책 추진, 재정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단위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기관으로,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춘 교육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직업계고 운영, 교원 인사관리, 지역 교육예산 집행 등을 맡는다. 특히 직업교육 관련 사업과 취업지원센터 운영, 학교현장의 자율성 확보 등 실행력을 기반으로 정책 현장화를 도모한다.

이처럼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방향성과 정책 조정의 상위 기능을 맡

고, 교육부는 구체적 실행과 법제 기반을 마련하며, 시·도교육청은 지역 현장의 정책 실현을 담당하는 구조로 중등 직업교육의 다층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다. 이 세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는 중등 직업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핵심 기반이다.

다. 중등 직업교육기관의 인재양성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은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통해 자율적으로 교과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또한, 산업수요와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인재양성의 변화는 학과 재구조화와 관련된다. 2016년 4월 '중등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계획' 발표 이후 진행된 학과 재구조화·개편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141개 학과) → 2017년(103개 학과) → 2018년(95개 학과) → 2019년(120개 학과) → 2020년(146개 학과) → 2021년(143개 학과) → 2022년(98개 학과) → 2023년(96개 학과) → 2024년(86개 학과)과 같이 나타난다(관계부처합동, 2025).

2.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인재양성 주요 정책 및 사업

가. 2018년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17)]

2018년 발표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은 직업교육훈련을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고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며 마련된 종합 정책이다. 중등 직업교육, 고등직업교육 그리고 성인 대상의 직업훈련

17)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8)의 주요 내용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발췌·작성함.

까지 전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훈련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5] 2018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추진전략



자료: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8) 중 일부 내용(p.11) 발췌 연구자 수정.

중등 직업교육 영역에서는 ▲ 자율학교 지정 확대, ▲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 기존 학습 경험을 인정하는 RPL(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도입, ▲ 산업체 주도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연계(P-TECH 모델 등), ▲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SW교육 의무화, ▲ 학과 재구조화와 교육과정에 산업체 참여 의무화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협력체계 강화 측면에서 ▲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통한 범부처 연계, ▲ 지자체 중심의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SC(직무), ISC(산업별), RC(지역) 간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 기반

강화, ▲ 교육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하는 정책 전환(직접일자리사업 → 직업훈련 중심) 등이 강조되었다.

[그림 2-6] 2018 평생직업교육훈련 중등 직업교육 혁신방안



자료: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8) 중 일부 내용(p.14) 발췌 연구자 수정.

나. 2023년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18)]

2023년에는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중등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8대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 중에서 협력체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관계부처 합동, 2023b)과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 계획(교육부, 2025c)의 주요 내용을 연구자가 발췌·정리함.

[그림 2-7] 2023년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 8대 과제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 p. 8 연구자 수정.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의 핵심 과제로 '협약형 특성화고' 모델이 제시되었다. 이는 지자체·교육청·산업체·학교 간 협약을 바탕으로 지역 중심의 인재양성과 정주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졸 인재의 취업-성장-정주 경로를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운영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2024년 1월 육성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10개 학교를 1기로 선정(3~5년)하였고, 2025년에도 10개 학교 선정을 목표로 하였다. 협

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지자체(광역/기초), 지역 산업체, 특성화고(이상 필수 협약 주체), 대학, 연구소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지역 주도 거버넌스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재를 양성해서 결국 지역에 정주하게 하는 모델이다. 이를 위한 사업계획의 핵심 내용은 ① 취업-성장-정주에 이르는 지역인재 성장경로 제시, ② 지속가능한 거버넌스(교육청 차원의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학교 차원의 운영위원회 등) 구성·운영과 지역 차원의 제도적 지원, ③ 재정투자 및 연관 사업(직업교육 혁신지구, 교육발전특구, RISE 등)과의 연계, ④ 협약 책무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등이 있다.

[그림 2-8] 협약형 특성화고 참여 주체별 지원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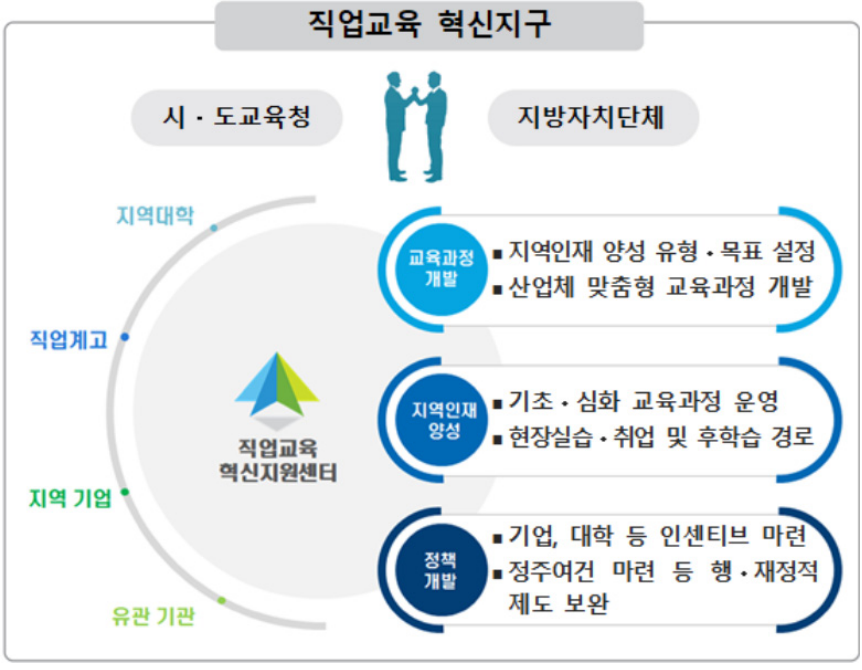


자료: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2차 공모 실시(교육부, 2025. 2. 6.), p.1.

다. 직업교육 혁신지구[19]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자체(광역/기초)와 시·도교육청의 협력(컨소시엄)을 기반으로 지역 고졸 인재 성장경로 마련을 위해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 기업, 직업계고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한다. 2021년 5개 지구 선정(3년)을 시작으로 2025년 기준 15개의 혁신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그림 2-9] 직업교육 혁신지구 추진체계



자료: 교육부(2024b). 2025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공모 계획(안), p. 2.

19) 교육부(2024b). 2025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공모 계획(안)과 직업교육 혁신지구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educluster.kr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연구자 발췌·작성함.

핵심 구조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지원센터와, 주요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지역협력위원회로 이루어진다. 지자체는 기업·기관 협력, 일자리 발굴,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맡고, 교육청은 학교 재구조화, 교육과정 개발, 산학겸임교사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이 정책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취업지원체계 구축 등 지역기반 훈련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 구축·운영
- 지역 전략·특화·혁신성장산업 분야 설정, 지역 전략·특화산업 등 관련 인재양성 목표 및 성장경로 제시
- 지역 전략·특화·혁신성장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 지역 기업과 연계한 전략·특화산업 맞춤형 현장학습 운영
- 학생들의 원활한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체계 구축
- 혁신지구 경력·경로 모형 발굴, 지자체 청년정책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정주 여건 마련
-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기반 조성 등

직업교육 혁신지구 협력체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협약을 맺고 구축·운영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지자체와 교육청 소속 1인 이상 전담인력 배치)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주요 추진 사항 심의·의결, 기관 간 협업 필요 사항 협의 등의 역할을 맡는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지자체·교육청 국장급, 지역 기업·단체 임원, 대학산학협력단장, 직업계고 교장, 고용노동(지)청 센터 소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력담당과장 등 15명 내외 구성]가 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와 협력하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은 〈표 2-2〉와 같다.

〈표 2-2〉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 기관별 역할(안)

주체	기관별 역할(안)
지자체	• (협업 추진) 지역기업 및 유관기관, 지역대학 등 기관 간 MOU 체결 • (고용·정착 지원) 지역전략산업 고졸청년 일자리 발굴·창출, 지역기업 인센티브 제공, 관련 기관과 고용촉진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 지역 청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정착 지원 사업 연계 • (인력·재정 지원) 전담인력 배치, 기업·유관기관·대학 등에 예산 지원
교육청	• (제도 연계) 지역 전략·특화산업 분야 참여 학교 재구조화 지원, 교육과정 개편 지원, 참여 학생, 학부모, 기업 대상 사업 홍보 • (교육 지원) 산업체 주도 지역 전략·특화산업 교육과정 개발·운영, 기업 현장실습 운영 지원, 후학습 발굴, 우수사례 발굴·확산 • (인력·재정 지원) 직업계고 협약기업 전문가의 교육 참여 지원(산학겸임교사), 지역 직업계고·관련 교육기관 등에 예산 지원

자료: 교육부(2024b). 2025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공모 계획(안), 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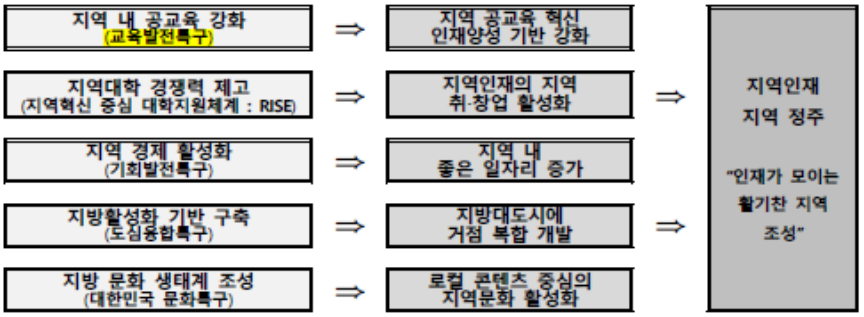
라. 교육발전특구[20)]

교육발전특구는 중등 직업교육을 포함한 전 교육 단계를 아우르며,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이 연계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2024년부터 56개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평생학습, 고용연계, 산업혁신 등과도 연계되어 있다.

운영체계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가 지정하고, 지역 내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협력체(교육청+지자체+대학+산업체 등)가 구축되어 공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20)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2023, 교육부)과 2025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추진계획(안)(교육부, 2025a),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1년, 우수사례를 한자리에 모아 공유(교육부, 2025.3.19.)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발췌·작성함.

[그림 2-10] 지역인재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체계



자료: 교육부(202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2023, 교육부), p. 2.

교육발전특구는 중등 직업교육을 포함하여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까지를 사업 대상으로 하며, 지역인재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체계 속에서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양성 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

[그림 2-11] 교육발전특구 선순환 체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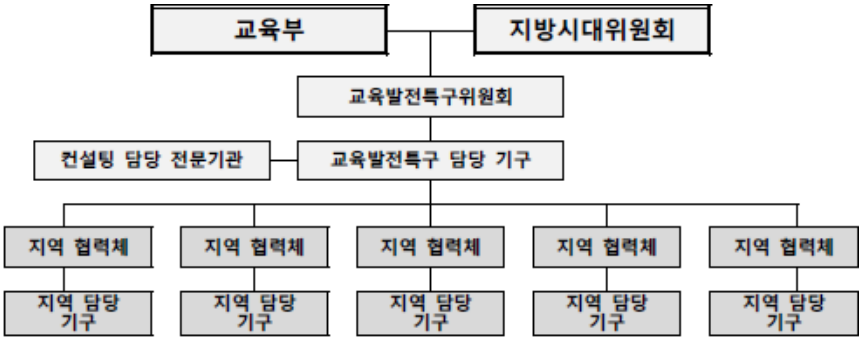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
목표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역 주도 교육개혁 지원 ·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	· 지역인재 유출 방지
추진 방향	· 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 · 유보통합 시범운영	· 공교육 경쟁력 제고 · 디지털기반 수업 혁신	· 고교-대학-지역 연계 강화 · 지역 인재 선발·양성
성과 지표	· 출산율 상승	· 학업성취도 상승 · 사교육비 감소	· 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 · 지역인재 취업률 상승

자료: 교육부(2023).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2023, 교육부), p. 4.

교육발전특구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교육부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후 광역(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지자체·교

육청·대학·산업체 등 지역의 교육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내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한다. 교육발전특구 담당기구는 교육부 내에 설치하고, 지역 담당기구는 지자체 내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그림 2-12] 교육발전특구 추진체계



자료: 교육부(2025a). 2025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추진계획(안),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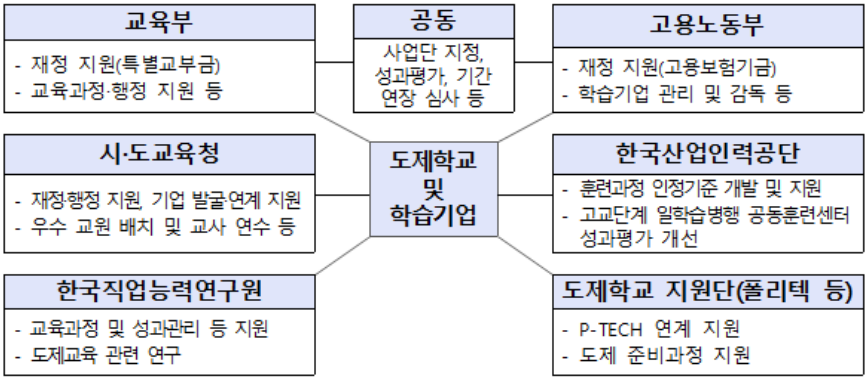
마.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일학습병행제를 적용하는 모델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학생은 일정 기간 학교와 기업에서 교육훈련을 병행하는데, 현장훈련(OJT)은 주간정시제 또는 구간정시제로 운영되며, 대부분은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습과 채용까지 연계된다. 2025년 기준 166개교가 운영 중이며, 도제반 평균 취업률은 약 57.5%이다.

운영에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외에도 시·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다수 기관이 협력하며, 지역 단위의 공동훈련센터나 현장교사 양성 등도 포함된다. 기업은 전담인력 지정, 훈련과정 설계 및 평가 등에 책임을 가진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양 부처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정책 사업으로 시·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도제학교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학습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이 외의 기관들도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2-1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추진체계도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5). 2024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매뉴얼(p. 21).

〈표 2-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관련 지원 기관별 주요 역할

지원 기관	주요 역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학습기업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학습근로계약과 관련한 근로감독 등 • 훈련과정 지도 점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양성교육
공동훈련센터 지원단 (공단 관할 지역별 대학 지정, 20개)	• 공동훈련센터 컨설팅 제공 •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지원 • 일학습병행 홍보 활동 수행 등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5). 2024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매뉴얼(p. 23) 중 일부 내용 발췌 연구자 수정.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습기업도 전담인력 지정, 훈련과정 개발, 학습근로자 모집 및 선발, 훈련 실시 및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3절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인력양성 이슈

1. 지역 인구구성 및 중등 직업교육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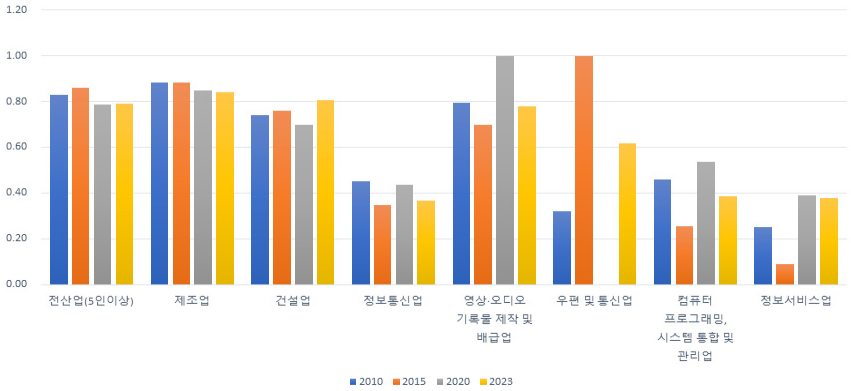
가. 지역별 연령별 인구수의 변화

지역의 인재양성 규모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역 인구구성 비율의 변화를 보면, 15세 미만의 인구 변동은 전국적으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15세 미만 연령이 전북, 전남, 경북은 3%대, 경남은 약 2.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자원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할 수 있다(백원영 외, 2024, 101-103).

나. 지역별 직종/산업별 인력수요의 변화

백원영 외(2024)의 연구에서 직종별 및 지역별 취업자 비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취업자의 전문직 상승세와 단순노무직의 전체적인 증가가 나타났다. 기능원 및 조작·조립 종사자의 취업자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다. 전문대 이하 및 2년 미만 현장경력 수준의 미충원율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분야는 미충원율이 대체로 50% 이하이지만, 제조업, 건설업,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80%대 이상이다([그림 2-14] 참조).

[그림 2-14] 전문대 이하 및 2년 미만의 현장경력 수준 미충원율



주: 전체 미충원 인원 중 직능 1수준~직능 2-2수준의 미충원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010~2023년 각 연도 하반기. 재인용: 백원영 외 (2024).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지역인재 정책 전략 연구, p. 122 [그림 4-1]

한편,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취업자 수를 서울 기준으로 지역과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서울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경기, 경북, 경남, 충남은 서울보다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많다. 지역의 기능원 및 조작·조립 직종 인력의 감소와 제조업 인력의 감소는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가 줄어드는 탓도 있지만, 로봇 산업과 같이 과거 양산 기술인력에 초점을 맞춘 산업정책으로 인해 제조업 인건비 감소 외에 추가적인 기술인력의 확보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백원영 외, 2024, 123-124).

다. 중등 직업교육 입학 인구의 감소

2023년 기준 특성화고는 공립 257개교, 사립 205개교 등 총 462개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총 476개교에 비해 14개교가 줄어든 수치이

다(2011년 대비 2.9% 감소). 같은 기간 일반고 수는 1,554개에서 1,666개로, 2011년 대비 7.2%가 증가하였다(김종우·김남희, 2022; 김성남, 2024, 10). 전체 고교생 수 기준 특성화고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17.4%에서 2023년 13.5%로 감소하였다(김성남, 2024, 11). 이는 향후 많은 수의 특성화고가 정원 미달 및 폐교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2-4〉 연도별(2011~2023) 특성화고 학교 수 변화 동향

(단위: 개,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특성화고	공립	279 (58.6)	280 (58.9)	274 (58.3)	275 (57.9)	273 (57.7)	273 (57.8)	268 (57.5)	267 (57.5)	265 (57.2)	263 (56.7)	263 (56.7)	259 (56.1)	257 (55.6)
	사립	197 (41.4)	195 (41.1)	196 (41.7)	200 (42.1)	200 (42.3)	199 (42.2)	198 (42.5)	197 (42.5)	198 (42.8)	201 (43.3)	201 (43.3)	203 (43.9)	205 (44.4)
	전체	476 (100.0)	475 (100.0)	470 (100.0)	475 (100.0)	473 (100.0)	472 (100.0)	466 (100.0)	464 (100.0)	463 (100.0)	464 (100.0)	464 (100.0)	462 (100.0)	462 (100.0)
일반고		1,554	1,529	1,525	1,520	1,537	1,545	1,556	1,556	1,555	1,573	1,616	1,645	1,666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1~2023), 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재구성. 재인용: 김성남(2024). 전환 시대의 협약형 특성화고 정책 도입 및 과제, p. 11 〈표 1〉

중등 직업교육의 비중 감소와 함께, 특성화고 운영 성과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증가하면서 현재 특성화고는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김성남, 2024, 12-13).

라. 지역별 중등 직업교육 졸업자의 정착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 정착 현황을 파악한 최근 연구(최수현 외, 2023)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생(84%)의 동일 지역 정착률은 마이스터고 졸업생(56%)보다 높다. 특성화고 졸업생과 마이스터고 졸업생 모두 수도권, 특히 경기 지역의 정착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지역 이동성이 높고 주로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특성화고 졸업생은 고등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곳에서 대부분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수현 외, 2023, 1-4 이슈브리프 ; 류지은 외, 2022)

2. 지역별 인재양성 특징과 사례[21)]

가. 지역 산업 특성에 기반한 인재양성 유형

2000년대 이후 수도권과 지역 간 산업 및 직종별 인력수요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지역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으로 특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전문직과 단순노무직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산업수요가 양극화되고 있고, 제조업의 핵심 인력이라 할 수 있는 기능원과 조립 종사자의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편,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입 양상은 IT, 문화, 방송, 영상 등의 창의 산업 분야로 이동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백원영 외, 2024, 121-127).

지역인재 정책은 결국 인구유입과 인재양성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산업, 교육, 복지, 문화,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백원영 외(2024, 157)는 정주 여건을 기준으로 지역을 8개 클러스터로 유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정책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대구,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21) 해당 절의 주요 내용은 '백원영·이상준·주휘정 외(2024).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지역인재 정책 전략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요약·발췌하여 수록함.

〈표 2-5〉 유형화 분석 결과에 따른 지역별 특성

지역	특성
부산	• 지역 간 편차가 높은 편임. • 동구, 서구, 중구는 인구가 적고, 문화와 복지 영역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지만 교육과 산업 영역이 부족 • 강서구, 기장군, 동래구, 수영구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문화와 교육 영역이 부족하고 복지와 산업 영역은 발달 • 그 외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문화, 복지, 교육, 산업 영역이 전반적으로 고루 발달
대구·경북	• 전 지역에 걸쳐 상대적으로 고르게 인구 및 산업 인프라가 분포 • 달성군, 중구는 산업과 복지가 발달했지만 상대적으로 문화와 교육 인프라가 부족 • 군위군을 제외하고 문화, 복지, 교육, 산업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발달
대전	•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가 고르게 분포하고, 문화, 복지, 교육, 산업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광주·전남	• 인구가 적고 교육과 산업의 발전이 더딘 지역과 인구가 많고 문화·복지·교육·산업의 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양극화됨. • 목포시, 영암군, 나주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는 인구 대비 다른 요소들이 안정적으로 구성
경남	• 창원시는 인구 대비 문화, 복지, 교육, 산업 인프라가 부족 • 거제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는 인구가 많고 다른 영역의 인프라가 발전 • 그 외 지역은 인구가 적고 교육과 산업 인프라 발전이 더딤(클러스터 4, 클러스터 8).

자료: 백원영 외(2024),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지역인재 정책 전략 연구, 157이하 재구성.

나. 지역 산업 특성에 기반한 인재양성 사례

1) 부산광역시

부산은 신발, 기계부품, 조선 기자재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한계가 있어 청년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산은 외국인 근로자 활용과 함께 산업 고도화, 첨단산업 유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인재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청년 유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에 있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취업 연계를 강화에 두고 있다(백원영 외, 2024, 159).

부산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전략·신산업 중심의 직업계고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특화고 신설 등을 통해 교육·취업·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교육부가 주관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참여했으며,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목표로 부산늘봄학교, 인성영수캠프·위캔두 계절(주말)학교, 부산형 학력체인지, 별빛 도서관, 부산항공대(2024년 개교), 부산해군과학기술고(2025년 개교) 등 부산 지역 전략·신산업 중심의 직업계고 체제 개편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인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2)]

2) 대구·경북 지역

대구는 합계출산율 0.70명(동북지방통계청, 2024), 고령화지수 188.4(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으로 2024년 4월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23)] 대기업이 적고 소비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 AI, 헬스케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청년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및 연구 인프라를 강화하고, 핵심 전략으로 지역 주력 산업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백원영 외, 2024, 164).

대구·경북은 RISE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신라방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인재 유치에 나서는 한편, 합동채용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중심의 정주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장혜정 외, 2024, 37-38; 대구광역시청(2025), 9). 대구교육청은 직업계고, 기업, 대학 간 연계를 통해 스마트팩토리 인력양성, 현장체험학습 등 지역 맞춤형 인재육성체계를 구축 중이다[대구광역

22)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pen.go.kr/main) (검색일: 2025. 5. 5.)
23) 대구시청 홈페이지, URL: https://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aid=265763&bpage=1&stext= (검색일: 2024. 10. 31.).

시교육청 홈페이지(dge.go.kr/main) 2025. 5. 5. 검색].

한편, 경북은 'K-U(Kyeongbuk-University, Unique, yoUth, City for You)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각 시·군이 전략산업 중심으로 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기업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장혜정 외, 2024, 109-114).

[그림 2-15] K-U시티 수요 공급 모형



출처: 장혜정 외(2024),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도 일자리-인재육성 연계 방안, p. 109. 재구성.

경북교육청에서는 중등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산업단지와 전략적 협력 체결을 통해 기관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국가정책사업 공동 추진 및 업무 협력, 지역 산업 연계 우수 인재 양성 및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 지역경제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협력, 산하기관과의 유기적 연대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및 지역인재 양성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24]

24)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gbe.kr/main) (검색일: 2025. 5. 8.) 참고.

3) 대전광역시

대전은 세종으로의 인구 유출과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 그리고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지역산업 간 인력 미스매치로 인해 인재 유치와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청년 창업 지원, 역량 강화, 전략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대전시는 중앙정부 매칭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독립적인 인재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소규모 지원 사업 위주로 전략산업 중심의 고급인재 배출과 연계 일자리 마련 병행, 직업교육과 중간 인력의 양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백원영 외, 2024, 167-169).

이에 대전교육청은 직업계고 재구조화와 함께 협약형 특성화고를 추진 중이며, 대표적으로 대전여상은 데이터 분석 인재양성을 위한 학과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25] 또한 평생교육진흥계획에 따라 지자체·학교·기업이 협력하는 평생학습체계를 통해 지역 정주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26] 이는 고학력 청년층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수요자층을 포괄하는 지역인재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융합 콘텐츠 강좌, 창의체험 활동, 성인 평생교육, 소외계층 및 교육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된다.

4) 광주·전남

광주와 전남은 초고령화와 인구소멸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특히 군 단위에서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청년층 유출이 두드러진다. 특히, 전남은 순천과 광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상황이 심각하며, 청년층 유입을 위한 매력적

25)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dje.go.kr/main) (검색일: 2025. 5. 5.) 참고.
26) 해당 내용은 대전광역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을 요약·발췌함.

인 일자리 부족도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와 전남은 권역별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청년 및 외국인 인재 유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 인접 지역은 에너지 신산업을, 군 단위는 스마트농업 등 전통산업의 현대화를 통해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백원영 외, 2024, 170-173).

이를 위해 전남도교육청은 전남대 등과 함께 '지역혁신플랫폼' 협약을 맺고 고교-대학 간 교육 연계를 통해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 중이다. 광주·전남 권역의 15개 대학이 참여해 고교-대학 간 자원 교류와 프로그램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 지역 출신 인재의 정주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인재 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정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27]

5) 경상남도

경남은 청년층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대뿐 아니라 30대 청년도 부산을 거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실제로 도내 18개 시·군 중 11곳이 인구 감소 지역, 2곳은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소멸 위기 또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은 기계·조선업 중심의 전통 제조업에 기반한 산업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우주항공청 유치 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을 병행 중이지만, 여성 인력의 비선호와 청년층 유입이 제한적이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경남은 '경남형 광역비자' 등 외국인 인력수급 정책도 함께 검토하

27)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jne.go.kr/main) (검색일: 2025. 5. 5.) 참고.

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경남 인재 정책의 핵심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체계 구축이다. 이는 교육부의 RISE, 글로컬대학 30 등의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역 내 고숙련 인재가 학업-취업-정주로 이어지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백원영 외, 2024, 176-180).

결국 경남은 청년층의 유입을 확대하고 여성 및 외국인 인력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교육-정주 환경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복합적인 인재 정책을 펼쳐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3.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의 쟁점과 이슈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그리고 일자리 양상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중등 직업교육의 혁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동열 외(2021)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 실무 현장 중심의 유연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성장경로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성남 외(2022)는 중등 직업교육의 정책 이슈를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① 산업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직무역량 강화, ② 교육기관 간 역할 분담과 연계, ③ 비대면 교육 인프라 구축, ④ 지역사회 기반 협력적 직업교육체계 확립, ⑤ 평생직업교육 사각지대 해소, ⑥ 공공성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제안된 중장기 추진전략은 네 가지로, 첫째 직업교육훈련의 디지털화 추진, 둘째 현장성 강화, 셋째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넷째 권한과 책임 배분을 통한 협력적 직업교육훈련 거버넌스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마지막 전략은 중등 직업교육의 지역기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권한과 책임 배분을 통한 협력적 직업교육훈련 거버넌스 구축’ 전략에서는 국가 수준의 직업교육훈련 컨트롤타워 구축 및 운영, 지역기반의 인재양성체계 마련, 직업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운영역량 강화가 핵심 추진과제로 제안되었다. 이는 중등 직업교육이 국가 차원에서 조정되는 동시에 지역 주도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아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인재 정책은 대부분 지방대학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실제로 지역에 정주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계고 졸업생들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지역 정착률이 대졸자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등 직업교육 역시 지역인재양성정책의 핵심 축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구조 개선, 지자체 내 전담인력 확보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성남 외, 2022; 송낙현, 2023).

따라서 지역 특성과 인재 유출 구조를 반영한 중등 직업교육 중심의 인재정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과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지역인재에 대한 개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대육성법」 등에서 다루어졌는데, 지역인재 정책은 정주하는 인재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정책 대상과 수단을 협소하게 설정하고 있다. 결국 지역인재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실효성이 낮아서,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되어 왔다. 이는 인재양성정책의 우선순위가 현장의 수요보다는 중앙의 정책에 치우쳐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등 직업교육 관련 협력체계 측면에서 지역인자위(RSC)와 산업별인자위(ISC)는 인재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중등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와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통합에서는 그 역할의 연계가 미흡하다. 선행연구는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지역 중심의 협업체계가 필요하고, 지자체가 협력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책적으로는 2018년 평생직업교육 혁신 방안과 2023년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 직업교육 혁신지구, 교육발전특구 등의 중등 직업교육 강화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협약형 특성화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교육발전특구 등은 모두 지자체-교육청-기업-학교 간 협력을 통한 지역기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이 실질적으로 지역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며, 협력체계의 작동 실태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인력양성의 이슈는 15세 미만 연령이 전국적으로 연평균 2.4%씩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 전남, 경북은 3%대, 경남은 약 2.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자원 확보가 시급하다.

전체적으로 서울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경기, 경북, 경남, 충남은 서울보다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많다. 지역의 기능원 및 조작·조립 직종 인력의 감소와 제조업 인력의 감소는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가 줄어드는 탓도 있지만, 로봇 산업과 같이 과거 양산 기술인력에 초점을 맞춘 산업정책으로 인해 제조업 인건비 감소 외에 추가적인 기술인력의 확보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백원영 외, 2024, 123-124). 중등 직업교육 입학 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특성화고 학교 수와 학생 수가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학교 수 감소 폭에 비해 최근 들어 학생 수 및 충원율 등의 감소 폭이 더욱 크다. 이점을 고려할 때, 향후 많은 수의 특성화고가 정원 미달 및 폐교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중등 직업교육의 비중 감소와 함께, 특성화고 운영 성과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증가하면서 현재 특성화고는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김성남, 2024, 13).

이러한 여건에서 중등 직업교육은 지역인재양성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아야 한다. 단순히 대입 중심의 지방대학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실질적인 중등 직업교육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정책의 수혜 대상인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인구·산업·문화 등 복합적 요소를 연계한 통합적 인재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

제3장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사례조사 및 분석

제1절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사례 선정 기준
제2절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국내 사례
제3절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해외 사례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사례조사 및 분석

본 장에서는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의 운영 사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별 중등 직업교육기관의 특성화 여부에 대한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국내외 우수사례 및 주목할 사례를 선별하여 비교·분석한다. 국내 사례로는 대경권(대구, 경북)과 호남권(광주, 전남)의 중등 직업교육 현황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국외 사례로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대만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주요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 중등 직업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와 포럼을 활용한 심층면담의 결과를 제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절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사례 선정 기준

1. 선정 기준

가. 개요

앞서 제2장에서 논의된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운영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운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인구 감소에 따른 특성화고의 수와 학생 수 변화가 지역교육 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는 직업계고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며, 이는 곧 지역인재양성의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지역 산업구조와의 연계를 통해 중등 직업교육이 실질적인 인재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면 교육과 고용 간의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이는 졸업생의 취업률과 지역 정주율 저하로 나타난다.

셋째, 지역기반의 협력체계와 프로그램 참여율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중등 직업교육의 성과는 지자체, 교육청,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유기적 협력에 의해 결정되며, 협력 기반이 약하거나 지원 인식이 부족한 경우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된다.

1) 국내 사례 선정

국내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특성화고는 수도권 이외 지역 중 경북, 전남, 경남, 부산, 충남, 전북 등의 순으로 많이 분포하는데, 이는 상대적으

로 지역의 산업과 교육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2024년 기준으로, 경북(69.5%)과 대구(65.3%) 등 일부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직업계고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교육부(2024. 11. 6.)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이는 지역 내 산업구조와 직업교육이 일정 수준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동일 권역에서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정착률은 평균 69%로,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의 가능성을 나타내며, 특히 대경권은 82.5%로 매우 높은 반면, 호남권은 59%에 머물러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인다. 취업유지율 역시 경남(84.4%), 충북(84.1%), 대구(83.8%) 등에서 높게 나타나 지역 내 일자리 연계성과 교육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관계부처합동, 2023a. 08.; 한국교육개발원, 2024, 35).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는 대경권과 호남권을 지역 사례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지역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1〉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의 이슈와 쟁점 분석 및 고려 요인

구분		직업계고 학교 수	지역별 취업률	정착률	취업유지율
대경권	대구	20	65.3%	82.5%	83.3%
	경북	55	69%		-
호남권	광주	12	55.9%	59%	-
	전남	43	평균 이하		-

자료: 연구진 작성.

〈표 3-2〉 대경권·호남권 지역별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학교 유형

학교 유형 선정 지역		마이스터고 (개교)	특성화고 (개교)	직업교육 혁신지구 (개교)	협약형 특성화고 (개교)
대경권	대구	5	15	12	-
	경북	7	48	24	1
호남권	광주	2	10	10	-
	전남	4	39	-	-

자료: 연구진 작성.

2) 해외 사례 선정

해외 사례로서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대만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주요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만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중등 직업교육의 지역기반 운영이 체계적으로 정착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만 정부는 직업교육기관을 지역산업, 지역사회, 지역주민과의 연계 속에서 기능하는 '지역 특화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업교육의 발전 전략 또한 지역기반의 접근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이원화 직업교육체제를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국가 중 하나로, 고등학교 수준의 직업교육이 전체 교육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오부윤, 2019).

OECD는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가 고등학교 직업교육과 실제 일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을 결합함으로써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및 청년 실업률 완화에 효과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오스트리아의 이원적 직업교육은 학교기반 이론교육과 기업기반 실습교육의 병행을 원칙으로 하며, 견습 기간 동안 학생은 유급 실습생으로 고용되어 기업의 실무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단지 노동력 양성 차원을 넘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학생의 적응과 직업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OECD, 2025).

제2절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국내 사례

앞서 제2장에서 논의한 지역인재 정책의 방향성과 쟁점을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정책 사례를 검토한다. 특히 지역의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인재양성을 수행하고 있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중등 직업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이들 가운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직업교육 혁신지구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내 협약형 특성화고를 주요 정책 모델로 주목하였다.

중등 직업교육 정책은 지역 내 산업체와 교육기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직업교육이 단순한 진로교육을 넘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실질적 기반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실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현장과의 접점을 높이고 있고,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역 단위의 인재 성장경로를 체계화함으로써 중등단계부터의 정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 교육청, 산업체, 학교가 공동으로 협약을 맺고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직접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거버넌스형 모델이다.

이러한 제도들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로 교육과 산업수요의 연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등 직업교육기관의 사례를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대경권과 호남권의 중등 직업교육 기관들이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의 정책 취지를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우수하거나 주목할 만한 사례를 지역 단위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지역 중등 직업교육이 단순한 학교교육을 넘어 지역인재양성과 지역 정주,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1. 대경권(대구·경북)

대구·경북은 동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유사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과의 연계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대구는 고효율에너지 시스템, 디지털 헬스케어, 수송기기 및 기계소재 산업을, 경북은 디지털기기, 신소재, 융합섬유소재, 뷰티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민숙원 외, 2023, 53). 그러나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축적과 지역 내 고용은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 지역 기업이 고학력보다는 현장형 기술인재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중심의 인재 정책이 지속되어서 노동시장과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는 총 1,179명, 경북은 980명의 전문기술인력 부족이 보고되었는데, 고졸 및 전문학사 수준 인력에 대한 수요가 주를 이루고 있다(〈표 3-3〉 참고). 대체로 전자, 자동차 업종에서 채용 예상 인원이 많고, 화학 분야의 채용 예상 인원도 많다(산업통상자원부c, 2024, 100-101).

〈표 3-3〉 학력별·지역별 전문기술 부족 인원 및 부족률(2023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고졸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계	
	부족 인원	부족률	부족 인원	부족률	부족 인원	부족률	부족 인원	부족률	부족 인원	부족률	부족 인원	부족률
대구	1,179	3.7	213	1.9	420	3.2	81	4.6	16	2.8	1,908	3.3
경북	980	1.2	239	1.2	327	1.1	139	3.3	5	0.5	1,690	1.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4), 「2024년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조사보고서」, p.101 정리.

가. 지역별 개요

1) 대구 지역

대구에는 마이스터고 5개교, 특성화고 17개교가 있는데, 직업교육 혁신지구에 12개교가 포함되어 있다. 2024학년도 기준 마이스터고는 충원율 100%, 취업률 78.8%를 기록하였고, 특성화고는 충원율 94.45%, 취업률 60.8%로 나타났다. 마이스터고는 취업 중심의 진로지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성화고는 진학과 취업의 병행 진로 설계를 실시 중이다. 산업체와 연계한 일학습병행제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대구의 직업계고 입학 현황, 중도 이탈률 및 취업률은 마이스터고의 경우 입학 정원 522명에 522명이 입학하여 신입생 충원율은 100%이고, 중도 이탈률은 7.55%, 취업률은 78.8%이다. 특성화고는 입학 정원 3,586명에 3,388명이 입학하여 신입생 충원율 94.45%, 중도 이탈률 4.40%, 취업률 60.8%를 보이고 있다.

〈표 3-4〉 대구의 직업계고 입학 현황, 중도 이탈률 및 취업률

구분	입학 현황			중도 이탈률 (%)	취업률 (%)
	정원(명)	입학자 수(명)	충원율(%)		
마이스터고등학교	522	522	100.0	7.55	78.8
특성화고등학교	3,586	3,388	94.45	4.40	60.8

주: 입학 현황, 취업률은 2024학년도 기준, 중도 이탈률은 2023학년도 기준, 마이스터고 중도 이탈률은 전 학년 입학생 수 대비 학적 변동자 수를 이용하여 계산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4),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발표.

2) 경북 지역

경북에는 마이스터고 7개교, 특성화고 49개교가 있는데, 직업교육 혁신지구에 24개교가 포함되어 있다. 포항흥해공업고는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되어 2차 전지 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컨소시엄이 운영 중이다. 2024년도 기준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79.4%, 특성화고는 66.0%이며, 소규모 농어촌 학교의 경우 입학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의 직업계고 입학 현황, 중도 이탈률 및 취업률은 마이스터고의 경우 입학 정원 770명에 773명이 입학하여 신입생 충원율은 100%이고, 중도 이탈률은 9.90%, 취업률은 79.4%이다. 특성화고는 입학 정원 4,535명에 4,134명이 입학하여 신입생 충원율 91.2%, 중도 이탈률 4.17%, 취업률 66.0%를 보이고 있다. 경북은 지역 특성상 소규모 학교가 다수 존재하고,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직업계고의 경우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표 3-5〉 경북의 직업계고 입학 현황, 중도 이탈률 및 취업률

구분	입학 현황			중도 이탈률(%)	취업률 (%)
	정원(명)	입학자 수(명)	충원율(%)		
마이스터고등학교	770	773	100.0	9.90	79.4
특성화고등학교	4,535	4,134	91.2	4.17	66.0

주: 입학 현황, 취업률은 2024학년도 기준, 중도 이탈률은 2023학년도 기준, 마이스터고 중도 이탈률은 전 학년 입학생 수 대비 학적 변동자 수를 이용하여 계산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4),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발표.

마이스터고의 경우 명확한 취업 중심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특성화고는 진학·취업 교육이 혼재되어 진행되는 상황이다. 특히 취업 지원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 진학 관련 지원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과정 측면에서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를 반영한 편성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디지털 전환 대응은 미흡하다. 특성화고의 경우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산업체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유연성 부족으로 산업현장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경상북도 도청은 '경북 4대 교육대전환'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였다. 청년이 태어난 곳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정주하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을 비롯하여 기업체, 고교, 평생교육기관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4대 교육대전환으로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속도감을 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28)]

경북교육청에서는 2024학년도부터 동남아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여 이들이 졸업 후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장기적으로 정주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정책 수행 첫해인 2024학년도에 48명, 2차 연도인 2025학년도에 70명의 해외 유학생이 입학하여 교육과정을 이수 중이고, 향후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직업교육 혁신지구에서는 도청과 교육청 주도로 산업체, 대학,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첨단소재·스마트제조·2차 전지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경북형 산업체 채용 연계 직무교육과정'을 통해 채용협약, 직무교육, 현장실습, 후학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인재 성장경로 역시 고등학교-산업체-후학습-정주로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경력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포함한 농업계고 대상 정책도 운영 중이며, 조·석식비 지원 등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28) 경상북도청(2023.10.5.). 경북도, 4대 교육대전환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 열어간다! 에서 발췌함.

나. 교육과정 편성

1) 대구 지역

대구의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지역 및 국가 전략산업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타 지역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산업기반이 양호한 대구와 인접한 경북의 산업 여건을 반영해,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일부 특성화고도 학과 개편 및 재구조화를 통해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사립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분야로의 전환 시도가 활발하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군특성화고 등에서는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2) 경북 지역

경북의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지역 산업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지역 및 국가 전략산업과 인력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으나,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등 산업 환경 변화에는 아직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성화고는 전반적으로 현장 수요 반영이 미흡하지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나 군특성화고 등 일부 학교에서는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정부부처의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체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산학협의회 기능 확대와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 과정평가형자격 운영이

과도한 경우에는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수요 반영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다. 거버넌스

1) 대구 지역

대구는 지역인재양성과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19세 이상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및 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산업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직업계고를 포함한 중등 직업교육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구의 대표적인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이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대구광역시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며, 마이스터고 3개교, 특성화고 9개교를 포함한 총 12개 직업계고와 15개 산업체, 10개 대학, 2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참여 기관으로는 평화홀딩스, 이수페타시스, 메가젠임플란트, 대동, 경창산업 등의 산업체와 경북대, 영남이공대, 금오공과대 등 지역 내 주요 대학이 있다(〈표 3-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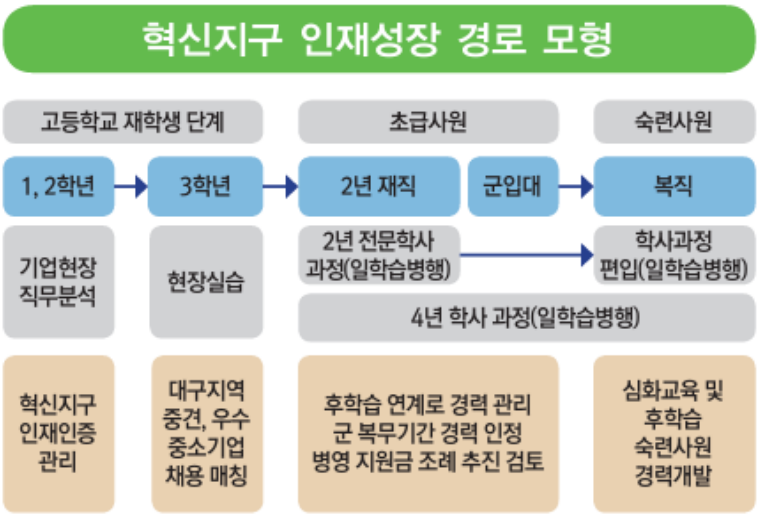
〈표 3-6〉 대구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참여 기관

구 분	참여 기관
운영 주체	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마이스터고 3개교, 특성화고 9개교 등 총 12개교
산업체	평화홀딩스, 평화오일씰, 평화산업, 피에프에스, 대동, 경창산업, 이수페타시스, 메가젠임플란트, 덴티스, 씨아이에스, 에스티아이, 진양오일씰, 베스툴, 현대기전, 대주기계 등 15개사
대학	경북대, 대구대, 경일대, 금오공과대, 대구사이버대, 영진전문대, 영남이공대, 계명문화대, 한국폴리텍VI대, 영진사이버대 등 10개교
유관기관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나노융합실용화센터

출처: 직업교육 혁신지구 대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ducluster/daegu, 검색일: 2025.5.2.),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안내 자료에서 발췌 정리.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Smart Factory 분야의 고숙련 사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 재학 중 기업 현장 직무 분석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후 현장실습과 지역 기업 취업(선취업)을 통해 실무경험을 축적하도록 한다. 이어 대학 후학습 과정(일학습병행제)을 통해 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군복무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 경력개발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은 숙련사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게 된다([그림 3-1] 참조).

[그림 3-1] 대구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인재 성장 경로 모형



출처: 직업교육 혁신지구 대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ducluster/daegu).

이와 같은 직업교육 혁신지구 모델은 중등 직업교육과 지역 산업의 연계, 그리고 학습-취업-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대구의 지역인재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와의 연결 지점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2) 경북 지역

경북의 인재 정책은 지자체, 교육청, 산업계, 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연계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사업은 첨단부품소재 가공, 스마트 제조, 차세대 배터리(2차 전지) 분야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다. 핵심은 공공기관과 산업체, 유관기

관, 대학, 직업계고가 연계된 교육 인프라를 통해 지역 산업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장기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성장경로를 제공하는 데 있다([그림 3-2] 참조).

[그림 3-2] 경북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추진체계도



출처: 경북 직업교육 혁신진구 지원센터. 직업교육 혁신지구 안내 자료. https://educluster.kr/pbl/introduce/bizIntro.do, (검색일: 2025. 5. 12.)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경북도청과 경북도교육청이 주도하며, 마이스터고 4개교, 특성화고 20개교 등 총 24개 직업계고와 산업체 13개사, 대학 9개교, 유관기관 6개가 참여하고 있다. 주요 산업체로는 아주스틸, 자화전자, 마더스제약, 성도하이텍 등이 있고, 참여 대학으로는 금오공대, 영남이공대, 경일대 등이 있다(〈표 3-7〉 참고).

〈표 3-7〉 경북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참여 기관

구 분	참여 기관
운영 주체	경상북도청,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계고	마이스터고 4개교, 특성화고 20개교 등 총 24개교
산업체	아주스틸㈜, 자화전자㈜, ㈜PNT, 세원물산, 삼광윈테크, 플라스틱옴니엄, 마더스제약, 태양기술개발, 삼양컴텍, 주식회사 아이큐랩, 성도하이텍(주), 신일인텍(주), 아주엠씨엠 등 13개사(2024년 121명 채용)
대학	경일대학교, 영진전문대, 영남이공대, 대구보건대, 구미대학교, 경운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등 9개교
유관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경북본부, 경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청

출처: 직업교육 혁신진구 경북지원센터 홈페이지 직업교육 혁신지구 안내 자료에서 발췌 정리. https://educluster.kr/pbl/center/introduce/gyeongbukIntro.do 검색일: 2025. 5. 12.

경북은 농업계고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화에 대응한 청년 후계 농업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연간 5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포함하며, 농업교육과 지역 정주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또 자영농과 해양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급식비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며, 도청과 교육청이 50:50으로 조·석식비를 분담하고 있다.

이처럼 경북은 중등 직업교육과 산업계 및 지역사회 간 연계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다각도로 수행하고 있다.

라. 기타

1) 대구 지역

대구는 직업계고 졸업생이 지역 내에서 취업하고 장기적으로 정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산업체-대학-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는 19세 이상 청년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인재 정책이 비

교적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졸 인력을 위한 졸업 후 경력개발 및 취업 연계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대구시교육청은 2025년 4월 23일, '미래직업교육센터'를 완공하였다. 이 센터는 스마트 팩토리 및 인공지능 체험관, 4차산업 기술 체험관, 진로 탐색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업계고 학점제 공동교육과정과 실전형 진로설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덕기, 2025. 4. 23.).

대구시는 미래모빌리티, 로봇, 헬스케어, 반도체, ABB(AI, Big Data, Blockchain)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섬유, 기계·금속가공, 자동차 부품, 화학 등 전통 주력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도 병행하여, 산업 전반의 인력수요에 대응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2) 경북 지역

경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 지자체, 산업체, 학교 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과 기능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정주 인력 육성 모델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는 지역인재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2차 전지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경북도교육청, 포항시청, 지역 대학, 관련 산업 협회, 기업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실질적인 산학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포항시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로도 선정되어 3년간 10억 5천만 원의 예

산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2차 전지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현장실습 및 후학습(일학습병행) 지원, 우수 학생 모집 홍보, 교원 연수 등 다방면의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29].

2. 호남권(광주/전남)

광주·전남 지역은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이 겪고 있듯이 인구 감소, 고령화, 인재 유출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전재식 외, 2022, 114).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에서도 농업 및 광업 중심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남의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은 22.4%로 전국 평균 5.3%보다 매우 높다. 반면, 광주는 서비스업 취업자 비율이 42.8%로 높고, 농업은 1.6%에 불과하여 도시형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비율의 경우, 전남은 9.8%, 광주는 13.4%로 나타났는데 중화학공업과 장치산업 중심인 동부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생활 밀착형 산업 비율은 전국과 유사하거나 소폭 감소했으며,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 제3차 산업의 비율은 두 지역 모두 증가하였다(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29)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317 (검색일: 2025. 12. 18)

〈표 3-8〉 광주·전남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 추이

(단위: %, %p)

구분	전국			광주·전남			광주			전남		
	2013년	2021년	증감	2013년	2021년	증감	2013년	2021년	증감	2013년	2021년	증감
계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농업, 임업 및 어업	6.0	5.3	-0.7	16.4	13.5	-3.0	3.3	1.6	-1.7	26.3	22.4	-3.9
광·제조업	17.1	16.1	-1.0	11.7	11.4	-0.3	14.9	13.4	-1.5	9.3	9.8	0.5
전기·운수·통신·금융	12.2	12.3	0.1	10.1	9.0	-1.1	10.6	10.3	-0.3	9.7	8.0	-1.7
건설업	7.0	7.7	0.7	8.7	8.6	-0.1	9.5	9.5	0.0	8.1	7.9	-0.2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22.4	20.0	-2.4	20.8	19.2	-1.5	23.1	22.3	-0.8	19.0	17.0	-2.0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35.3	38.6	3.3	32.4	38.2	5.8	38.7	42.8	4.1	27.7	34.7	7.0

주: 한국산업분류코드 10차 개정(2017년) 기준 조사로 2013년부터 비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광주·전남의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며,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적·물적 자원 집중은 해당 지역의 구조적 낙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예컨대, 2020년 기준 수도권의 경제 비율은 52.5%로, 이미 인구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서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전남의 GRDP 비율은 1985년 7.2%에서 2020년 6.2%로 하락하였다. 지역 경제의 지속적 약화가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산업 고도화가 미진한 상태에서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는 현상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전재식 외, 2022, 114).

전남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가운데, 권역별로 서로 다른 산업 특색을 보이고 있다. 동부권(여수, 순천, 광양 등)은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 등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철강, 금속소재 및 부품산업 등 중화학공업과 장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남 전체 취업자 수와 GRDP의 상당 부분이 이 지

역에 집중된다. 한편, 서부권(영암, 목포 등)은 대불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에 기반한 산업구조가 주를 이루며, 광주 근교권(나주, 화순 등)과 중남부권(강진, 장흥, 완도 등)은 농림어업의 비율이 높고, 소규모 농공단지 기반의 농식품 가공업이 특화되어 있다. 이는 전남의 산업이 지역별 특성에 따라 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전재식 외, 2022, 106).

광주와 전남은 전국에서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의 총 부족 인원은 2,903명, 부족률은 7.5%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고졸 인력 부족은 1,336명(5.7%), 전문학사 이상에서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부족률을 보이고 있어, 지역 산업 기반에 필수적인 실무 인력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에도 고졸 인력 부족 556명, 전체 부족률 2.5%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석사 이상 고급인력보다는 고졸~학사 수준의 실무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장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연계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교육훈련 기반 및 연계 고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24c 101).

〈표 3-9〉 광주·전남의 학력별·지역별 부족 인원 및 부족률(2023년 기준)

구분	고졸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계	
	부족 인원	부족 률	부족 인원	부족 률	부족 인원	부족 률	부족 인원	부족 률	부족 인원	부족 률	부족 인원	부족 률
광주	556	3.5	91	1.5	93	1.1	40	3.6	0	0.0	779	2.5
전남	1,336	5.7	540	8.2	808	10.9	202	25.2	18	4.3	2,903	7.5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24c), 2024년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조사보고서, p. 101 정리.

가. 지역별 개요

1) 광주 지역

광주에서는 총 13개의 직업계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마이스터고가 2개교, 나머지 11개교가 특성화고이다. 특히 특성화고는 공립과 사립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사립 특성화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광주광역시교육청, 2025).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분류되는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와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가 있으며, 두 학교 모두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성화고는 전통적인 공업계열부터 상업, 과학기술, 여상계열까지 다양한 분야로 운영 중이다.

광주 직업계고의 신입생 충원율은 2022년까지 다소 낮은 학교도 있었으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 학교에서 100% 충원이 이루어져 전반적으로 안정된 학생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광주광역시교육청, 2025).

한편, 2023년도 기준으로 특성화고의 학업 중단율은 5.4%이고, 중단자 수는 303명이다.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방향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광주광역시교육청, 2025a).

광주 직업계고의 2024년 기준 취업률은 55.9%로 전국 평균(55.3%)과 유사한 수준이고, 연도별 취업률 현황은 〈표 3-10〉과 같다.

〈표 3-10〉 광주의 관내 직업계고 취업률 현황

구분/졸업연도		학교수	졸업자	취업자 현황		진학자 현황		입대자	제외인정자	미취업자
				취업자	취업률	진학자	진학률			
광주	2020	13	2,859	691	47.2	1,313	45.9	65	18	772
	2021	13	2,482	637	52.3	1,194	48.1	42	28	581
	2022	13	2,444	693	57.7	1,172	48.0	41	29	509
	2023	13	2,110	546	53.0	1,029	48.8	27	23	485
	2024	13	1,912	447	55.9	1,028	53.8	45	40	352
전국	2020	576	89,998	24,938	50.7	38,215	42.5	1,585	970	24,920
	2021	581	78,994	22,583	55.4	35,529	45.0	1,809	862	18,211
	2022	579	76,760	22,709	57.8	34,686	45.2	1,873	942	16,550
	2023	578	71,591	19,526	55.7	33,621	47.0	1,940	971	15,533
	2024	577	63,005	16,588	55.3	30,216	48.0	1,716	1,059	13,426

주: 1) 교육부 취업률 공식 조사는 2020년 졸업생부터 실시함.
2) 교육부 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100%
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2025a).

이는 최근 수년간 전국적 감소세와 비슷한 경향 속에서도 광주 지역의 취업 지원과 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이 일정 성과를 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광주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최근 5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도 대체로 5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졸업생이 미취업 상태에 놓여 있어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취업 연계 방안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광주광역시교육청, 2025a).

광주는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기반의 진로설계와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취업동아리에 소속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뽀짝샘'이라는 진로 컨설턴트를 매칭하여 학생 1인당 연간 4~6회의 맞춤형 진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학년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진행된다.

1학년: 기초 직무교육, 정서함양교육, 참여 기업 및 대학 탐방

2학년: 직무역량 향상교육, 기업체 체험, 대학 학점 선이수 프로그램

3학년: 맞춤형 직무교육, 기업현장실습, 취업 매칭, 대학 학점 선이수 연계

이러한 단계별 경로 설정을 통해 재학 중 성장경로를 명확히 하고, 학생의 진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전남 지역

전남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서 22개 모든 기초지자체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11개 시·군은 소멸고위험, 7개 시·군은 소멸위험 진입, 나머지 4개는 소멸주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인구구조는 중등교육의 수요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직업계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표 3-11〉 참고).

〈표 3-11〉 전남의 지역 소멸위험 현황

구분	소멸위험		소멸주의 (4개 시·군)
	소멸고위험(11개 시·군)	소멸위험 진입(7개 시·군)	
지역	고흥군, 구례군, 강진군, 곡성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함평군	나주시, 담양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장성군, 화순군	광양시, 무안군, 목포시, 순천시

자료: 전라남도청(2025). 2024년도 전남교육 통계연보.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남 직업계고의 학교 수, 학급 수, 입학 정원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5,562명이던 입학 정원은 2024년에는 4,073명으로 약 26.8% 감소하였고,

이와 함께 입학생 수는 4,714명에서 3,545명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충원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85~89%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전라남도청, 2025).

한편, 전체 고등학교 입학생 대비 직업계고 입학생 비율은 감소세에 있다. 2018년에는 27.6%였던 비율이 2024년에는 23.2%로 낮아졌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가 일반고와 비교해 직업계고에 더 큰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표 3-12〉 참고).

〈표 3-12〉 전남의 중학교 졸업생 및 고등학교 입학생 수(2018~2024)

(단위: 명, %)

연도	전남 지역 중학교 졸업생 수	전남 지역 고등학교 입학생 수	일반고 등 입학생 수	직업계고 입학생 수	직업계고 입학생 비율
2018	16,805	17,077	12,363	4,714	27.6
2019	16,513	16,744	12,270	4,474	26.7
2020	15,824	15,927	11,778	4,149	26.1
2021	14,510	14,547	10,962	3,585	24.6
2022	14,937	14,962	11,387	3,575	23.9
2023	16,292	16,287	12,360	3,927	24.1
2024	15,309	15,265	11,720	3,545	23.2

자료: 전라남도청(2025), 2024 전남교육 통계연보.

과거 마이스터고 도입(2008년)과 선취업·후진학 정책은 직업계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어느 정도 확산시켰지만, 최근 변화된 지역 산업 및 인구구조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전남처럼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서는 직업계고를 통한 '정주형 인재양성'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의 긴밀한 연계 및 협약형 특성화고 모델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즉, 단순한 취업 기능 중심의 직업교육을 넘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산업구조와 연계할 수 있는 직업계고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러한 대응은 인구소멸에 대한 정책적 해법이자, 직업계고 존립과 발전을 위한 구조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나. 교육과정 편성

1) 광주 지역

광주의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지역 산업의 특성과 전략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광주는 북구, 서구, 동구, 남구, 광산구를 중심으로 직업계고가 분포하고 있다. 각 학교는 해당 지역 산업에 특화된 학과를 갖추고 있다. 이들 학과는 주로 AI·데이터, 광융합·가전, 의료·헬스케어, 스마트뿌리, 반도체, 모빌리티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2024년 광주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를 보면,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종사자 대비 산업기술인력 비율이 70%를 넘는 경우도 존재하며, 다수 전략산업에서 지속적인 채용 수요가 예측되고 있다. 특히 AI·데이터 산업에서는 산업기술인력 비율이 71.5%에 달하며, 스마트뿌리(52.8%), 보건행정(79.9%) 등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광주광역시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2024).

〈표 3-13〉 광주의 지역 전략산업 인력 현황

(단위: 명, %)

산업 분야	종사자 수 (명)	산업 기술인력 (명)	종사자 대비 산업기술인력 비율 (%)	향후 채용 인력(명)		
				2025	2026	2027
AI·데이터	3,338	2,386	71.5%	309	199	236
광융합·가전	7,051	2,990	42.4%	267	187	199
메디헬스케어	2,780	1,106	39.8%	109	80	74
모빌리티	11,666	4,509	38.6%	405	128	89
문화콘텐츠	1,854	1,051	56.7%	261	60	60
반도체	484	284	58.6%	32	38	52
스마트뿌리	6,099	3,219	52.8%	369	179	166
에너지	1,645	888	54%	69	30	30
관광	1,947	971	49.8%	185	179	179
보건행정(서비스)	27,383	21,890	79.9%	1,280	1,005	988
식품음식	4,367	3,067	70.2%	168	112	143

주: 광주광역시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광주광역시 LINC 3.0 사업협의회 자료 일부를 표로 정리 (2024년 기준 자료).

광주의 직업계고는 이러한 산업구조와 수요에 발맞춰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학과와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학과별로 해당 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미래형 운송기기, 에너지, AI 융복합, 의료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등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운영 중이다. 특히 직업계고 전문교과에서 선택과목 비율이 33.7%에 달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노동인권 관련 교육과정이 모든 학교의 전 학과에서 편성·운영되고 있다. '노동인권'(2·3학년),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1학년)을 교과로 지정하여 교육하고 있고, 노동인권 교사 동아리 및 학생 동아리를 통해 생활 속 인권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광주는 다양한 지역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직업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거버넌스 형태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이 사업은 광주 관내 54개 학과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동아리' 중심의 취업역량 강화 활동을 제공한다. 2023년 60개, 2024년 40개 동아리가 운영되었으며,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대학 7개교, 유관기관 13개, 참여 기업 143개가 협력 중이다.
- 교육발전특구 참여: 광주 지자체와 협력하여 혁신지구의 고도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운영 등을 통해 직업교육의 질적 경쟁력 제고와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을 위한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 직업교육지원센터 구축: 첨단 분야 실무교육 중심의 직업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직업계고 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중학생 진로체험 행사, 교원 연수, 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 지원 등 미래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중등 직업교육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2) 전남 지역

전남도교육청은 직업계고를 지속가능한 교육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정평가형자격의 도입을 통해 현장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체계를 연계하고, 1인 1자격(산업기사 이상) 취득을 목표로 하며, 유사 분야 자격까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커리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 과정은 실무 기반,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실현되며, 학생 주도 수업과 산업현장 기반 과제가 결합된 형태이다.

[그림 3-3] 전남도교육청 프로젝트 중심 교육과정(안)



자료: 전남도교육청(2025). 전남도교육청 내부자료.

전남 직업계고에서는 지역 수요 맞춤형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모델은 '1팀 1기업' 체제를 기본 단위로 하여, 학생·교원·산업체가 함께 과제를 도출하고, 실습 및 평가까지 함께 수행하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기술교육이 아닌, 실제 산업현장 수요와 유사한 문제해결능력 및 실천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특히, 교원과 산학겸임교사가 협업하여 실습수업을 공동 운영하는 코티칭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다. 거버넌스

1) 광주 지역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의 정주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광주광역시청)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핵심 협력 모델인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에서는 교육청 부교육감과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이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정책 기획 및

운영에서 양 기관이 실질적인 의사결정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행정적 측면에서도 혁신지구지원센터가 시청 1층에 위치하여 상시적인 소통과 실무 협력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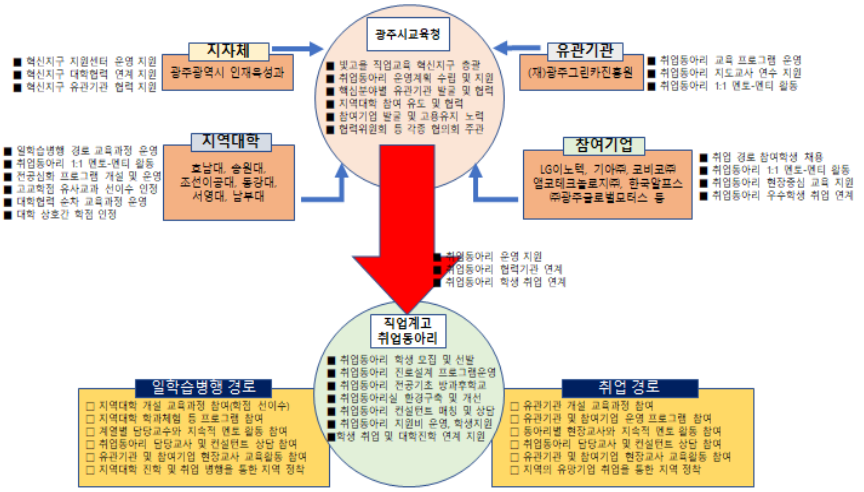
또한 광주광역시는 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정주지원금(5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취업연계장려금과 별개로 제공되는 실질적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단순한 취업을 넘어 장기적인 지역 정주와 인재 확보로 이어지는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을 위해 광주는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실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협력은 단순한 MOU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수행 단위로 작동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기능에 따라 취업연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기획, 정책 자문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7개 지역 대학(호남대, 송원대, 동강대, 조선이공대, 서영대, 남부대, 광주대) 및 13개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후학습(대학 진학), 공동교육과정, 진로설계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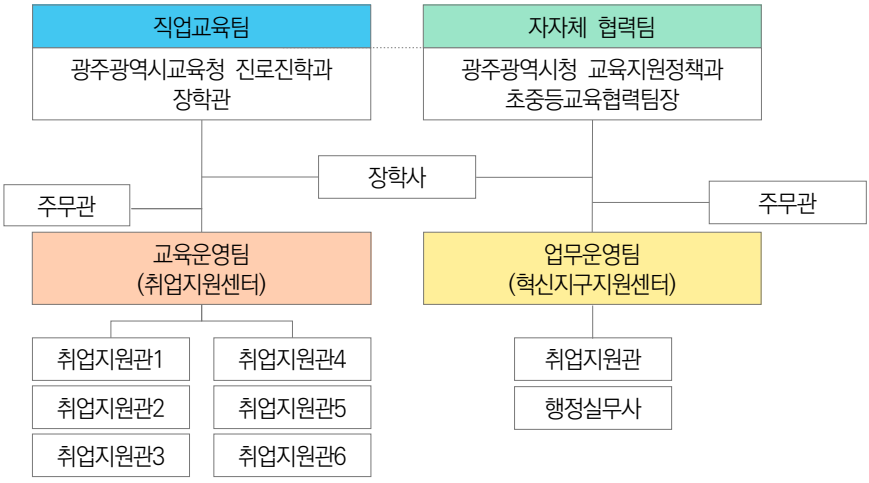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 체계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장학관과 직업교육팀,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과 진로설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각의 취업지원관이 지역 학교와의 연결고리를 맡고 있다. 반면 광주광역시청은 초중등교육협력팀과 지자체 협력팀, 업무운영팀(혁신지구지원센터)을 통해 행정 지원 및 정책기획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분업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배분은 협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그림 3-4] 광주의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거버넌스 구축 방향



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2025b).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계획서(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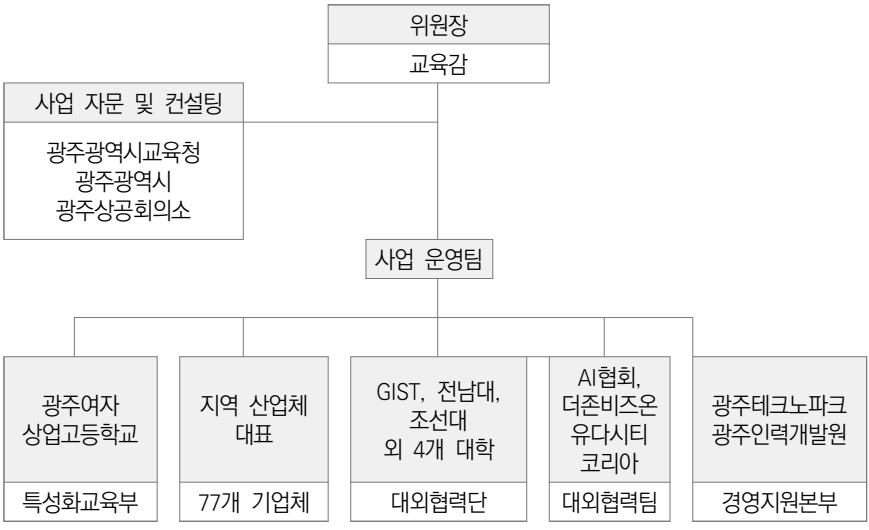
[그림 3-5] 광주의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 협력체계도



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2025b).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계획서(내부자료).

이와 별개로, 2025년부터는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협약형 특성화고 거버넌스도 운영되고 있다. 이 거버넌스는 광주시교육청, 광주광역시, 광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77개 기업체, GIST·전남대·조선대 등 7개 대학, AI협회, 광주테크노파크, 특성화교육부 등으로 구성된 다층적 네트워크 체계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AI·데이터, 경영정보, 콘텐츠 산업 등 전략산업 분야와의 인력양성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그림 3-6]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거버넌스 구축(광주여상 중심으로)



자료: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2025).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서 내부자료.

2) 전남 지역

전남은 청년 인구의 지속적 유출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지역 회복을 지역인재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일자리·학업 등의 사유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을 지역에 정주하도록 유도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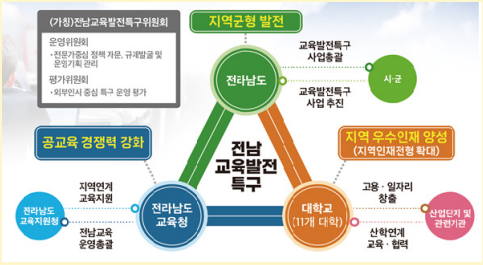
있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 아래, 지속가능한 미래학교를 설계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교육 대전환 실천과제 26'으로 '돌봄에서 취업까지 지원하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자치 모델 창출→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2)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살아가는 시스템 정착→교육-진학-취업-정주로 이어지는 경로 정비이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권역별로 특화된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 교육기반 투자에서 나아가, 문화·거주 인프라와 함께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지역 통합 개발 전략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3-7] 전남 교육발전특구 추진체계

【교육발전특구 추진체계】



【전남 발전 전략】
신해양시대 한반도 중심축, 세계적인 관광문화중심지, 에너지 대전환의 글로벌 거점을 목표로 권역별 차별화된 특화 추진

【교육발전특구 지정 산업 현황】
- 광양: 2차 전지, 신소재산업 등 K-첨단산업
- 목포·무안·신안: 해상풍력, 관광·먹거리, 항공특화
- 나주: 공공기관 및 에너지밸리
- 영암·강진: 친환경조선, 자동차튜닝, 농생명산업

자료: 전남도교육청(2025). 전남도교육청 내부자료.

라. 기타

1) 광주 지역[30]

광주시교육청은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의 입학, 졸업, 취업,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지역인재양성 생태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단위학교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의 교육행정 구조에서는 지자체 및 지역 유관기관의 실질적 참여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평가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력을 구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는 “교육은 교육청과 학교가 전담한다.”라는 기존 행정 인식의 잔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직업교육을 단순한 취업 준비 과정이 아니라 지역 발전과 연계된 전략적 인재육성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년 인재 지원 정책의 범주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정책이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직업계고 재학생과 같은 10대 후반 청소년의 취업과 정주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배려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지자체의 청년 인재 지원 정책에 20세 미만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직업계고 교육 인프라에 대한 현실적 인식도 언급되었다. 광주는 전국적인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수도권 대학이나 산업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 정주와 장기적 성장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교

30) 광주광역시 교육청 관계자 면담(2025. 5. 29.)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육청은 단순 고졸 취업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중간기술인력 양성 모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대학들이 지역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기반으로, 산학연계를 넘어선 교육-정책-산업의 융합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반영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최근 정부의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특별회계 축소가 중등 직업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들은 직업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유관기관, 대학, 기업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자체적인 인재양성 방안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광주의 직업교육이 외부 자원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통한 지역인재양성정책이 단순한 학교 단위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 공동체 전체의 협력 기반 위에서 정주 기반 확립, 정책적 범위 확대, 재정 다변화, 진로 연계 다양화가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전남 지역

전남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산업구조 변화라는 이중의 압력 속에서, 지역 산업과 연계한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운영 모델의 고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지역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 개인의 진로성과와 더불어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전남형 직업계고 운영 모델은 신입생 유치 단계부터 교육과정 운영, 진로지도에 이르기까지 학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학과 체험 활동을 체계화함으로써 직업계고 진학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특히, 산업체가 요구하는 고도화된 직무역량 교육을 학교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타 학교와의 협업을 통한 '브릿지 교육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융복합형 기술인재 양성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연계 모형은 특정 학과의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지역 기업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선취업·후진학 경로 기반의 고숙련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 산업체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직업계고-기업-대학 간 연계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실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기반 후학습체계와 결합하여 학생들이 장기적인 경력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특히, 학교 밖 학습장을 활용한 실습형 교육과정, 지역 대학과의 연계 수업,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직무능력 향상 경로를 제공하는 체계는 지역 정주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적 전략은 전남도교육청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남글로텍학교' 사업에서도 확인된다. 으뜸고등학교와 상생고등학교라는 이원적 유형을 통해 각각 '세계무대 진출형 고숙련 인재'와 '산학협력형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 학교는 과정평가형자격과 프로젝트 중심 수업을 통해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산업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졸업 이후 취업 및 정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직업계고의 질적 전환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남의 협약형 특성화고 사례로 제시된 나주공업고등학교와 목포성신고등학교는 각각 에너지 신산업과 남도미식 산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나주공업고는 전기, 기계, 생산제어 분야의 전문교육을 통해 스마트공장, 로봇,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목포성신고는 식품가공 및 조리 분야에서 남도 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자산을 산업화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두 학교 모두 협약기관으로서 지역 대학, 산업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업-후학습-정주로 이어지는 통합적 인재 육성체계를 실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남도교육청은 직업계고의 역할을 단순한 취업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재 양성의 허브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제3절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해외 사례

본 절에서는 해외 사례로서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대만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주요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만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중등 직업교육의 지역기반 운영이 체계적으로 정착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만 정부는 직업교육기관을 지역산업, 지역사회, 지역주민과의 연계 속에서 기능하는 '지역 특화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업교육의 발전 전략 또한 지역기반의 접근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있다. 특히 대만은 직업학교와 산업계, 지역 행정체계 간 협업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직업교육기관의 운영 및 평가 지표에 산학연관 협력활동을 핵심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오부윤, 2018, 115-129; 오부윤, 2019). 이는 단순한 실무능력 배양을 넘어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공헌까지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오부윤, 2019).

이러한 방향성은 대만의 직업학교들이 단지 교육기관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전략산업의 기술혁신과 인력수급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정부는 각 지역의 산업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 커리큘럼을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실습 및 현장견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졸업 전부터 지역 산업현장에 통합되어 직무 적응력을 키울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지역 정주율과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오부윤, 2018).[31]

31) 대만 직업교육의 추진 방향과 기대효과 등은 「기술및직업교육법」(技術及職業教育法, 민국104년 1월 14일 공표, 민국108년 12월 31일 일부 수정)과 「기술및직업교육정책강령」(技術及職業教育政策綱領,민국106년 3월 2일 제정, 민국114년 3월 10일 수정)에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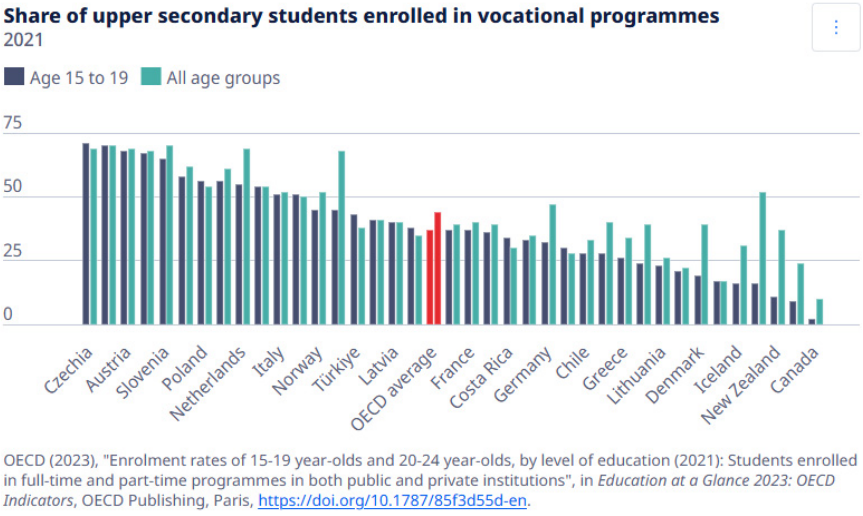
오스트리아는 유럽 내에서 이원적 직업교육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국가 중 하나로, 고등학교 수준의 직업교육이 전체 교육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EUROSTAT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오스트리아 고등학교 학생의 약 69%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EU) 전체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32] 특히 오스트리아에서는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의 대부분이 기업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받는데, 이러한 과정은 대체로 '견습(Apprenticeship)' 형태로 운영된다.

OECD는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가 고등학교 직업교육과 실제 일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을 결합함으로써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및 청년 실업률 완화에 효과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VET 참여 비율이 70%를 넘는 체코, 핀란드, 슬로베니아 등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는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고, 이들이 학업 종료와 동시에 산업현장에 무리 없이 진입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OECD, 2025).

오스트리아의 이원적 직업교육은 학교 기반 이론교육과 기업 기반 실습교육의 병행을 원칙으로 하며, 견습기간에 학생은 유급 실습생으로 고용되어 기업의 실무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단지 노동력 양성 차원을 넘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학생의 적응과 직업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Bundesministerium fur Arbeit und Wirtschaft, 2024).

32) EU 27개국 전체: 49%. Institut für Bildungsforschung der Wirtschaft(2024). Lehrlingsausbildung im Überblick 2024. Strukturdaten, Trends und Perspektiven, ibw-Forschungsbericht Nr. 221, Wien 2024, p. 6.

[그림 3-8] 국가별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출처: OECD(2025). https://www.oecd.org/en/topics/vocational-education-and-training-vet.html, 검색일: 2025. 01. 21.

1. 대만[33]

가. 대만 직업교육의 개요

대만(臺灣)은 1980년대 이래 대한민국,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며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한 대표적인 동아시아 국가이다. 발표에 의하면 2024년 말 기준 대만은 연평균 4.0%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5천달러를 기록하였다(中華民國統計資訊網).[34] 특히 대만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적 위상을 점하

33) 본 절의 내용은 인덕대학교 오부윤 교수가 작성한 것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함.
34) 中華民國統計資訊網, www.stat.gov.tw (검색일: 2025.5.7.)

고 있는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의 본거지로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눈부신 경제 성과의 배후에는 직업교육체제의 안정적 발전과 전략적 활용이라는 국가적 교육 투자의 저력이 자리하고 있다.

대만은 1949년 국민당 정부가 본토에서 이주한 직후부터 국가 경제발전과 직업교육의 병행 추진을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직업교육을 단순한 노동력 재생산의 수단으로 한정하기보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자산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교육정책의 수립과 경제정책의 수립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추진되어 왔다.[35]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지역 산업수요 및 노동시장 구조에 근거하여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기관의 학과구조를 조정하고, 각 지역의 기술계 고등학교 및 기술직업대학(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의 역할 분담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체계적 연계성은 직업교육의 사회적 위상을 끌어올리고, 동시에 지역균형 발전과 인재 정주를 유도하는 효과를 함께 창출하였다(張嘉琪 외, 2021).

현재 대만은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체계를 일반교육(Academic Track)과 직업교육(Vocational Track)의 Two-Track 체제로 구분하고 있으며, 양 체계 간 수직 이동과 수평 통로를 모두 보장하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 이수자는 일반대학에 준하는 4년제 기술대학이나 과학기술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이후 석사 및 박사 학위까지도 취득할 수 있다(오부윤, 2018, 116)

정부는 두 교육 트랙 간 자원 배분과 정책 지원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업교육은 단순 기능인 양성의 경계를 넘어

35) 대만 교육부(2016), 105년 중화민국 기술 및 직업 교육 소개-일류 직업인 양성의 길(105年中華民國技術及職業教育簡介-一流職人養成之路), 민국105년(2016), pp. 6-8.

‘기술인재로서의 자기실현 경로’라는 사회적 인식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노벨상을 타려면 일반대학, 기술인재로 성장하려면 기술직업대학”이라는 문구는 대만 사회에서 이원화 체계교육의 위상과 사회적 수용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만 행정원은 2015년 1월 「기술 및 직업교육법」(技術及職業教育法, 이하 「직업교육법」)을 공포하였다.[36] 이 법령은 정부 주도 직업교육의 공공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기관의 협업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하였다. 그 후 정부는 「직업교육법」의 이념과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직업교육의 실천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는 「기술 및 직업교육정책강령」(技術及職業教育政策綱領, 이하 「정책강령」)을 2017년 3월 제정·공포하면서 직업교육의 목적성, 정합성, 효과성을 강화하고 있다.[37]

이로써 대만의 직업교육은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사회적 신뢰성 확보, 교육의 질적 제고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대만 교육부의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 평가에는 학생, 교원, 교육 실현, 산학협력, 지역사회 연계 등 모든 분야에서 제도화, 표준화를 구비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학교 평가에서는 교육과정 개발과 실질 운영을 중요시하고 기술현장밀착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산업 발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강조함으로써 지역의 학교와 정부, 기업 간의 협력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대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노령화 사회의 가속화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 관계기관과 산업체, 교육 현장에서는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張仁家·陳琨義.

36) 대만 행정원(2015), 「기술 및 직업교육법」(技術及職業教育法), 민국104년 1월 14일 제정, 민국108년 12월 31일 일부 수정.

37) 대만 행정원(2025). 技術及職業教育政策綱領(기술 및 직업교육 정책강령), 민국106년 3월 2일 제정, 민국114년 3월 10일 5차 수정.

2017). 특히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령인구 감소와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의 개혁을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025년 3월 행정원이 발표한 「직업교육강령」에서는 직업교육의 비전(Vision)과 교육 목표, 중점 발전 과제 등의 방향을 전면 수정하였다. 비전에 '스마트디지털 및 지속가능한 기술직업교육'이 새로 수립되었고, 목표에는 직업교육의 사회자원 확대 및 새로운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 가속화, 그리고 중점 발전 과제에는 사회자원을 결합한 기술교육 확대 추진,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산업 전 영역을 연결하는 직업기술 교육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 새롭게 첨가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직업교육을 단순한 교육적 범주에서 벗어나, 전 국민 대상의 평생교육 및 지역재생의 핵심 수단으로까지 인식하고 있다. 대만 교육부는 각 지역의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을 포함한 직업교육 거점 학교를 선정, 지원하면서 지역의 미진학 청·장년층, 은퇴자, 경력 단절자 등을 대상으로 평생기술교육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직업교육 거점기관은 지·산·학·연이 공동으로 개발한 교육과정, 교사 연수, 직업 훈련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장소로 지역의 직업교육 허브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경제력 쇠퇴와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지역 산업 기술 인재양성 및 정착 지원을 통한 지역 산업 발전 및 지역재생 기반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환영받고 있다.

1) 대만 기술직업교육의 발전 특징

① 범정부 차원의 기술직업교육 정책

대만의 직업교육은 교육부 단독의 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전 부처가 협력

하여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2015년 공포된 「기술 및 직업교육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해당 법령은 직업교육의 체계화 및 법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근간이 된다.

해당 법 제2장 제4조에 따르면, 기술직업교육은 국가 산업 발전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거시적 정책체계에 따라 기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원은 교육부, 노동부, 경제부, 국가발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기술직업교육심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이 심의회는 최소 2년마다 발전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강령으로 공포하게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은 단순한 교육 행정의 범주를 넘어 산업정책, 노동정책,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기획되고 있다.

제5조에서는 중앙 주관기관의 직업교육 관련 통계·조사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 기관을 통해 통계를 조사하며, 노동부와 경제부 등은 산업별 인재수요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기반으로 인력수급 예측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 통합 데이터는 직업교육정책 수립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며, 과학적 기반 위의 인재양성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이 법제 구조는 기술직업교육이 특정 부처의 단편적 사업이 아닌, 국가 차원의 종합 프로젝트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서, 범정부적 협력과 예산 확보의 근거가 된다. 이는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책 이행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② '상유정책(上有政策), 하유대책(下有對策)' 기반 정책 효율성 제고

대만의 직업교육은 「직업교육법」(2015)과 「직업교육정책강령」(2017)이 제정·공포된 이후 정책 실현의 일관성, 체계성, 협업성이 명확해졌고, Top-Down 방식에 의한 직업교육의 목적성, 정합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

게 되었다. 특히 행정원이 직업교육을 주도함에 따라 각 부처와 지방정부,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업 추진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 및 직업교육법」 제2장 '직업교육 계획 수립 및 관리(제4조~제8조)'에 "행정원은 정기적으로 교육부, 노동부, 경제부, 국가발전위원회 및 기타 관계기관의 대표를 소집하여 직업기술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의 주관기관은 교육부로 기술직업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고, 노동부와 경제부 등은 중앙 목적사업기관으로 각자의 목적 사업에 따른 정책을 주관하면서 직업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직업교육 정책 수립에는 노동부, 경제부 등 중앙 목적사업기관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은 지방정부의 관할 기관과 협력하여 '산업인력 수요조사 및 예측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의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고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보고는 매우 중요하다. 「직업교육법」 제2장 제6조에 의하면 각 직할시 및 현(시)의 주관기관은 3년마다 지역의 기술직업교육 실태를 중앙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서에는 ▲지역 산업 현황 ▲학생 취업 동향 및 요구 ▲관할 학교의 직업교육 운영 실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의 보고는 중앙의 목적사업기관에서 정리·분석한 후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직업교육 정책을 조정,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대만의 기술직업교육은 중앙의 정책 방향성과 지방의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한 협력적 분권 체제를 통해 실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발전과 인재양성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직업교육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단계적, 체계적 기술직업교육 발전 시스템 구축

「직업교육법」 제3장에는 '기술직업교육 실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직업탐색교육(職業試探教育), 직업준비교육(職業準備教育), 직업계속교육(職業繼續教育) 3단계로 구분하여 체계화한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 단계별 내용을 정리하면 〈표 3-14〉와 같다.

〈표 3-14〉 기술직업교육 단계별 발전 과정표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업교육 단계	직업탐색교육	직업준비교육	직업계속교육
직업교육 내용	기예(技藝)교육	기능 중심 교육	기술직업 심화교육
교육 목표	• 직업 세계 및 직업인의 생애에 대한 이해 중심 교육	• 실용적 기능 중심 교육	• 전문기술직업인 및 창업 인재양성 교육
교육기관	• 중학교 3학년 과정부터 매주 14시간 직업탐색과정 개설	• 일반형고교 • 기술형고교 • 종합형고교 • 단과형고교	• 전문대학(2년제) • 기술대학(4년제) • 과학기술대학(4년제)

출처: 연구진 작성.

나. 대만 중등단계 직업교육 현황과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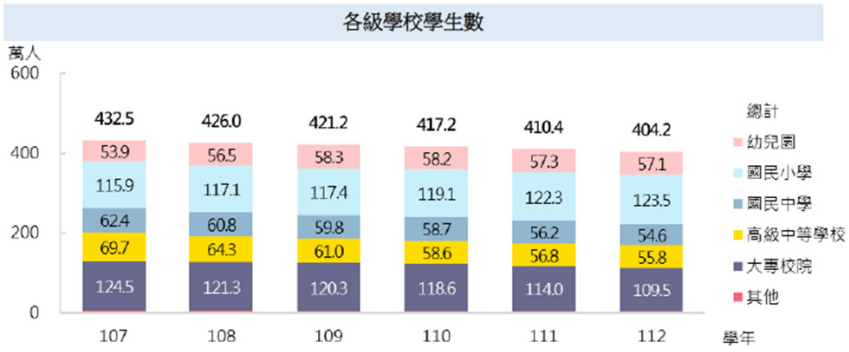
1) 고등학교 및 학생 수

대만 교육부(2024c)에서 발표한 '민국 112학년도(2023년) 고등학교개황 통계(112學年度高級中等學校概況統計)'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전국 고등학교는 총 508개교(공립 304, 사립 204)로 전년 대비 1개교가 감소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형고교 일반과정 개설 학교는 372개교, 기술형고교 전공취업계열 개설 학교 259개교, 종합고등학교 일반과정 개설 학교 50개교, 실용

기능과정 개설 학교 117개교, 단과형 고교 연수부 개설 학교 159개교로 대부분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이는 학생 정원의 자연 감소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재학생 현황

[그림 3-9] 대만 고등학교 개황통계(2023)



자료: 대만 교육부(2024b), 112학년도 고급중등학교개황통계(高級中等學校概況統計),

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민국112년(2023년) 현재 전체 학생 수는 유치원부터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총 404.2만 명으로, 전년 대비 6.2만 명(1.5%) 감소하였다. 그중 대학교 재학생이 109.5만 명으로 전년 대비 4.5만 명(4.0%)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초등학교 학생은 123.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만 명(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수

단위: 만 명, %

항목	재학생						졸업생					
	2018년		2023년		2018년 대비		2017년		2022년		2017년 대비	
	명	%	명	%	증감수	증감률	명	%	명	%	증감수	증감률
총계	69.7	100.0	55.8	100.0	-13.9	-20	24.1	100.0	17.1	100.0	-7.0	-28.9
설립별												
공립	40.7	58.4	36.1	64.7	-4.6	-11.3	12.9	53.3	10.7	62.4	-2.2	-16.9
사립	29.0	41.6	19.7	35.3	-9.3	-32.1	11.3	46.7	6.4	37.6	-4.8	-42.7
과정별												
일반과	30.1	43.2	27.9	50.0	-2.2	-7.3	10.1	41.7	8.7	50.6	-1.4	-13.7
전공 취업	29.1	41.7	21.6	38.7	-7.5	-25.7	10.1	42.0	6.4	37.5	-3.7	-36.6
종합 고교	3.8	5.5	2.2	4.0	-1.6	-42.2	1.6	6.6	0.7	4.2	-0.9	-55.0
실용 기능	3.1	4.5	2.2	4.0	-0.9	-28.5	1.0	4.1	0.7	3.9	-0.3	-33.1
연수부	3.6	5.2	1.9	3.3	-1.7	-48.4	1.3	5.5	0.7	3.8	-0.7	-51.1

자료: 대만 교육부(2024b), 112학년도 고급중등학교개황통계(112學年度高級中等學校概況統計)

위 〈표 3-15〉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전체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약 55.8만 명으로, 2018년 대비 13.9만 명(20.0%)이나 감소하였다. 학교 설립 유형별로 보면 공립학교 36.1만 명, 사립학교 19.7만 명이 재학 중인데, 2018년 대비 모두 감소하였다.

교육과정 유형별로 보면 일반형 고등학교 일반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27.9만 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형 고등학교는 전공취업 계열 학생이 21.6만 명, 종합형 고등학교는 일반 및 실용기능 과정 재학생이 2.2만 명, 그리고 단독형 고등학교 연수부 재학생은 1.9만 명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2018년 대비 감소하였다. 5년 전(2018년)과 비교하면 일반과정 재학생 비율은 전체 43.2%에서 50.0%로 6.8%p 증가한 반면, 직업교육계열 재

학생 비율은 41.7%에서 38.7%로 3.0%p 감소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일반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과정 선택을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학교 및 과정 선택 선호도를 보면 공립학교 학생들은 주로 일반과정을, 사립학교 학생들은 직업교육계열(특히 전공취업계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체 고등학생의 약 29.7만 명(약 50%)은 일반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업계열을 선택한 학생은 26.0만 명으로 2018년 대비 약 29.5%(10.9만 명) 감소하였다. 사립학교도 일반과 재학생이 6.9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여행음식(3.6만 명), 전기전자(1.8만 명) 계열 재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즈니스관리(-4.6만 명), 전기전자(-4.4만 명), 여행음식(-4.3만 명)은 지원자가 대폭 감소하였다. 공립학교의 경우, 일반과정 지원자가 22.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계열 중에서는 비즈니스관리(3.0만 명), 기계전자(2.6만 명) 계열에 지원이 집중되었다.

다. 교육과정 편성

1) 교육 목표

대만 교육부(2021)가 발표한 '12년 국민기본교육과정요강(十二年國民基本教育課程綱要)'에 의하면 고등학교 직업기능인재양성은 사고력, 응용력, 취업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 기술, 태도, 능력 4개 분야로 세분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3-16〉과 같다.

〈표 3-16〉 고등학교 기술직업교육 핵심인재 양성 목표

인재양성 목표	지 식 (기능 지식)	태 도 (기능인의 태도)	기 술 (기술 제작 및 응용)	능 력 (기술 통합)
사고력 응용력 취업력	기술 발전 이해	흥미	제작	설계
	기술 개념 이해	태도	사용	종합
	기술 과정 이해	습관	보호	창의
	영향 및 평가	직업인의 생애 체험	유지	소통

자료: 대만 교육부(2021), 12년국민기본교육과정강요(十二年國民基本教育課程綱要) 수정본

교육 운영 및 교육 목표는 경제부가 정한 '직업능력기준(職能基準)'에 따라야 한다. 대만의 직업교육 운영에는 교육부, 노동부, 경제부가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육부는 '직업교육분류기준'을 정하고, 노동부는 '직업교육표준분류', 그리고 경제부는 '직업능력기준'을 정한다.

경제부 '산업인재발전정보망(産業人才發展資訊網, www.italent.org.tw)'에 의하면 현재 대만의 '직업능력기준'은 총 산업을 25개로 대분류한 후 다시 139개로 세분하여 해당 산업 직무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직업능력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 '직업능력기준'은 학교 교육 평가, 실습평가, 취업 등 기술직업교육 평가 전반에 적용되며, 학생 모집 및 정부의 재정 지원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2) 교과목 편성

〈표 3-17〉 고등학교 유형별 교과목 편성 및 교육 시간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일반형 고교</th><th>기술형 고교</th><th>종합형 고교</th><th>단과형 고교</th></tr>
<tr><td rowspan="3">교육부 지정 필수</td><td>일반과목</td><td>120학점</td><td>68~78학점</td><td>50학점</td><td>50학점</td></tr>
<tr><td>전공과목 실습과목</td><td>-</td><td>45~60학점</td><td>-</td><td>-</td></tr>
<tr><td>학 점</td><td>120학점</td><td>113~138학점</td><td>50학점</td><td>50학점</td></tr>
<tr><td rowspan="5">학교 지정 필수 및 선택</td><td rowspan="4">일반과목 핵심과목 전공과목 실습과목</td><td>학교지정필수</td><td rowspan="4">42~79학점 (2~6학점은 '핵심전공 제작' 필수 과목으로 지정)</td><td colspan="2">학교 지정 필수</td></tr>
<tr><td>4~8학점</td><td>일반과목 4~12학점</td><td>핵심과목 45~60학점</td></tr>
<tr><td>선 택</td><td>학교 지정 선택 과목</td><td>선택</td></tr>
<tr><td>54~58학점</td><td>120~128학점</td><td>72~87학점</td></tr>
<tr><td>총</td><td>62학점</td><td>42~79학점</td><td>132학점</td><td>132학점</td></tr>
<tr><td colspan="2">필수 이수 학점 (시간)</td><td>182학점 (30~32시간)</td><td>180~192학점 (30~32시간)</td><td>182학점 (30~32시간)</td><td>182학점 (30~32시간)</td></tr>
<tr><td colspan="2">매주 단체 활동 (학기 총계)</td><td>2~3시간 (12~17시간)</td><td>2~3시간 (12~18시간)</td><td>2~3시간 (12~17시간)</td><td>2~3시간 (12~17시간)</td></tr>
<tr><td colspan="2">매주 학교 재량 학습(학기 총계)</td><td>1~3시간 (11~16시간)</td><td>0~2시간 (4~12시간)</td><td>1~3시간 (11~16시간)</td><td>1~3시간 (11~16시간)</td></tr>
<tr><td colspan="2">주당 수업 시간</td><td>35시간</td><td>35시간</td><td>35시간</td><td>35시간</td></tr>
</table>

자료: 대만 교육부(2022a), '12년국민교육기술형고등학교 일반과목영역교육과정 요강(十二年國民教育技術型高級中等學校 一般科目領域科程綱要)', 民國111年(2022년) 7月.

위 〈표 3-17〉에 의하면 기술형 고교의 경우 교육과정은 크게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하여 교육부와 학교가 정한 교과목 및 시수에 따라 필수 및 선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외 단체 활동 등 학교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과목도 개설하고 있다. 이처럼 지정 과목을 교육부와 학교 지정으로 구분한 것은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것이다. 졸업 학점은 교육부가 정한 113~138학점, 학교가 정한 42~79학점을 포함하여 총 160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관련 전공 및 실습과목은 반드시 60~80학점 이수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은 총 42~79학점이다. 그중 2~6학점은 제작실습과 관련된 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강의 시간은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주당 30~32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외 주당 2~3시간은 단체 활동 프로그램 시간으로 매주 0~2시간(학기당 총 4~12시간) 이내에서 학교 재량으로 할 수 있다. 학교 지정 과목 및 교육 시간은 사실 해당 지역의 교육청이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이에 대해 일선 학교의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교육 관계자들은 해당 학교 지역의 현실과 산업 환경을 반영한 교육 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이 확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張錫輝, 2022; 許永昌, 2022; 張慶勳 2024).

3) 현장실습

교내·외 현장실습은 '직업준비교육' 측면에서 정부가 중요시하는 교육으로 관리 또한 엄격하다. 「직업교육법」(제2장 제2절 '직업준비교육' 제12조~제13조)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는 '직업준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 실습교육 과정은 현장 교육과 훈련 과정으로 구분하여 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설계해야 하고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직업윤리 의식, 직업인의 생애 발전, 노동 및 기술 법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경제부가 정한 '직업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설계하여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외 산업체 현장실습은 교육부가 다음과 같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첫째, 교육부가 정한 '표준계약서'에 학생 본인, 학교, 기관 3자가 서명해야 한다. 계약서 내용에는 학교명, 훈련 내용, 협력기관과 학생의 권리 의무

관계, 평가, 졸업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다.

둘째, 「직업교육법」(제21조)에는 실습계획에 교외 실습 산업체 선정, 실습 프로그램 개발, 실습 방법, 참가 인원, 지도교사 임명, 성적 부여, 실습 산업체의 지도 책임자, 실습지도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셋째, 실습 관리 및 평가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해당 지역 교육국(청) 등 주관기관의 책임하에 현장 실사로 진행해야 하고, 평가 우수 학교 및 협력기관(산업체), 실습지도 관련자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을 하고 있다.

넷째, 실습 대상자는 실습을 진행하기에 앞서 교내에서 직업인의 소양, 실습직무의 이해, 실습 안전 교육, 실습 수칙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4) 새로운 산학협력 및 '사회책임실천(USR)' 프로그램 참여

과거 대만은 기술직업교육의 성패를 산·학 협력의 실질성 추구에 집중했다면, 최근 대만의 산학협력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노동부, 경제부, 지역 기관 및 단체, 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 사업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산학협력의 범위도 '지·산·학·연 협력'으로 확대되어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산학협력의 목적과 방향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대만 교육부(2021)는 기술직업교육 및 산학협력개혁 정부 보고에서 향후 직업교육의 산학협력을 '산학결합'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전국 직업계고등학교와 과학기술대학의 직업교육을 '국가 10대 신산업 육성 정책'과 연결되는 구조로 직업교육의 틀을 변모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대만 입법원, 2021).

4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산학결합'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주도하에 다음과 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첫째, 산학협력의 범위를 지·산·학·연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둘째, 노동부, 경제부 등 협력기관의 산학협력 참여 기업

에 대한 지원 강화, 셋째, 교육기관의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 강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직업교육의 목적사업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앙의 노동부, 경제부 등은 관할 기관 및 산업체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참여 기업에 대한 세금 면제, 사업자금 우선 지원, 국가지원 사업 선정 우대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교육부 역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직업교육기관에 '산학협력계획서(產學攜手合作計畫)', '산학학원계획서(產業學院計畫)' 제출을 통해 새로운 산학협력의 모델 창안을 요구하고 있다.

산학협력의 범위와 내용도 대폭 수정하였다. 산업체 인사의 교육 참여 확대 지원을 비롯하여, 실습 프로그램 공동 개발, 현장실습 및 체험학습 지원, 실습기자재 공동 활용, 지역의 특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특별과정(반) 개설, 재직자 대상 주문식교육, 취업 협력, 산학공동학과 개설 등 다양하다. 고등학교의 산학협력도 기술형고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체나 과학기술대학과의 공동 참여에 의한 교육 및 훈련과정 개발, 현장실습, 취업 협력 등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사회책임추진센터(大學社會責任推動中心)[38]를 개설해 '산학결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 교육기관이 지역 산업 및 사회 발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도록 하는 '사회책임실천(University Social Responsibity, 이하 USR) 프로그램을 고등학교 이상 모든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교육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지식, 시설, 기자재 등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지역과 공생공영(共生共榮)할 수 있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대학 등 교육기관이 지역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교육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문제해

38) 대만 대학사회책임추진센터(2025), usr.moe.gov.tw. (검색일: 2025.7.5.)

결능력 또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등 직업교육기관은 지역의 과학기술대학 등과 연합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직업교육 교류 및 취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 졸업생 현황 및 진로

대만 교육부(2024c)가 발표한 '2023학년도 학교 기본 상황 통계 결과 분석(112學年學校基本概況統計結果提要分析)'에 의하면 2022년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총 17만 1천 명으로, 전년도(17만 9천 명)에 비해 약 8,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형고등학교 전공취업계열 졸업생의 경우는 64,000명(37.5%)으로 2017년 대비 36.6%나 대폭 감소하였다. 2022년 졸업생 중 일반과정과 전공취업계열 졸업생은 전체의 약 88.1%를 차지하였다. 이 수치는 2017년(83.7%) 대비 4.4%p 증가한 것으로, 고등학생들의 진로 방향이 일반대학과 과학기술대학의 특정 계열 진학에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종합형 고등학교 및 단독형 고등학교 연수부 과정 졸업생은 5년간 50% 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및 학과 통폐합, 학생 선호도 저하, 지역 간 교육자원 분포 불균형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학 진학률을 보면 2022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86.8%로, 전년 대비 0.9%p, 2018년 대비 4.4%p 증가하였다. 인원수로 보면 총 14.9만 명이 대학에 진학하였고, 이 중 일반형 고등학교 출신은 8.4만 명, 기술형 고등학교 출신은 5.3만 명으로 두 계열 출신자가 전체 진학자의 92%를 차지하였다. 대학 진학 추이를 보면 일반형 및 종합형 고등학교 졸업생은 주로 4년제 일반대학에 진학하였고, 직업계열 학생들은 전문대학 또는 과학

기술대학으로 진학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2년 고등학교 졸업생 중 직접 취업에 나선 인원은 총 8,113명이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4,012명은 종합형 고등학교 실용기능과정 및 단독형 연수부 졸업자로, 해당 교육과정이 취업을 우선 목적으로 하는 것과 산학협정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기술형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자 수는 1,022명(12.6%)으로 2018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는 졸업생들이 고도화된 기술교육을 위해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은 주로 숙박·음식업(29.2%), 기타 서비스업, 공공행정, 도·소매업,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업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직무군으로는 여행·음식, 비즈니스관리, 동력기계, 전기전자, 가정 분야 순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58.3%), 미용·디자인(44.1%), 해양수산(35.9%) 계열의 취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졸업 직후 미진학·미취업 상태 학생은 주로 재수나 입대를 위한 대기, 또는 구직을 준비 중인 경우로, 기술형 고교 졸업자와 일반고 직업교육과정 이수자가 전체의 74.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미진학·미취업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교육 시스템과 진로 설계 프로그램 강화에 따른 성과로 볼 수 있다. 대만 교육부(2025)는 청소년의 자립 역량을 길러주고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교육 및 취업 저축 통장 방안(青年教育與就業貯蓄帳戶方案)'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년저축통장'과 '청년체험학습계획'으로 구분하여 매달 NT $5,000씩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재원은 교육부 및 노동부 예산으로 충당하며, 직업탐색, 체험학습, 해외연수 및 직업훈련 등 학생들의 진로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마. 결론 및 시사점

기술직업교육은 국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교육과 달리 그 목적과 내용, 체계, 형식은 다양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직업교육은 정부의 관심과 보호 없이는 발전이 불가능하다. 기술직업교육이 안정되고 직업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 때 국가 산업경제는 발전하고 건강한 국민 사회가 형성되어 국가 발전에 따른 정부의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만의 직업교육 사례는 우리나라의 직업교육 개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존중과 보호 의지, 범정부 차원의 지원 제도, 이로 인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은 직업교육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이자 가치라 할 수 있다. 직업교육은 산업과 기술 환경, 그리고 시대 변화와 친화적 관계를 형성하며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탄력성 있게 변화하려고 노력할 때 직업교육의 신뢰성 제고, 품질 향상,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직업교육이 국가 경쟁력 발전에 기여하는 점은 실로 많다. 따라서 직업교육을 교육의 단면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국리민복의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한 유·무형의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업교육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오스트리아[39]

가. 오스트리아 직업교육의 개요

2023년 현재 오스트리아의 총인구는 9,13만 명이나 향후 2050년경에는 9,83만 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하여 69만 명 증가하는 것이다.[40]

오스트리아는 독일, 스위스 등 인접국과 유사한 교육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원화된 직업교육훈련(Dual System)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교육체계는 초등교육(4년제) 이후 중등수준 I 및 II로 구성되며, 중등 2학년(9학년)은 의무교육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Wirtschaft, 2023).

학생들은 의무교육을 마친 후 일반고등학교(Allgemeine bildende höhere Schule, AHS)를 통한 대학 진학과 직업교육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때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은 통상 1년제 직업예비전문학교에서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이수한 뒤 본격적인 직업훈련에 진입한다. 직업훈련은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약 80%)과 직업학교 이론교육(약 20%)을 병행하는 이원화 구조로, 평균 3년간 이루어진다. 교육을 마치면 국가직업자격시험을 통해 공식 자격이 부여된다.

직업중등학교(BMS)는 또 다른 직업교육 경로로서 일반교양 과정과 실무능력 과정을 병행하여 3~4년간 운영되며, 졸업자는 '직업성숙검정자격증(Berufsreifeprüfung)'을 취득할 수 있다. 일부 과정은 1·2년제 단기 훈련과

39) 본 절의 내용은 한국진로직업상담연구원 김기홍 박사가 작성한 것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함.
40) https://www.bq-portal.de/db/L%C3%A4nder-und-Berufsprofile/oesterreich. 검색일: 2025. 4. 14.

정으로도 구성되어 있다. 졸업 후에는 건설기술자, 장인 학교 등 고등 직업교육기관에 진학하거나, 특수 목적의 기술·상업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1997년 이후에는 이원화 직업훈련 과정, 직업중등학교, 보건·간호학교 졸업자에게도 대학 입학자격이 주어져서, 예비과정과 고급과정을 이수한 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응용과학대학 등)에 진학할 수 있다. 대학 입학은 학교 졸업시험(Matura), 직업자격시험, 대학입학시험 등의 경로를 거쳐 가능하며, 학사(4년)와 석사(2년 이상) 체계를 따른다(Institut für Bildungsforschung der Wirtschaft, 2024).

오스트리아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다층적이고 유연한 직업교육체계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조기에 육성함과 동시에 고등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직업교육의 사회적 위상과 진로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1) 중등 직업교육훈련 현황

오스트리아의 경우 〈표 3-18〉과 같이 직업중등학교(Berufsbildende mittlere Schule, BMS) 졸업자는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학교 졸업자보다 취업 전망이 훨씬 좋다. 평균적으로 직업중등학교 졸업 후 취업까지 3개월도 채 걸리지 않는다. 이는 직업고등학교(Berufsbildende mittlere und höhere Schule, BHS)나 일반고등학교(Allgemeinbildende höhere Schule, AHS) 졸업자보다 직장생활로의 진입이 더 빠름을 의미한다.

〈표 3-18〉 졸업 학력에 따른 취업 경력 지표(%)

취업 경력 지표	의무 학교	이원화 직업훈련 (현장실습)	직업중등 학교 (BMS)	일반고등 학교 (AHS)	직업고등 학교 (BHS)
18개월 이후 추가 직업훈련의 비율	92	5	41	81	45
첫 취업까지의 기간(개월)	6.9	1.9	2.8	7.2	4.2
첫 고용 기간 중 최소 1년 이상 비율	62	64	69	50	72
18개월 후 월 총소득(유로)	995	2615	2389	2057	2579
2년차 취업 일수 비율	15	79	74	36	83
2년차 연속고용자 비율	8	51	50	18	59
18개월 후 예약 할당량	57.7	7.8	7.9	7.4	3.3

주: 본 통계자료는 오스트리아 통계청이 연방 노동 사회부(BMAW)와 공공 고용 서비스(AMS)를 대신하여 교육 관련 취업 경력 모니터링(BibEr)을 실시한 것임. 2008/09학년도부터 2020/21 학년도까지 조사임.

출처: Bundesanstalt Statistik Österreich(2025), STATISTIK AUSTRIA. Gute Chancen am Arbeit smarkt mit BMS-Abschluss. .Pressemitteilung: 13 521-015/25, p. 3.

〈표 3-18〉의 통계에 따르면, BMS 졸업생은 평균 2.8개월 이내에 첫 직장에 취업한다. 이는 이원화 직업훈련(Duale Ausbildung) 이수자(1.9개월)에 비하면 다소 늦지만, 일반고(AHS) 졸업자(7.2개월)에 비해서는 월등히 빠른 것이다. 이들의 68.8%는 첫 직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BMS 졸업 18개월 후 평균 월 소득은 2,389유로로, 이원화 직업훈련(2,615유로) 및 직업고등학교(BHS, 2,579유로) 이수자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여성 졸업자의 경우 월 소득이 평균 2,201유로로, 이원화 직업훈련(2,161유로)이나 BHS(2,384유로) 대비 오히려 경쟁력 있는 수준이다. 이는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을 보유한 여성 졸업자의 수요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Statistik Austria(2025). Gute Chancen am Arbeitsmarkt mit BMS-Abschluss. Pressemitteilung:13 521-015/25].

오스트리아의 직업교육훈련은 중앙정부의 다부처 협업체계와 연방 및 주정부의 공동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주요 행정부처로는 교육·과학·연구부(Bundesministerium fur Bildung, BMBWF), 고용경제부(Bunde-sministeriums fur Arbeit und Wirtschaft, BMAW), 사회부(Sozialministerium, SMS), 경제에너지관광부(Bundesministeriums fur Wirtschaft, Energie und Tourismus, BMWET) 등이 있으며, 이들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학교 중심의 직업교육과 기업 중심의 이원화 훈련이 체계적으로 연계된다.

특히 공공고용서비스(Arbeitsmarktservice, AMS)는 연방고용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98개 지역 기관과 73개의 직업정보센터(BIZ)를 통해 청소년과 성인에게 직업정보, 직무적성검사, 진로상담 등 전방위적 고용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Bundesministerium fur Arbeit und Wirtschaft, 2024).

이와 유사한 연방사회부의 산하기관인 연방사회부서비스(Sozialministeriumservice, SMS)는 연방부처의 하위 부서에서 전문지원네트워크(Netzwerk Berufliche Assistenz, NEBA)를 통해 청소년 코칭, 장애학생 지원, 직업훈련 모듈 설계 등 교육 복지 분야 연계를 담당한다(Bundesministerium fur Arbeit und Wirtschaft, 2024, 35).

오스트리아는 「직업훈련법(BAG)」에 근거하여 기업 기반의 훈련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 직업훈련생 1인당 보조금, 훈련교사 연수비, 해외 인턴십 보상, 우수 수료자에 대한 보너스 등이 이에 포함된다(Bundesministerium fur Arbeit und Wirtschaft, 2024, 114-115). 특히 25세 이하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 보장 프로그램은 실업 청년에게 추가 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표 3-19〉 노동시장서비스의 직업훈련자리 촉진책(명)

(단위: 명, 유로, %)

연도	인원 (남/여)	종사자의 비율	남자	여자	지원액 (유로)	국내총생산에서의 비율
2013	13,654	0.34	7,673	5,983	25,226,931	0.0078
2014	14,156	0.35	8,120	6,037	27,945,064	0.0084
2015	14,102	0.35	8,092	5,779	27,563,919	0.0073
2016	13,667	0.33	8,627	5,575	25,927,841	0.0073
2017	14,359	0.34	8,627	5,735	27,727,977	0.0075
2018	14,845	0.35	9,152	5,694	34,782,868	0.0090
2019	16,229	0.38	10,243	5,986	40,998,571	0.0103
2020	16,437	0.39	10,407	6,031	43,174,292	0.0113
2021	17,327	0.41	10,901	6,426	46,238,793	0.0114
2022	18,095	0.42	11,383	6,714	52,485,911	0.0117
2023	18,871	0.43	11,646	7,225	54,974,233	0.0115

출처: AMS-Arbeitsmarktservice Osterreich. (2023). Annual Report 2023. Data source: AMS Data Warehouse (AMS-DWH), Cube 2023.

참고: 지표 인원수 = 해당 연도에 하루라도 지원을 받은 사람의 수. 여러 건의 자금 지원 사례가 있더라도 각 사람은 총액에서 한 번만 계산.

〈표 3-20〉 회사 간 견습직업훈련 참여 및 지원 현황

(단위: 명, 유로, %)

연도	인원 (남/여)	종사자의 비율	남자	여자	지원액 (유로)	국내총생산에서의 비율
2013	14,988	12.4	8,910	6,079	108,869,382	0.0336
2014	15,307	13.3	9,162	6,147	117,293,754	0.0352
2015	15,561	14.2	9,407	6,154	140,558,276	0.0408
2016	15,006	14.0	9,392	5,614	156,286,957	0.0437
2017	14,370	13.5	9,016	5,355	152,553,227	0.0413
2018	13,909	12.9	8,674	5,236	172,192,931	0.0449
2019	12,609	11.6	7,737	4,875	159,192,931	0.0400
2020	11,407	10.5	6,865	4,543	147,772,988	0.0388
2021	12,081	11.2	7,369	4,715	148,380,928	0.0366
2022	11,043	10.2	6,840	4,207	143,026,373	0.0320
2023	10,202	9.4	6,236	3,966	149,208,110	0.0313

출처: Bundesministerium fur Arbeit und Wirtschaft. (2024). Arbeitsmarktpolitik Osterreich – ein Uberblick 2023, p. 117.

이러한 제도는 실업보험기금(고용주 및 피고용인 분담금)으로 조달되며, 2023년에는 약 11,600명의 청년이 해당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내용에는 18세 이상 견습교육, 직업학교 추가 이수, 직무자격 중심 교육, 최종 직업훈련시험 대비 과정 등이 포함된다(Bundesministerium fur Arbeit und Wirtschaft, 2024).

오스트리아의 이원화 직업훈련체계는 연방정부 수준, 주정부 수준, 지역 수준으로 나뉘며, 각각의 수준에서 명확한 권한 분장과 상호 보완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 연방노동경제부: 기업 기반 직업훈련의 전반을 관장하며, 「직업훈련법(BAG)」에 기반한 훈련규정 제정 권한을 보유한다.
- 연방직업훈련자문위원회: 사회적 파트너(오스트리아경제상공회의소, 노동상공회의소 등)의 제안에 따라 BMAW가 위원을 임명하며, 자문기구로서 훈련규정의 개정·보완 시 중요한 의견을 제시한다.
- 연방교육·과학·연구부: 학교 중심의 직업교육을 관장하며, 직업학교의 기본 커리큘럼 제정, 학교 조직, 교직원 급여의 일부(50%)를 연방 예산으로 지원한다(Bundesministerium fur Arbeit und Wirtschaft, 2023).

주정부 수준에서는 각 주의 경제상공회의소 산하 교육훈련사무소(Lehrlingsstellen)가 주요 직업훈련 관리기관으로 기능한다. 이들은 기업의 훈련자격 심사, 훈련계약 검토, 훈련성과 기록 및 관리, 훈련 종료 후 최종시험 시행 등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및 직원을 위한 상공회의소 내의 청소년 보호 사무소와 협력하여 포괄적인 상담 및 조언을 제공한다. 직업훈련 검정위원은 주정부 자문위원회 제안을 바탕으로 직업훈련 담당 공무원이 임명한다.

지역 수준에서는 실제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는 기업과 직업학교가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훈련기업 내 직업훈련교사는 훈련생의 일상적 직무지도와 평가를 담당하며, 직업학교는 기업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론교육 및 일반교양교육을 제공한다. 이러한 학교-기업 간 협력은 이원화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다.

〈표 3-21〉 이원화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권한

연방정부 수준	연방노동경제부 • 상급 감독기관 • 직업훈련법(BAG) • 직업훈련규정과 직업상(교수직종 패키지) • 기업 교육훈련 촉진	• 연방직업훈련자문위원회 • 사회적 파트너 자문위원회 • 새로운 직업훈련규정에 대한 의견 표명	연방교육과학연구부 • 학교법 • 교수계획 편성·운영 • 직업학교 직업훈련에 대한 부분 재정 지원
주정부 수준	교육훈련 기업 • 기업직업훈련은 교수훈련 담당자와 직업훈련교사를 통해 중계	-	직업학교 • 일반교육과 전문이론교육 및 추가적으로 전문현장실습교육
지역 수준	상공회의소에서의 교육훈련사무소 • 직업훈련생을 관리하는 첫 감독기관 • 교육훈련 기업에 대한 자격검정 • 최종 직업훈련 검정 완료 • 직업훈련 촉진 지원	지역 직업훈련 자문위원회 • 사회적 파트너적 상담 자문위원회 • 직업훈련에 대한 입장 표명 • 검정위원회 위원장 제안	지역교육청 • 연방의 요구사항 이행 • 교육의 질 확보 및 유지 발전 • 학교 감독
	지방정부 수반 • 두 번째 직업훈련 감독기관		지역 정부 • 직업학교의 장비와 유지(부분 재정 지원)

출처: Bundesministerium fur Arbeit und Wirtschaft(2023), Die Lehre. Duale Berufsausbildung in Osterreich, p.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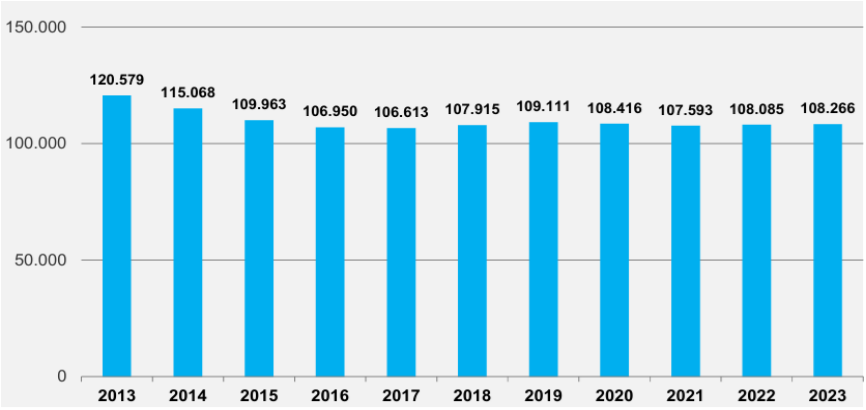
오스트리아의 이원화 직업훈련체제에서 회사 내 교육훈련 비용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부담한다. 이와 달리 학교교육(직업학교)은 공공부문의 자금 지원을 받는다. 이원화 직업훈련의 비용 대부분은 회사가 부담한다. 이원화 직업훈련의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훈련생의 급여이다. 이 급여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 정식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지 않을 시에 훈련생의 급여는 직업훈련 계약서에서 개별적으로 합의해야 한다(Qualitaet-lehre, 2025).

〈표 3-22〉 매년 초기직업훈련을 위해 훈련생 개인에게 지원하는 공적 지출(2019/20)

직업훈련	직업훈련 장소와 연도에 따른 개인별 상세 비용	직업훈련 장소와 연도에 따른 공공 지출
회사 내 견습교육훈련	직업학교: 5,170유로 「직업훈련법(BAG)」 제19c에 따른 직업훈련 자금 지원 「직업훈련법(BAG)」 2,186유로	7,356유로
회사 간을 대신하여 직업훈련 AMS(「직업훈련법(BAG)」 제30b조에 따라)	직업학교: 5,170유로 AMS 비용: 13,543유로 주 평균(+7.58%): 1,027유로	19,760유로
직업 중등 및 고등학교(BMHS)	10,905유로	10,905유로

출처: Bundesministerium fur Arbeit und Wirtschaft(2023), Die Lehre. Duale Berufsausbildung in Osterreich, p. 36.

[그림 3-10] 중등 직업교육 단계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직업훈련생의 현황 추이(2013~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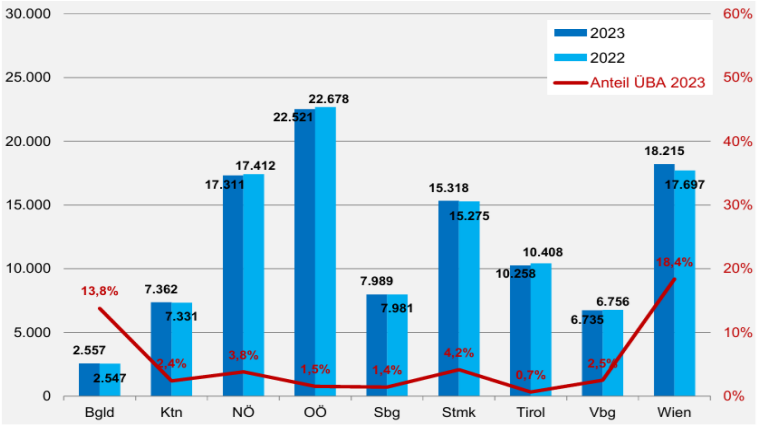


자료: Institut fur Bildungsforschung der Wirtschaft(2024), Lehrlingsausbildung im Uberblick 2024, Strukturdaten, Trends und Perspektiven. ibw-Forschungsbericht Nr. 221. p. 14.

2023년 12월 현재 오스트리아의 직업훈련생은 108,266명이다([그림 3-10] 참조). 2023년의 총 직업훈련생 수는 2022년보다 약간 많으며(2022년 대비 181명 증가), 2018년 이래로 비교적 크게 변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총 견습생 수는 2024년 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Institut fur Bildungsforschung der Wirtschaft, 2024).

오스트리아 연방주별 이원화 직업훈련에 참여한 직업훈련생 수와 비율은 [그림 3-11]과 같다. 오버외스터라이히주(Oberosterreich)는 2023년에도 견습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방주로서의 입지를 유지했다(2023년 견습생 22,521명). 9개 연방주 중 5개 주에서 2022년 대비 2023년 견습생 수가 증가했다. 빈(Wien)의 직업훈련생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518명, 2.9% 증가), 케른텐(Karnten; 31명, 0.4% 증가), 부르겐란트(Burgenland; 10명, 0.4% 증가), 슈타이어마르크(Steiermark; 43명, 0.3% 증가), 잘츠부르크(Salzburg; 8명, 0.1% 증가)에서 증가세가 약했다(Institut fur Bildungsforschung der Wirtschaft, 2024).

[그림 3-11] 오스트리아 연방주별 직업훈련생 수(2022~2023)



자료: Institut fur Bildungsforschung der Wirtschaft(2024). Lehrlingsausbildung im Überblick 2024, p.16.

※ 붉은색 선은 회사 간 이원화 직업훈련에 참여한 비율

〈표 3-23〉 산업별 직업훈련생의 수

구별	2022	2023	변동 수 (명)	변동율 (%)
제조업과 수공업	46,913	46,666	-247	-0.5
공업	16,428	16,804	+376	+2.3
상업	15,193	14,763	-430	-2.8
은행과 보험	1,218	1,364	+146	+12.0
운송과 교통	2,856	2,981	+125	+4.4%
여행과 여가 산업	6,949	7,195	+246	+1.4%
정보통신과 컨설팅	2,764	2,802	+38	+3.0%
그 외 직업훈련 적격자	9,536	9,822	+286	+3.0
회사 간 교육훈련 (「직업훈련법」 § 8c, 29, 30, 30b)	6,228	5,869	-359	-5.8
그중에 「직업훈련법」 § 8c 교육훈련기관들(교육훈련기간 연장/부분자격)	1,450	1,422	-28	-1.9%
그중 공공고용서비스의 위임에 따라 「직업훈련법」 § 30b	4,150	3,904	-246	-5.9%
계	108,085	108,266	+181	+0.2

출처: Institut für Bildungsforschung der Wirtschaft(2024), Lehrlingsausbildung im Überblick 2024, p. 18.

2023년 이원화 직업훈련 국가인정직종 중 직업훈련생이 많은 직종의 순서는 〈표 3-24〉와 같다. 소매업, 전기공학, 금속기술, 자동차기술, 설치 및 건축기술, 사무원, 메카트로닉스 순으로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직종과 서비스업종의 직업훈련생이 많았다.

〈표 3-24〉 30개 이원화 직업훈련 직종 직업훈련생 수(2023년)

순위	직종명	명	순위	직종명	명
1	소매업	11,435	16	농업 및 건설 기계기술	1,609
2	전기공학	10,238	17	차체구조기술	1,541
3	금속기술	9,970	18	영업물류사무원	1,485
4	자동차기술	7,610	19	레스토랑전문가	1,388
5	설치 및 건축기술	4,483	20	화가 및 코팅 기술자	1,350
6	사무원	4,441	21	호텔 및 호스피탈리티 보조원	1,219
7	메카트로닉스	3,337	22	제과점	1,078
8	요리	2,816	23	도매업자	965
9	선반	2,809	24	요리전문가	924
10	미용(스타일리스트)	2,453	25	화물운송 담당자	923
11	정보통신기술	2,157	26	공정가술	858
12	건축 건설	2,116	27	애플리케이션 개발 - 코딩	786
13	행정보조원	2,032	28	은행원	779
14	목공	1,965	29	콘크리트 구조	747
15	제약 및 판매 보조원	1,719	30	광학	714

출처: Institut für Bildungsforschung der Wirtschaft(2024), Lehrlingsausbildung im Überblick 2024, p. 25.

오스트리아가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방정부 수준과 주정부 수준에서 직업훈련생에게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의 내용과 종류는 〈표 3-25〉와 같다.

〈표 3-25〉 오스트리아의 연방 및 주정부별 직업교육훈련 지원 내용(2024년 현재)

구분	지원 내용
연방정부 수준 (Bundesebene)	• 직업훈련생을 위한 면접 지원(공공고용서비스: 특정한 상황(재정적 상황)일 때, 공공고용서비스가 멀리 떨어진 직업훈련기관에서의 면접을 위한 보조금(여행비, 숙박비, 식사비)을 제공함. • 직업훈련생을 위한 여행 수당(Arbeitsmarktservice): 직업훈련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근처에 적절한 현장실습 자리가 없는 경우 공공고용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음. • 가족수당: 원칙적으로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는 가족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 24세 미만의 성인 자녀는 직업훈련을 마친 경우(예: 현장실습 과정 완료) 가족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음. • 교통 및 여비(Bundeskanzleramt, BKA): 직업훈련생은 집과 훈련장 간 일일 이동에 대해 무료 교통권을 받을 수 있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경우(예: 훈련 장소에 항상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정도로 불편한 교통편), 훈련장까지의 이동 거리가 최소 2km 이상인 경우 여비를 신청할 수 있음. 장애인 훈련생이 교통수단에 의존하는 경우, 이 최소 거리는 적용되지 않음. • 직업훈련생 해외 인턴십 홍보(Internationaler Fachkräfteaustausch, IFA): 유럽 국가의 훈련생을 대상으로 몇 주간 해외 인턴십을 장려하고 국제전문가교류협회(IFA)에서 서비스 및 조언을 제공함. • 교육·홍보(Wirtschaftskammer Tirol): 다양한 회사 보조금 외에 훈련생은 최종 직업훈련검정을 위한 준비 과정에 드는 비용도 상환을 받음. 자금 지원은 상공회의소 견습 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직업훈련생을 위한 코칭: 직업훈련생이 훈련, 직업학교 또는 개인 생활에서 겪는 문제나 다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은 경우 전문 코치로부터 무료로 지원과 지도를 받을 수 있음. - 공공고용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추가 교육 보조금(AMS): 생활비와 훈련과정 관련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음. - 최종 직업훈련검정에 대한 무료 재응시(WKO): 최종 견습시험의 2차 및 3차 응시료는 무료임. - 이 외에도 훈련생이 이용할 수 있는 주 차원의 다양한 보조금과 지원 옵션이 있음.
이하 주정부 수준 Burgenland	부르겐란트주의 근로자 보조금 여비수당, 훈련지원수당, 주택비용수당, 자격지원수당 부르겐란트 교육 보조자료(Arbeitskammer: AK) 부르겐란트 노동회의소 지원 프로그램 훈련생 및 학부모를 위한 현금 팁(AK)

구분	지원 내용
	Burgenland Chamber of Labor의 훈련 자금 및 보조금에 대한 정보
Kärnten	케른티아주 직업훈련 자금 케른티아의 직업훈련생을 위한 자금 지원 기회에 대한 모든 정보 케린티아 주택 비용 보조금 직업학교에 다니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숙사나 아파트가 필요한 직업훈련생은 주택비 보조금/기숙사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Niederösterreich	니더외스터라이히주 직업훈련 지원 이동 지원, 훈련수당, 영재 학생 지원 니더 오스트리아 교육 보너스(AK): 훈련생은 니더오스트리아 노동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추가교육과정에 대한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Oberösterreich	오버외스터라이히주 교육 계정 직업훈련 중인 사람들(직업훈련생 포함)을 위한 자금 지원
Salzburg	잘츠부르크 견습 장학금 직업훈련생을 위한 장학금(가족의 재정 상황과 직업훈련생의 학습 성공도에 따라 다름.)
Steiermark	직업훈련수당/교육바우처 직업훈련생을 위한 지원(가족의 재정 상황 및 직업훈련생의 학습 성공 여부에 따라 다름.), 직업훈련생을 위한 교육바우처 등
Tirol	티롤주 인재 진흥 성공을 거둔 직업훈련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티롤주의 직업훈련생을 위한 훈련수당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직업훈련생을 위한 보조금 티롤주 교육수당 티롤(AK) 직업훈련 지원 티롤 노동회의소 직업훈련생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
Vorarlberg	포어랄베르크 상공회의소 직업훈련사무소(WKO) 여기에서는 특히 해외에서 교사로 일하기 위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음. 포어랄베르크의 견습 무료 여행/견습 플러스 포어알베르크 교통 협회의 할인된 연간 티켓을 신청하실 수 있음.
Wien	빈 교육 계정(Wiener Arbeitnehmerinnen Förderungsfonds) 교육 계정을 통해 실업자와 취업 중인 빈 시민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훈련 및 추가 교육 조치를 지원 반 교육 보너스(waff): 교육 보너스는 직업훈련생 졸업자에게 제공

출처: Oesterreich(2025).https://www.oesterreich.gv.at/themen/bildung_und_ausbildung/lehre-und-berufsbildende-schulen/Seite.333903.html. 연구자가 재작성 정리함. 검색일: 2025. 4.20.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중등 직업교육 운영에 대한 사례를 고찰하기 위해 국내의 대경권(대구, 경북)과 호남권(광주, 전남)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해외 사례로 아시아의 대만과 유럽의 오스트리아의 주요 정책과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앞의 제2장 3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대구·경북은 직업교육과 지역인재 축적 효과가 미진한 지역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해 중등단계 직업교육 인재양성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응 전략이 필요한 곳이다. 대구·경북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양성과 시장의 생산성(임금)이 서로 매칭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 교육시장과 노동시장 간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력 업종의 전문성 부족 및 전문인력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 전공별 채용 인원을 보면 고졸, 전문학사, 학사 위주 채용 인력이 많고 석박사 채용 인력은 많지 않다. 대구·경북의 전문기술인력 채용에서 고학력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지역 기업의 주요 업종이 연구개발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이라기보다는 단순 생산 업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구의 직업계고 현황을 살펴보면,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의 특징과 현장 수요 반영 정도는 다른 지역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구는 산업기반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인근 경북 지역에도 산업기반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구의 특성화고는 사립 특성화고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 사립 특성화고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최근 소프트웨어, 디지털 분야로 학과 및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학교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의 인재 정책은 지역인재 양성을 통해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역외 인력을 대구로 유입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인재육성 및 정주 인

구 확보를 위해 19세 이상 청년 일자리 및 교육 지원과 대학생 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계고 관련 정책은 찾아볼 수 없어서 아쉬운 면이 있다. 대구에서 직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지역 산업에 요구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대구광역시청 등)와 대구시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산업체, 지역 대학, 유관기관이 협력해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장기적으로 정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체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구의 경우 대학생과 19세 이상의 청년에 대한 인재 정책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정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구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고졸 인력 양성 및 졸업 후 출구전략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직업계고 졸업생이 지역 기업에 취업한 후 장기적인 성장경로를 이행할 수 있는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북도청은 '경북 4대 교육대전환'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였다. 청년이 태어난 곳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정주하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을 비롯하여 기업체, 고교, 평생교육기관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4대 교육대전환으로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속도감을 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성공할 수 있는 '고졸청년 인식대전환'의 일환으로 경북도청과 경북도교육청이 협력하는 경북형 직업교육 혁신플랫폼 구축하였다(경상북도청, 2023). 경북의 인재 정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교육청, 산업협의회 등 기관과 중등단계 직업교육 간 협력체계의 대표적인 사례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라고 할 수 있다. 경북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분야는 첨단부품소재 가공, 스마트 제조, 차세대 배터리(2차 전지)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경북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지원은 타 시·도에 비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교육청, 지자체, 산업체, 학교 간의 역할 확대 및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지원 방안을 포함해 지역 산업(정주)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지역 단위의 공동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직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기업에 취업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주 지원책을 마련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인재 정책으로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호남권 광주·전남 지역의 당면 문제로는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 고령화, 인재 유출 등 삼중고를 들 수 있다.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19년 수도권의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50%에 진입하였고, 2020년 기준 수도권의 경제 비율은 52.5%로 이미 인구·경제 등 전 분야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의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인재의 유출이라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광주·전남은 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광주 관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학과를 구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주의 주요 전략산업인 미래형 운송기기, 에너지산업, AI융복합, 의료·헬스케어, 문화산업 등과 연계한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업계고 전문교과 중 선택과목 비율이 33.7%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다양한 지역 거버넌스를 활용한 지역 협력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교육발전특구 중등 직업교육 참여, 첨단분야에서 실

무교육 중심의 직업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둘째, 교육발전특구에서 중등 직업교육혁신 세부 추진을 통해 직업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청과 연계·협력을 통해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고도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광주형 마이스터고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첨단 분야 실무교육 중심 직업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첨단 분야 관련 직업계고 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 행사, 교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 직업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광주·전남 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 지원 및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통한 학생의 입학, 졸업, 취업, 지역 정주 등을 위한 지역인재 정책의 범주 가운데 학교를 둘러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교육은 교육청-학교가 담당한다는 인식이 여전한 듯 보이는데, 인식을 바꾸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정주 기술인재 양성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개선 사항으로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있어 실제적인 도움은 양질의 취업처 발굴이며, 청년 지원 정책 마련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20세 이상의 청년 인재 양성에는 관심이 있으나, 20세 미만 청년 취업에 대해서는 교육청-학교에 일임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청년 취업 지원 정책에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광주광역시교육청 관계자 서면 답변).”

전남의 경우 지역소멸 위기를 크게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정주형 고졸 인재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다른 비수도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020년 이후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직업계고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7년간 직업계고 학교 수, 학급 수, 입학 정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 정원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충원율은 85%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하고 있는데, 우선 일자리, 학업 등으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을 수용할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인 교육 회복 및 강화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미래학교를 육성하고자 한다. '전남형 교육자치 모형'을 통해 전남교육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교육청-지자체-기업-지역사회의 연계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전남은 교육발전특구 추진체계도 갖추고 있으며,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특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교육·문화·거주 기반을 개선함으로써 전남 특성에 맞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남 직업계고의 지역인재 정책과 관련된 사업으로 전남 글로텍학교(으뜸고등학교, 상생고등학교)를 공모 및 선정하고, 운영(2025~)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 으뜸고등학교 육성'은 세계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고숙련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프로젝트 수업, 과정평가형 자격 등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목표로 하며, '전남 상생고등학교 육성'은 직업계고-직업계고, 직업계고-지역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우수 신입생 유치 및 지역 산업 맞춤형 고숙련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를 목표로 한다. 이 외에도 2025년에 전남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 사례로 살펴본 대만의 기술직업교육 정책 교육은 '백년수인(百年樹人)의 국가 대계(大計)'로 표현할 수 있다. 70년 전통의 대만 직업교육은 정부의 존중과 보호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였다. 건국 초부터 정부는 기술직업교육의 목적을 국가 경제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동량을 양성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현재까지도 일관된 정부의 철학이자 정신이다. 따

라서 오늘날 대만의 기술직업교육은 일반교육과 별개의 체계를 형성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 직업교육인의 자긍심 고취, 직업기술자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만의 사례로 볼 때 직업교육이 발전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은 정부의 존중과 보호는 물론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직업교육의 발전은 국가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만의 책임이 결코 아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중앙과 지방 정부, 산업체, 학생, 교육기관,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평생 사회교육으로 인식하고 공감할 때 발전할 수 있다.

둘째, 직업교육이 발전하려면 단계적, 체계적,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대만 직업교육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과정부터 직업탐색교육을 실시하여 직업, 직업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춘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인도하고 있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과학기술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본격적인 기술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학은 기술직업의 심화 과정으로 국가 산업 발전 전략과 일치하는 고급 기술인재 양성에 주력함으로써 직업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여 주고 있다.

셋째, 직업교육은 교육의 목적성, 정합성, 가치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중등학교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교육 목표, 발전 방향 등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경우가 많다. 아직도 수십 년 전의 인재양성 목표를 내걸고 있는데, 직업교육은 시대와 기술 환경 변화, 학생들의 취향에 따라 목표, 교육 방법 등이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특색과 학생 성향을 반영한 자율성도 최대한 부여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하여야 지역사회와 학생들이 직업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직업교육의 경우 걱정이 더 크다. 대만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여 타개책을 마련해 놓았다. 직업교육을 전 국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확대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고용 기회 창출, 노동 임금 인상,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처럼 직업교육은 국가 경쟁력 발전에 기여하는 점이 많다. 더 이상 직업교육을 교육의 단면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국민 건강, 행복 증진,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한 유·무형의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업교육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 오스트리아의 교육제도는 같은 독일어권인 독일 및 스위스의 교육제도와 유사하다. 오스트리아의 직업교육훈련은 직업학교 중심의 직업교육과 산업현장 중심의 기업 현장실습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오스트리아의 중등 직업교육과 관련한 인재 정책과 직업교육훈련 연계 협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오스트리아의 직업교육과 일반 인문교육은 진학과 진로의 경로가 상호 연계되어 있고, 모든 청소년이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은 25세까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둘째, 직업중등학교(BMS) 졸업자는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학교 졸업보다 취업 전망이 좋으며, 평균적으로 직업중등학교 졸업 후 취업까지 3개월도 채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직업고등학교(BHS)나 일반고등학교(AHS)를 졸업한 것보다 직장생활로의 진입이 빠르다는 점이다.

셋째, 오스트리아의 중등 직업교육 및 이원화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연방

정부의 다양한 부처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들 정부부처는 연방교육부(Bundesministerium fur Bildung), 연방고용경제부(Bundesministeriums fur Arbeit und Wirtschaft), 연방경제에너지여행부Bundesministeriums fur Wirtschaft, Energie und Tourismus), 연방사회부(Sozialministerium) 등이다. 중등 직업교육에서 학교 중심의 직업교육은 연방교육부와 각 주정부에서 담당하며, 이원화 직업훈련 체계와 관련해서는 연방고용경제부가 중심이 되고 그 산하기관인 공공고용서비스(Arbeitsmarktservice)에서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사회부의 산하기관인 연방사회부서비스(Sozialministeriumservice)의 하위 부서에서 전문지원네트워크(Netzwerk Berufliche Assistenz)를 통해 18세까지의 의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지원한다. 이 부서에서는 청소년 코칭, 직업훈련 적합성 및 직업훈련과정 모듈과 조정 사무소를 제공한다. 연방사회부서비스(SMS)는 운영을 위한 필수 작업을 수행하고, 네트워크 제공 사항에 대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즉, 장애가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동시장에 지속가능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코칭 및 직업훈련Fit(AusbildungsFit)을 직업훈련과정 모듈에 따라 지원한다.

넷째, 이원화 직업훈련은 다양한 형태의 모듈로 실행된다. 이러한 다양한 모듈의 결합은 기업과 직업훈련생들에게 교육훈련을 보다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직업훈련생은 기본모듈과 선택한 주 모듈(기본 모듈+주 모듈)을 먼저 완료해야 한다. 그 후 최종시험을 치르고 직업훈련을 마칠 수 있다. 또한, 자격 있는 교사들과 직업훈련생들 사이의 또 다른 주 모듈(기본 모듈 +1)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메인 모듈 +2. 주 모듈 또는 특수 모듈(기본 모듈+주 모듈+특수 모듈)에 대해 합의한 후 훈련을 받는데 훈련 기간은 최대 4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오스트리아의 중등 직업교육훈련의 핵심인 이원화 직업훈련체계의 권한과 책임은 연방정부 수준과 주정부 수준, 지역 수준으로 분산되어 있다. 연방정부 수준에서 연방노동경제부(BMAW), 연방직업훈련 자문위원회(B-BAB), 연방교육·과학 및 연구부(BMBWF)가 중심 역할을 한다. 연방노동경제부(BMAW)는 기업 기반의 교육훈련 부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교육훈련제도의 법적 근거는 「직업훈련법(BAG)」에 규정되어 있다. 개별 교육훈련에 대한 훈련규정은 연방직업훈련자문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을 거쳐 연방노동경제부에서 만든다. 또한, 연방직업훈련자문위원회(B-BAB)의 위원은 사회적 파트너(오스트리아 경제상공회의소, 연방노동상공회의소)의 제안에 따라 연방노동경제부가 임명한다. 이 위원회에는 자문 역할을 하는 직업학교 교사도 포함된다. 연방직업훈련자문위원회는 연방노동경제부에 의견과 대안을 제시한다. 이와 달리 주정부 수준(Landesebene)에서 보면, 각 연방주의 경제회의소에 설립된 교육훈련사무소(Lehrlingsstellen)가 일차 직업훈련기관의 역할을 한다. 교육훈련사무소는 교육훈련기관의 내용과 인력의 적합성 및 교육 계약을 검토하며, 모든 교육훈련의 결과를 기록할 책임을 맡는다. 이 기관은 일반적으로 훈련생과 훈련회사의 이익을 위해 모든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조언을 보장해야 한다. 주정부 내의 지역 수준에 해당하는 기관은 직업훈련을 하는 회사와 직업학교이다. 이원화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회사의 직업훈련교사는 훈련생의 교육훈련에 대한 책임을 진다. 회사에서 훈련생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으며, 직업훈련교사의 지원을 받는다. 지역 단위에서 직업학교는 훈련회사와 직접 밀접한 접촉을 한다.

여섯째, 오스트리아는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수준에서 직업훈련생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 수

준의 지원은 직업훈련생을 위한 면접 지원, 가족수당 지원, 자유여행 및 여비 지원, 훈련생 해외 인턴십 홍보, 훈련생을 위한 코칭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고용서비스(AMS)는 훈련생을 위한 면접 지원으로, 현장실습기관에서의 면접에 대한 보조금(여행비, 숙박비, 식사비)도 제공한다.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받을 수 있다. 24세 미만의 성인 자녀는 직업훈련을 마친 경우(예: 현장실습과정 완료) 가족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유여행 및 여비의 경우 훈련생에게 집과 훈련장 간 일일 이동에 대해 무료 교통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경우 여비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직업훈련생이 교통수단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 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업훈련생 해외 인턴십은 유럽 국가의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몇 주간 해외에서의 인턴십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각 주정부도 연방정부 수준의 지원 정책에 근거하여 지역의 교육훈련 환경과 여건에 따라 직업훈련생이나 그 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중등 직업교육은 이원화 직업훈련체제를 중심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연계 협력이 체계화되어 있다. 상기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도 의무교육의 범주에서 모든 청소년이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교육 관련 법령에 보완하거나 기존의 관련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등단계에서 직업교육과 인문교육의 진로 경로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중등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거시적인 기존의 정부부처별 연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 상호 간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협력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등 직업교육이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기업현장실습 중심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도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상공회의소 및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지역의 산업 특성 및 인재 요구에 따라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인재 정책과 관련하여 중등 직업교육의 연계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협력과 재정 지원의 지속성 및 강화이다. 이를 위해 지역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인재양성이 요구된다. 또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하여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와 관련이 있는 부처들의 인적·물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4장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실태조사 및 분석

제1절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현황 설문조사
제2절 권역별(대경권, 호남권) 포럼 실시
제3절 소결 및 정리

제4장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실태조사 및 분석

제1절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현황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및 대상

본 조사는 직업계고와 기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것으로, 중등 직업교육이 지역 산업 및 교육 여건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목적 1: 직업계고가 지역의 산업 수요 및 여건을 어떻게 반영하여 직업교육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 목적 2: 현장 수요에 밀착된 교육을 위해 직업계고가 지자체, 지역 기업, 대학 등과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목적 3: 관계자들이 해당 협력체계와 관련하여 정책적 지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조사 대상으로 학교 부문은 대경권(대구, 경북) 및 전남권(광주, 전남)에

소재한 직업계고 130개교를 선정하였는데, 각 학교의 취업 및 진로·진학 업무 담당자(예: 취업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등)가 응답하였다. 기업 부문은 동일 권역 내 직업계고와 산학협력을 진행 중인 산업체 343개사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각 기업의 산학협력 업무 담당자가 응답하였다.

조사 대상의 구체적인 현황은 〈표 4-1〉과 같다.

〈표 4-1〉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인식조사 대상

(단위: 개교, 개소)

구분	모집단	표본 목표	조사 대상
학교	130개교	100개교	취업·진로진학 업무 담당자
기업	343개소	100개소	산학협력 업무 담당자

나. 조사 내용 및 설문지 구성

설문조사에 필요한 문항의 개발은 다음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직업교육 협력체계와 관련된 선행 질문지를 조사하였다(유진영 외, 2023, 162-164). 조사 결과, 전체적인 구조는 유용하였으나, 세부 문항은 본 연구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낮거나 활용이 어려운 것이 많았다. 참고 가능한 문항은 주로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과 관련된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구조를 참조하고, 일부 문항을 활용하되,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문항을 자체 개발하였다. 개발 문항은 설문 문항 담당 연구진 간의 두 차례 회의를 통해 1차 수정하였다. 그런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전체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학교용 설문지의 문항이 일반 특성화고 교사들의 실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경험 기반 응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용 설문지는 두 개의 파트로 구분하였다. 전반부는 모든 직업계고가 공통으로 응답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후반부는 '협약형 특성화고' 또는 '직업계고 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만 응답하도록 문항을 설계하였다.

기업용 설문지 역시 문항 난이도와 표현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문항의 표현과 항목 전반을 크게 수정하였다. 수정한 문항은 전체 연구진의 서면 검토를 거쳤으며, 현장교사 및 기업 관계자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 표현 방식과 응답 보기의 적절성을 추가적으로 조정하였다.

최종 확정한 설문 문항은 다음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의 운영 현황
- 협력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을 위한 요구 및 건의 사항

각 영역에 포함된 주요 문항의 내용은 〈표 4-2〉와 같다.

〈표 4-2〉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인식조사 설문 문항 구성

구분	설문 주요 내용	직업계고	기업체
Ⅰ.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에 대한 이해/인식	협력 운영 여부	●	●
	협력체계의 필요성 및 목적	●	●
	협력체계 참여 동기(학교/기업체)	●	●
Ⅱ.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운영 현황	협력체계 조직/인력, 예산, 활동 내용	●	●
	협력체계 운영 성과(만족도, 운영 효과 등)	●	●
	협력 프로그램의 문제점 파악 및 대응	●	
	지역인재 정책 및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도		●
	지자체의 협력위원회 참여 여부	●	●
	협력체계 체결 및 주요 활동		●

〈표 계속〉

구분	설문 주요 내용	직업계고	기업체
Ⅲ. 협력 프로그램 운영 현황	협력 프로그램의 중요도/용이성	●	
	협력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	
	협력 프로그램의 중도탈락 개선책	●	●
	협력 프로그램 매뉴얼, 사전교육, 계약서 등		●
	협력 프로그램 관련 업무 수행 태도 및 능력에 대한 인식		●
	각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 여부		●
Ⅳ.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을 위한 요구 사항 및 건의/제안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	●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
	지역사회(지자체, 지역)와의 협조 현황/협조 필요성	●	●
	지역사회(지자체, 지역)와의 당면 문제	●	●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원 사항 (중앙부처/교육청/지자체/산업체/기타 등)	●	●

주: 문항의 큰 틀과 일부 문항은 유진영 외(2023)를 참고하여 구성됨.

다. 조사 방법

설문조사는 학교용과 기업용으로 구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학교용 조사는 2025년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기업용 조사는 같은 해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하였다.

학교용 설문에는 130개 학교로부터 총 106명의 응답자가 참여하여 81.5%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응답자들이 속한 직업계고의 설립 유형은 국·공립이 61.3%, 사립이 38.7%이고, 학교 유형은 특성화고가 87.7%, 마이스터고가 12.3%였다. 학교의 소재 지역은 대경권이 56.6%, 호남권이 43.4%였고, 학교 규모는 재학생 수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학교가 40.6%로 가장 많았다. 주요 개설 학과는 공업계열이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인근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는 제조업이 49.1%로 나타났다.

기업용 설문은 직업계고와 산학협력 경험이 있는 343개사를 대상으로 진

행하였는데, 이 중 103개 기업이 응답에 참여하여 30.0%의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 기업의 소재 지역은 대경권이 68.0%, 호남권이 32.0%였고, 업종 분포는 제조업이 61.2%로 가장 많았다. 기업 규모는 종사자 수 1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기업이 68.9%로 가장 많았고, 매출 규모는 1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기업이 33.0%,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기업이 32.0%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 응답자 일반 현황은 〈표 4-3〉과 같다.

〈표 4-3〉 조사 응답자 일반 현황

(단위: 명, %)

직업계고 1)				기업체 2)			
구분		N	%	구분		N	%
설립 유형	국·공립	65	61.3	업종	제조업	63	61.2
	사립	41	38.7		비제조업	40	38.8
학교 유형	특성화고	93	87.7	기업 규모	300인 이상	4	3.9
	마이스터고	13	12.3		100~300인 미만	17	16.5
소재 지역	대경권(대구, 경북)	60	56.6		10~100인 미만	71	68.9
	호남권(광주, 전남)	46	43.4		10인 미만	11	10.7
학교 규모	300인 이상	41	38.7	소재 지역	대경권(대구, 경북)	70	68.0
	100~300인 미만	43	40.6				
	50~100인 미만	16	15.1		호남권(광주, 전남)	33	32.0
	50인 미만	6	5.7				
개설 학과	농생명산업	15	14.2	매출 규모	10억 미만	13	12.6
	공업	58	54.7		10억 이상~50억 미만	33	32.0
	상업정보	32	30.2		50억 이상~100억 미만	19	18.4
	수산·해운	2	1.9		100억 이상~500억 미만	34	33.0
	가사·실업	29	27.4		500억 이상	4	3.9
인근 지역 주요 산업	농업, 임업, 어업	33	31.1	-			
	제조업	52	49.1				
	전기관련업	6	5.7				
	건설업	1	0.9				
	음식점업	5	4.7				
	과학 기술 및 서비스업	9	8.5				
소계		106	100.0	소계		103	100.0
총계						209	

2.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인식조사 결과[41)]

가. 직업계고

1) 학교 현황

최근 3년간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살펴본 결과, 평균 취업률은 41.7%, 1년 이상 잔존율은 평균 52.4%, 평균 진학률은 41.8%로 나타났다(〈표 4-4〉 참고). 1년 이상 잔존율은 평균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 지속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4〉 최근 3년간 졸업생의 진로 현황

(단위: %)

구분	취업률		진학률	중도 탈락률	기타	합계
	취업률	잔존율				
2023년	43.1	51.1	42.8	2.5	11.7	100.0
2024년	42.7	53.7	43.3	2.6	11.4	100.0
2025년	39.2		39.3	2.3	19.2	100.0
평균	41.7	52.4	41.8	2.4	14.1	100.0

주: 해당 연도 4월 기준.

응답한 교사들의 학교 내 담당 보직은 '취업부장'이 7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보직 기간은 '6개월 미만'이 32.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년 이상 3년 미만' 30.3%, '3년 이상' 2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

41) 본 조사는 밀접한 직업교육 협력체계 조성을 위해 각 단위 주체에서 시행하거나 요구하는 미시적인 질문까지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보고서 분량의 한계로 결과 보고는 현 단계에서 보고서의 목적 및 결론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시적인 문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교적 최근에 보직을 맡은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높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도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5〉 학교 관계자 담당 보직 및 경력

(단위: 개교,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06	100.0
담당 보직	취업부장	81	76.4
	진로진학상담부장	9	8.5
	보직 없음	7	6.6
	기타	9	8.5
담당 보직 경력	6개월 미만	32	32.3
	6개월~1년 미만	9	9.1
	1년~3년 미만	30	30.3
	3년 이상	28	28.3

주: 1) 담당 보직: 기타 응답으로는 '취업기획', '취업지원관', '산학기획'이 있음.
2) 담당 보직 경력은 보직이 있는 경우(N=99)만 조사한 문항임.

2) 학교-지역 사업체-대학-지자체 협력 현황

지역 산업현장과 연계한 중등 직업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가 협력하고 있는 주요 주체로는 '지역 내 업체'(67.9%), '지역 내 교육청'(59.4%), '지역 내 지자체'(47.2%)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현장에서 중등 직업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체와의 직·간접적 연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청 및 지자체와의 제도적 협력도 일정 수준에서 병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4-6〉 참고).

〈표 4-6〉 중등 직업교육 협력기관

(단위: 개교, %)

구분	빈도	비율
지역 내 사업체와 협력	72	67.9
지역 내 대학(연구센터) 및 교육훈련기관과 협력	48	45.3
지역 내 지자체와 협력	50	47.2
지역 내 교육청과 협력	63	59.4
타 지역의 사업체와 협력	42	39.6
타 지역의 대학(연구센터) 및 교육훈련기관과 협력	27	25.5
협력하지 않고 있음	4	3.8

주: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하는 중복응답 문항임.

중등 직업교육 협력기관과의 협력 밀접도는 5점 만점 척도로 조사했는데, 응답자들은 '지역 내 교육청'과의 협력관계를 가장 밀접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05점). 그다음 '지역 내 대학(연구센터) 및 교육훈련기관'이 3.94점, '지역 내 사업체'가 3.83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직업교육 운영에 있어 교육청과의 행정적·제도적 연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어서 대학 및 연구기관, 산업체와의 실질적 협력도 일정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표 4-7〉 참고).

〈표 4-7〉 중등 직업교육 협력기관과의 밀접도

(단위: 개교, 점)

구분	사례 수	협력의 밀접도
지역 내 사업체	72	3.83
지역 내 대학(연구센터) 및 교육훈련기관	48	3.94
지역 내 지자체	50	3.74
지역 내 교육청	63	4.05
타 지역 사업체	42	3.74
타 지역 대학(연구센터) 및 교육훈련기관	27	3.63

주: 1) 학교-지역 사업체-대학-지자체 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만 조사한 문항임.
2) 라이커트(① 거의 교류가 없는 편 ↔ ③ 보통 ↔ ⑤ 매우 밀접) 점수 평균.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처음 계획한 주체를 살펴본 결과, '해당 업무 이전 담당 교사'가 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53.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본인'이 직접 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32.9%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경우 기존 교사의 계획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연속성과 조직 내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4-8〉 참고).

〈표 4-8〉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계획 수립자

(단위: 개교, %)

구분	빈도	비율
본인	25	32.9
해당 업무 이전 담당 교사	41	53.9
학교장	2	2.6
기타	8	10.5

주: 1)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만 조사한 문항임.
2) 기타 응답으로는 '전 교원', '취업부장', '관련학과 부장', '진로상담교사', '산학부장', '전문교과 교사', '교육협력부장'이 있음.

지역 기관과의 활동 운영에 투입된 예산 규모는 최소 0원에서 최대 2억 1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평균 예산은 약 1천8백만 원 수준이었다. 인력 규모의 경우 최소 0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분포하고, 평균 인력 수는 4.1명이었다. 이는 학교 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표 4-9〉 참고).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한 주요 경로를 살펴보면, '교육청' 예산이 32.9%로 가장 높고, 이어서 '대학'이 18.6%, '지자체'가 17.1%로 나타났다. 직업 교육협력 프로그램의 자원 확보에 있어 교육청의 역할이 가장 중심적이며, 고등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표 4-10〉 참고).

〈표 4-9〉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활동 운영 필요 자원

(단위: 개교, 천 원, 명)

구분	사례 수	최소	최대	평균
예산	76	0	210,000	18410.5
인력	76	0	30	4.1

주: 1)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만 조사한 문항임.

〈표 4-10〉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자원 확보 방법

(단위: 개교,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체	70	100.0	국가지원	6	8.6
교육청	23	32.9	자체예산	8	11.4
지자체	12	17.1	산업체	3	4.3
대학	13	18.6	무응답	8	11.4
지원 사업 공모	9	12.9	-	-	-

주: 1)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만 조사한 문항임.
2) 주관식 응답을 분류하여 정리한 내용임.

해당 프로그램을 현재까지도 운영 중인 학교는 전체 응답 학교 중 69개교로, 이는 전체의 90.8%에 해당한다(〈표 4-11〉 참고). 이는 상당수의 학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일회성 활동이 아닌 지속가능한 형태로 정착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는 주요 요인은 '활동 운영 예산 및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59.4%), '협력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담당 교사의 의지'(44.9%), '지역 사업체나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43.5%) 등으로 나타났다(〈표 4-12〉 참고).

〈표 4-11〉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현재 진행 여부

(단위: 개교, %)

구분	빈도	비율
예	69	90.8
아니요	7	9.2

주: 1)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만 조사한 문항임.

〈표 4-12〉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지속가능 이유

(단위: 개교, %)

구분	빈도	비율
학교장/학교감의 적극적인 지지	11	15.9
활동 운영 예산 및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41	59.4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19	27.5
지역 사업체/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30	43.5
협력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담당 교사의 의지	31	44.9
학생 및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	6	8.7

주: 1)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현재 지속하고 있는 경우만 조사한 문항임.
2) 2개를 선택하는 중복응답 문항임.

반면 프로그램을 중단한 학교는 주요 원인으로 '활동 운영 예산과 인력의 부족'(71.4%)을 꼽았다. 이는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가 재정적·인적 자원의 확보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다(〈표 4-13〉 참고).

〈표 4-13〉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중단 이유

(단위: 개교, %)

구분	빈도	비율
활동 운영 예산과 인력의 부족	5	71.4
지자체의 소극적 지원 또는 지원 부재	3	42.9
지역 사업체/대학의 소극적 참여 또는 불참	2	28.6
담당 교사의 의지 부족	2	28.6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과도한 요구 사항	1	14.3

주: 1)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중단한 경우만 조사한 문항임.
2) 2개를 선택하는 중복응답 문항임.

지역인재양성 협력체계 참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과반수 학교가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57.5%).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참여가 38.7%, ‘협약형 특성화고’ 참여가 8.5%였다. 두 사업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5곳이고, 이를 중복 없이 합산한 결과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총 45곳이었다(〈표 4-14〉 참고).

〈표 4-14〉 참여하고 있는 지역인재양성 협력체계(복수 응답)

(단위: 개교, %)

구분	빈도	비율
협약형 특성화고	9	8.5
직업교육 혁신지구	41	38.7
해당 없음	61	57.5

주: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는 중복응답 문항임.

이후 문항에 대한 분석은 협약형 특성화고 또는 직업계고 혁신지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 관계자 45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지자체, 지역 사업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에 참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6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협력체계의 참여 목적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 성과, 특히 취업과 직결된 것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응답한 비율이 20.0%로 나타나, 취업 외에도 교육 내용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15〉 참고).

〈표 4-15〉 지역인재양성 협력체계 참여 목적

(단위: 개교, %)

구분	빈도	비율
교육의 질 향상	9	20.0
지역 내 인력수요 파악	3	6.7
졸업생 취업률 제고	31	68.9
졸업생 지역 내 잔존율 제고	2	4.4

주: 지역인재양성 협력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만 조사한 문항임.

3)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운영 현황

협약형 특성화고 및 직업교육 혁신지구 참여 학교 중 산학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학교는 26개교로, 전체의 57.8%에 해당한다(〈표 4-16〉 참고). 이들 26개 학교 중 일부는 2개 이상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전체적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수는 총 33개에 달하고, 사용하는 명칭은 다양했다(〈표 4-17〉 참고).

〈표 4-16〉 산학협력위원회 설치 여부

(단위: 개교, %)

구분	빈도	비율
설치	26	57.8
미설치	19	42.2

〈표 4-17〉 산학협력위원회 명칭

(단위: 개교,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현장실습(운영)위원회	13	39.4	협약형특성화고운영위원회	1	3.0
산학협력(운영)위원회/협의회	5	15.2	중기청성과관리위원회	1	3.0
산학관 협의회	1	3.0	마이스터고재도약지원사업협의체	1	3.0
상생형일자리협의체	1	3.0	도제	1	3.0
산학협력컨설턴트	1	3.0	무응답	8	24.2

주: 산학협력위원회가 설치된 경우만 조사한 문항임.

산학협력위원회의 구성 형태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응답 학교 중 60.6%는 '전담부서가 있음'이라고 답했으나, '전담교사 1인만 보유'한 경우도 18.2%에 달했다. 아예 전담조직이나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도 21.2%로 조사되었다(〈표 4-18〉 참고). 이는 일부 위원회가 조직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18〉 산학협력위원회 전담인력 또는 전담조직 구성

(단위: 개교, %)

구분	빈도	비율
전담부서가 있음	20	60.6
전담교사 1인이 있음	6	18.2
없음	7	21.2

주: 산학협력위원회가 설치된 경우만 조사한 문항임.

협약형 특성화고 또는 직업계고 혁신지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 관계자 45명을 대상으로 전담조직 및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53.3%가 단위학교에 전담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담조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전담인력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35.6%에 달했다(〈표 4-19〉 참고). 이는 다수의 학교 관계자들이 협력체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인력 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19〉 지역인재양성 협력체계 전담인력/조직 필요성

(단위: 개교, %)

구분	빈도	비율
전담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함	24	53.3
전담조직은 필요 없으나, 전담인력만 필요함	16	35.6
둘 다 필요 없음	5	11.1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체계적인 업무분담을 위해'(79.2%)와 '교원의 업무 과중화'(66.7%)를 확인하였다. 이는 협력체계 운영이 단순한 부가 업무가 아닌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행정과 기획 역량을 요구하는 활동임을 보여주며, 이를 담당할 전문적인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표 4-20〉 참고).

〈표 4-20〉 지역인재양성 협력체계 전담조직 필요 이유

(단위: 개교, %)

구분	빈도	비율
체계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19	79.2
조직 내 위상을 위해	1	4.2
대외 기관과의 소통 용이	15	62.5
교원의 업무 과중화	16	66.7
추수 지도 및 학생 직장 적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15	62.5
취업 사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4	58.3

주: 1) 지역인재양성 협력체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만 조사한 문항임.
2)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는 중복응답 문항임.

학교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확실히 아는 응답자는 31.1%뿐이었다(〈표 4-21〉 참고). 알고 있는 응답자 중 참여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42.9%에 불과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 측에서도 그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은 높지 않은 것이다.

〈표 4-21〉 지자체 중등 직업교육 협력위원회 운영 여부

(단위: 개교, %)

구분	빈도	비율
예	14	31.1
아니요	5	11.1
모름	26	57.8

다시 말해, 협력구조가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으나, 학교 측 참여 부족으로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협력위원회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 유도 방식, 실질적인 역할 부여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4)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현황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5점 만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표 4-22〉와 같다.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항목은 '협력업체 모집'과 '협력업체 참여'로 각각 3.71점이다. 그다음으로는 '전담인력 확보'가 3.67점, '인적교류(교·강사)'가 3.62점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협력체계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을 위한 파트너와 인력 확보, 그리고 실행 주체 간의 교류가 주요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2〉 지역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문제 정도

(단위: 개교, 점)

협력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	문제 정도	협력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	문제 정도
협력업체 모집	3.71	소요 재원 확보	3.38
협력업체 참여	3.71	전담인력 확보	3.67
학교 교육과정 연계	3.49	인적교류(교·강사)	3.62
실습과정 설계	3.27	기대보다 낮은 학습 효과	3.16
실습과제 운영·관리	3.22	-	-

주: 1) 문제 정도: 라이커트(① 전혀 아님 ↔ ③ 보통 ↔ ⑤ 매우 그러함) 점수 평균.

지역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교 담당자가 느끼는 문제의 정도를 5점 만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표 4-23〉과 같다. 가장 문제가 크다고 인식한 항목은 '학생 관리의 어려움'(3.80), '학교 전담인력의 부재(3.67)',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과다한 규제 조항'(3.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력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 관리체계의 정비와 함께, 행정 부담 완화 및 전담인력 확보가 중요한 개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23〉 지역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문제점

(단위: 개교, 점)

협력 프로그램의 문제점	문제 정도	협력 프로그램의 문제점	문제 정도
학생 관리의 어려움	3.80	지자체 협조 부족	3.51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과다한 규제 조항	3.67	(센터, 지자체, 기업, 학교의) 운영상 참여 및 경험 부족	3.44
학교 전담인력의 부재	3.67	학생 및 학부모 수요 부족	3.44
성과관리체계(양적 및 질적 평가)의 부재	3.60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프로그램의 낮은 만족도	2.91
기업 전담인력의 부재	3.58		

주: 문제 정도: 라이커트(① 전혀 그렇지 않음 ↔ ③ 보통 ↔ ⑤ 매우 그러함) 점수 평균.

지역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협력 사업장과 연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학생 수요 또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산업체 선정'(48.9%), '기업체의 학생 요구 역량 미스매치'(40.0%), '직업계고와의 교육협력에 대한 산업체 측의 부정적 인식'(31.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4-24〉 참고). 이러한 결과는 산업체와의 연계 과정에서 학생의 진로 적합성, 기업의 협력 인식, 교육과 산업 간 기대 수준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교한 매칭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4-24〉 지역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사업장 연계 시 어려운 점

(단위: 개교, %)

구분	빈도	비율
학생 수요 또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산업체 선정	22	48.9
기업체의 학생 요구 역량 미스매치	18	40.0
직업계고와의 교육협력에 대한 산업체 측의 부정적 인식	14	31.1
산업체의 열의 및 호응 부족	11	24.4
산업체 협력 인력풀 관리의 부재	9	20.0
산업체에 관한 정보 및 네트워크 부족	9	20.0
사업 담당자의 인센티브 부족	6	13.3
기타	1	2.2

주: 1) 2개를 선택하는 중복응답 문항임.
2) 기타 응답으로는 '군복무 문제'가 있음.

5) 지역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활성화)을 위한 요구

지역 중등 직업교육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 필요성, 효과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조 정도에 대한 인식을 각각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표 4-25〉와 같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 프로그램이 실제로 교육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현장의 인식을 보여준다. 다만, 지역사회의 협조 정도에 대한 인식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협력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에 비해 지역사회, 특히 산업체나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25〉 지역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운영 필요도, 운영 효과, 지역사회 협조 정도

(단위: 개교, 점)

구분		사례 수	운영 필요도	운영 효과	지역사회 협조 정도
프로그램	협약형 특성화고	106	3.67	3.63	3.32
	직업교육 혁신지구	106	3.74	3.69	3.38
	그 외 지역협력 프로그램	106	3.75	3.69	3.46

주: 1) 운영 필요도: 라이커트(① 매우 불필요함 ↔ ③ 보통 ↔ ⑤ 매우 필요함) 점수 평균.
2) 운영 효과: 라이커트(① 전혀 없음 ↔ ③ 보통 ↔ ⑤ 매우 있음) 점수 평균.
3) 지역사회 협조 정도: 라이커트(① 전혀 안 됨 ↔ ③ 보통 ↔ ⑤ 매우 잘 됨) 점수 평균.

지역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표 4-26〉과 같다. 먼저 산업체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참여 기업에 대한 정책 인센티브 적용'이 4.3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 참여 확대'와 '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프로그램 참여 확대'가 각각 4.25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산업체

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유인과 협력 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위학교 및 교원과 관련해서는 '전담인력 강화'가 4.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장 및 교원의 적극적 열의'가 4.39점,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 역량 강화'가 4.3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내부의 인적 자원과 조직 역량이 협력체계의 지속성과 성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원체제와 관련해서는 '참여 산업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 강화'가 4.41점으로 가장 높았고, '우수 산업체-특성화고 연계 지원 강화'는 4.37점, '운영경비 지원'은 4.3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적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과 산업체-학교 간 연계의 질적 향상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

전체 항목 중에서는 '전담인력 강화'에 대한 인식 정도가 4.43점으로 가장 높았고, '참여 산업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 강화'가 4.41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협력체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교 내부의 실행 역량 확보와 외부 산업체의 유인책 마련이 동시에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4-26〉 지역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강화 추진과제 필요성

(단위: 개교, 점)

구분		사례 수	추진 필요성
산업체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 참여 확대	106	4.25
	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전담인력 참여 확대	106	4.14
	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프로그램 참여 확대	106	4.25
	참여 기업에 대한 정책 인센티브 적용	106	4.34
단위학교 및 교원	학교장 및 교원의 적극적 열의	106	4.39
	혁신적인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교육 프로그램	106	4.32
	전담인력 강화	106	4.43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 역량 강화	106	4.33
	산업체 협력 매뉴얼 개발 및 관련 규정 세분화	106	4.08
지원 체제	지역 주도의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지원 구심체 구축	106	4.26
	우수 산업체-특성화고 연계 지원 강화	106	4.37
	참여 산업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 강화	106	4.41
	운영경비 지원	106	4.35
	대학과의 통합적 운영	106	3.83

주: 추진 필요성: 라이커트(① 매우 불필요함 ↔ ③ 보통 ↔ ⑤ 매우 필요함) 점수 평균.

지역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한 정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프로그램 유형에서 평균 4점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27〉 참고).

〈표 4-27〉 지역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조 필요성

(단위: 개교, 점)

구분		사례 수	협조 필요성
프로그램	협약형 특성화고	106	4.16
	직업교육 혁신지구	106	4.16
	그 외 지역협력 프로그램	106	4.09

주: 협조 필요성: 라이커트(① 매우 불필요함 ↔ ③ 보통 ↔ ⑤ 매우 필요함) 점수 평균.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중등 직업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를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산업체 부족'으로 61.3%에 달했다. 이는 직업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실습, 취업 연계 등에서 지역 내 산업기반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표 4-28〉 참고). '학생 수 감소'라고 응답한 비율은 46.2%로, 지역 인구 감소와 연계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와 맞물려 직업계고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중등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산업체와의 협력 확대뿐 아니라, 지역 차원의 인구·산업 정책과 연계된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4-28〉 지역사회에서 중등 직업교육이 당면한 문제

(단위: 개교, %)

구분	빈도	비율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학교 교육과정 및 구조	19	17.9
학교와 지역사회 간 상호 협력 경험 부족	26	24.5
산업체 부족	65	61.3
학생 수 감소	49	46.2
열악한 정주 환경	24	22.6
사회적 인식 및 관심 부족	28	26.4

주: 2개를 선택하는 중복응답 문항임.

응답자들은 중앙부처, 교육청, 지자체, 산업체 등 다양한 주체에게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사항을 제안하였는데, 자유 응답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29〉 참고). 전체적으로 보면, 응답자들은 단위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협력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다양한 주체의 정책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표 4-29〉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항

구분	내용
중앙 부처	• 예산 편성 확대, 특별교부금 예산 지원(3) • 정부 산하기관의 고졸 공채 확대 및 산업체 확보(2) • 업무 처리 규정 완화 및 행정업무 감소(2) •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 개발(2) • 현장실습 및 취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2) • 대기업, 공공기관 현역별 산업기능요원 운영(1) • 농업 분야 지자체, 교육청, 산업체 간담회(1) • 학교 전담노무사 배치 시 소재 지역 노무사 배정 필수화(1) • 현장실습 수료생 특혜 제도(1)
교육청	• 전담인력 충원 및 전문인력풀 확보/안내(5) • 지역 특성과 학생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및 연계 강화(2) • 실습비 전액 지원(1) • 공모 사업에 대한 대응 투자(1) • 조기 취업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사 연수(1) • 고졸 채용 산업체 확보 및 채용설명회 개최(1)
지자체	• 청년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원 정책(6) • 학교-산업체 매칭, 고졸 채용 산업체 확보(4) • 직업계고 예산 지원 확대 및 시설 지원(3) • 직업교육 관련 전담 소통 창구 마련, 협의체 구성(3) • 지역 산업체 전문가 인력풀 확보 및 홍보(1)
산업체	• 고졸 채용 인력 확대(5) •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한 인식 제고(4) • 교육과정 공동 개발, 현장실습 협력(3) • 일자리의 질 제고(동일 직무 동일 임금, 고용안정, 차별금지 등)(2) • 지역 내 학교 인력 우선 채용(1)
기타	•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학교 교직원 보상제도

주: 1) 자유 응답을 분류하여 정리한 내용임.
2) ( ) 안의 숫자는 응답 수임.

나. 기업체

1)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 현황

최근 3년간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업과 협력한 학교 수를 살펴

보면, 2023년과 2024년에는 평균 1.2개교, 2025년에는 평균 1.0개교이다(〈표 4-30〉 참고).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중 정식 채용으로 이어진 비율은 전체의 약 4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1년 이상 근속한 인원은 이보다 더 적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가 실제 고용 성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시사하며, 취업 연계와 지속적인 고용 유지 간의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표 4-30〉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 현황

(단위: 개교, 명)

연도	참여 학교 수	참여 학생 수	정식 채용한 인원	1년 이상 잔존한 인원
2023	1.2	2.8	0.8	0.7
2024	1.2	3.1	0.7	0.6
2025	1.0	2.0	0.4	0.3

2)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에 대한 이해/인식

지역기반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에 기업이 참여하게 된 경로를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직업계고의 요청'(69.9%), '회사의 필요에 의해 신청'(15.5%) 순이다(〈표 4-31〉참조). 이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주로 학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이 협력 대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기보다는 학교 측의 제안에 따라 협력이 성사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표 4-31〉 프로그램 참여 경로

(단위: 개사, %)

구분	빈도	비율
직업계고의 직접 요청	72	69.9
유관기관(지자체, 시·도교육청,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연계	14	13.6
회사의 필요에 의해 신청	16	15.5
기타	1	1.0

지역기반 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5%가 '우수한 인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라고 답했고, '인력 충원이 용이하기 때문에'라는 답도 26.2%였다(〈표 4-32〉 참고). 이는 기업이 협력 프로그램을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직접적인 인재 확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32〉 프로그램 참여 이유

(단위: 개사, %)

구분	빈도	비율
우수한 인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50	48.5
인력 충원이 용이하기 때문에	27	26.2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를 위하여	6	5.8
지원금/인센티브	9	8.7
사회 환원 및 지역사회 봉사 측면에서	7	6.8
이미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타 기업의 추천(또는 효과 확인)	3	2.9
기타	1	1.0

주: 1) 기타 응답으로는 '참여 학생 직무교육 효과'가 있음.

3)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운영 현황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업계고 수는 평균 1.5개교이고, 3년간 정규 교류 횟수는 평균 5.6회이다(〈표 4-33〉 참고). 이

는 대부분의 기업이 한두 곳의 학교와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33〉 협력 현황

(단위: 개사, 개교, 회)

구분	사례 수	평균
협력관계 유지 직업계고 수	103	1.5
협력 학교와의 연간 교류 횟수	103	5.6

교육기관과의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구성 형태를 살펴본 결과,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겸직'하고 있다는 응답이 40.8%, '직업계고 관련 전담인력이 업무를 담당'한다는 응답이 34.0%, '업무 관련 개별 부서에서 담당'한다는 응답도 21.4%이다(〈표 4-34〉 참고).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이 개별 직원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협력의 지속성과 체계화를 위해 기업 내부의 전담조직 또는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해석할 수 있다.

〈표 4-34〉 관련 업무 담당자

(단위: 개사, %)

구분	빈도	비율
다른 업무 담당인력이 겸직	42	40.8
직업계고 관련 전담인력이 담당	35	34.0
업무 관련 개별 부서에서 담당	22	21.4
담당인력 없음	4	3.9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기업이 인식하는 수준을 6점 만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직업계고의 적극성'에 대한 평가는 평

균 4.8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표 4-35〉 참고). 반면, '지자체 지원의 수준'에 대한 평가는 평균 4.0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지역 단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4-35〉 직업계고의 적극성 및 지자체 지원 수준

(단위: 개사, 점)

구분	사례 수	평균
직업계고의 적극성	103	4.85
지자체 지원의 수준	103	4.01

주: 1) 직업계고의 적극성: 라이커트(① 매우 소극적임 ↔ ⑥ 매우 적극적임) 점수 평균.
2) 지자체 지원의 수준: 라이커트(① 매우 부족함 ↔ ⑥ 충분함) 점수 평균.

4) 지역기반의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참여 동기에 대해 기업 관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전공 분야 현장체험 및 기술 습득'이 35.0%, '졸업 후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산업체 취업'이 34.0%, '직업 탐색·준비'가 20.4%이다(〈표 4-36〉 참고). 이는 여러 학생들이 실제 산업현장을 경험하고, 기술을 익히려는 실질적 동기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나, 일부는 보다 초기 단계의 진로 모색 차원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36〉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

(단위: 개사, %)

구분	빈도	비율
졸업 후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산업체 취업	35	34.0
전공 분야 현장체험 및 기술 습득	36	35.0
직업 탐색·준비	21	20.4
경제적 이유	8	7.8
기타	3	2.9

주: 기타 응답으로는 '병역특례'가 있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 유형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전공 분야 단순 업무'로 46.6%였고, 그다음이 '전공 분야 기능 및 기술 활용 업무'로 39.8%였다(〈표 4-37〉 참고). 학생들을 실습 과정과 무관한 업무에 배치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며, 학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37〉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수행 업무

(단위: 개사, %)

구분	빈도	비율
전공 분야 기능 및 기술 활용 업무	41	39.8
전공 분야 단순 업무	48	46.6
비전공 분야 기능 및 기술 활용 업무	4	3.9
비전공 분야 단순 업무	9	8.7
학교교육 현장실습	1	1.0

지역기반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업이 느끼는 주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연수 후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이 25.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직원 중 실습훈련 담당인력 배정의 어려

움'(24.3%)과 '낮은 정주율'(20.4%) 순이었다(〈표 4-38〉 참고).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프로그램 참여 자체보다는 실질적인 운영 부담과 이후의 지속성 문제를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고, 프로그램 설계 시 채용 연계 강제성 완화, 실습지도 인력에 대한 기업 지원, 지역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4-38〉 프로그램 참여 시 문제점

(단위: 개사, %)

구분	빈도	비율
직원 중 실습훈련 담당인력 배정의 어려움	25	24.3
연수 후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	26	25.2
낮은 정주율	21	20.4
산·학·연·관 협력 시설의 부재	10	9.7
참여 기관(기업체, 지자체, 학교 등) 간의 협력 부족	10	9.7
기타	11	10.7

주: 기타 응답으로는 '학생의 업무 능력 및 현장 적응', '훈련 시간 부족', '매출 감소', '과정평가 기준 높음' 등이 있음.

향후 지역기반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89.3%,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0.7%였다(〈표 4-39〉 참고). 즉,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이다.

〈표 4-39〉 향후 지역기반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의향

(단위: 개사, %)

구분	빈도	비율
계속 운영할 예정임	92	89.3
운영을 중단할 예정임	11	10.7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이 제시한 주요 이유는 다양하였다(〈표 4-40〉 참고). 협력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 여건, 채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유연한 참여 모델과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 사전 준비가 잘된 학생의 참여 구조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4-40〉 지역기반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중단 이유

(단위: 개사, %)

구분	빈도	비율
해당 사업이 기업의 참여 목적에 부응하지 못해서	3	27.3
직업계고생의 채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2	18.2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건이 부족해서	2	18.2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에	1	9.1
참여 학생이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9.1
기업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1	9.1
참여 학생의 직무능력이 부족해서	1	9.1

주: 향후 지역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할 예정인 경우만 조사한 문항임.

5)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건의/제안

지역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추진과제를 주제별로 살펴본 결과, 산업체, 단위학교 및 교원, 그리고 지원체제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표 4-41〉 참고). 전체적으로 협력 참여 주체의 다양화와 안정적인 운영 여건 마련을 지역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먼저 산업체 차원에서는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 참여 확대'가 5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협력 프로그램이 일부 산업체에 편중되기보다,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으로 참여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

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학교 및 교원 차원에서는 '산업체 요구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노력'이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과정이나 학생의 역량이 실제 산업현장의 수요와 보다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원체제 차원에서는 '운영경비 지원'이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 외에도 '참여 산업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 강화'가 46.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과 참여 유인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41〉 지역 협력체계 활성화 추진과제 필요 정도(기업 관계자)

(단위: 개사, %)

구분		빈도	비율
산업체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 참여 확대	55	53.4
	산업체의 지역 협력 프로그램 참여 확대	44	42.7
	산업체의 지역 협력 프로그램 전담인력 참여 확대	27	26.2
단위학교 및 교원	산업체 요구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노력	47	45.6
	혁신적인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교육 프로그램	33	32.0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 역량 강화	28	27.2
	학교장 및 교원의 적극적 열의	24	23.3
	전담인력 강화	24	23.3
지원체제	운영경비 지원	52	50.5
	참여 산업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 강화	48	46.6
	우수 산업체-특성화고 연계 지원 강화	34	33.0
	지역 주도의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지원 구심체 구축	23	22.3
	관련 대학과 체계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운영 방식	21	20.4

주: 1) 주제별로 하나 이상을 선택한 중복응답 문항임.

기업의 지역기반 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필요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높은 수준으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42〉 참고).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한 항목은 '우수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참

여 산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법인세 감면 등)'으로 평균 4.39점이고,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우대권 부여'가 평균 4.30점, '지역 주도 사업 산업체 선정 시 가산점 부여'가 4.23점 순이었다. '우수 지역인재 정책 참여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추천 확대'도 4.0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 외에도 기업들이 자유 응답으로 제안한 인센티브 항목에는 '직접 보조금 지원', '업체에 부과되는 제도적 페널티 조정', '학생 지도에 참여하는 담당 멘토 지원' 등도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운영 부담 완화와 지원 인프라 강화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기업의 인식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표 4-42〉 지역 내 협력 프로그램 인센티브 필요 정도

(단위: 개사, 점)

구분	사례 수	평균
우수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산업체 세제 지원(법인세 감면 등)	103	4.39
중소기업 지원 사업 우대권 부여	103	4.30
지역 주도 사업 산업체 선정 시 가산점 부여	103	4.23
우수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산업체 대상 병역지정업체 추천 확대	103	4.09

주: 1) 라이커트(① 매우 불필요함, ② 불필요함, ③ 보통임,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점수 평균.
2) 이 외에 필요한 인센티브로는 '직접 보조금 지원', '업체에 대한 페널티 조정', '담당 멘토 지원'이 있음.

기업체의 중등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프로그램은 '협약형 특성화고'로 83.5%의 기업이 참여 의향을 나타냈다. 이어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36.9%이고, '그 외 자체적인 프로그램'은 1.9%이다(〈표 4-43〉 참고).

다만, 이와 같은 결과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

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협약형 특성화고와 직업교육 혁신지구의 시행 시기가 다르고, 전남권에는 직업교육 혁신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응답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참여 의향이 단순한 선호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표 4-43〉 중등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단위: 개사, %)

구분	빈도	비율
협약형 특성화고	86	83.5
직업교육 혁신지구	38	36.9
그 외 자체적인 프로그램	2	1.9

주: 1) 모두 선택 가능한 중복응답 문항임.
2) 기타 응답으로는 '일학습병행(도제)'이 있음.

기업체가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치한 지역사회(지자체 및 지역교육청)를 중심으로 직면한 문제를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지자체 지원 부족(41.7%)'이다(〈표 4-44〉 참고). 다음으로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학교 교육과정 및 구조'가 36.9%, '학생 역량 부족'이 34.0%이다. 이 결과는 기업이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측면과, 학교의 준비 수준이나 교육 품질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향후 협력체계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행정기관의 실질적 역할 강화와 학교-산업체 간의 교육 내용 연계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44〉 사업 운영 시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

(단위: 개사,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지자체 지원 부족	41.7	잦은 이직	23.3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학교 교육과정 및 구조	36.9	학교와 지역사회 간 상호 협력 경험 부족 (지자체-교육청-산업체 간 상호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미흡)	23.3
학생 역량 부족	34.0	낮은 정주율	14.6
인구 감소	25.2	기업의 매출 감소	1.0

주: 1) 2개를 선택하는 중복응답 문항임.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인재(인력)양성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한 지원 사항을 분류해 본 결과,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항목은 '참여 기업 및 학생에 대한 보조금 확대'로 44.4%이다(〈표 4-45〉 참고). 이는 기업과 학생 모두에 대한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이 프로그램 참여 지속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학생의 직무 수준 향상 및 참여 의지 제고'에 대한 요구가 22.2%인데, 이는 현장 투입이 가능한 수준의 실무 역량 강화와 더불어, 학생 스스로의 진지한 참여 태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지도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학·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14.8%로 나타나, 협력 주체 간 정보 교류와 역할 분담, 책임 있는 운영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다.

〈표 4-45〉 지역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단위: 개사,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참여 기업 및 학생에 대한 보조금 확대	44.4	훈련 시기 및 시간 조정	7.4
학생의 직무 수준 및 참여 의지	22.2	행정적 절차 및 관리감독 간소화	7.4
산·학·관의 유기적 협력	14.8	프로그램 개발	3.7

주: 자유 응답을 분류하여 분석함.

제2절 권역별(대경권, 호남권) 포럼 실시

1. 관계자 포럼 개요

가. 포럼 내용 및 방법

○ (개요) 중앙(교육부 등 정부부처) 및 지역(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등)의 인재양성과 지원 및 직업교육 정책 담당자,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기반 인재 정책 운영 현황,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 사례 및 실태 파악을 통한 쟁점을 도출하고자 함.

- (논의 주제) 대경권과 호남권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기관 협력체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포럼 구성·운영(안)

- 1차 포럼(대경권) 구성: 좌장 유진영 과제책임자 포함 총 10명 참석
  - 위원: 박○○(경북 지역 인적자원 전문가), 최○○(경북 지역 직업계고 전문가), 조○○(경북 지역 사업체 운영, 특성화고 졸업생), 김○○(대구 지역 행정전문가), 김○○(경북 지역 연구전문가), 유진영·변숙영·김미란·서유정·정준서(이상 직능연 연구진)
- 2차 포럼(호남권) 구성: 좌장 유진영 과제책임자 포함 총 10명 참석
  - 위원: 문○○(광주 지역 교육전문가), 최○○(광주 지역 학교전문가), 강○○(광주 지역 행정전문가), 이○○(전남 지역 인적자원 전문가), 박○○(전남 지역 교육전문가), 안○○(전남 지역 행정전문가), 유진영·전종호·서유정·정준서(이상 직능연 연구진)
- 운영: 각 권역별로 1회씩 포럼 개최를 계획하고 추진함.

- 포럼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후 포럼에 참석한 지역의 지자체, 교육청, 산업계 전문가 및 직능연 연구진이 해당 포럼 주제와 관련하여 토론함.
  • 위원 발제 및 자유 토론

나. 포럼 사업 논의 주제(안)

○ 논의 주제(안)

- 권역별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의 협력체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및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주제를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논의

(공통 질문: 필요성 관련)

1. 직업교육(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정책과 관련하여 대구·경북권(혹은 광주·전남권) 수준에서 정책협의체나 협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등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지자체, 유관기관, 정책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거나 구축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형태와 운영 방식, 주요 성과나 한계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등 직업교육의 관점에서 소속 지역의 지자체, 학교, 지역사회 간의 협력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와 부족한 분야를 나누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 방안 관련)

4. 현재 중등 직업교육 관련 협의체나 네트워크가 부재하다면, 기존에 이에 대한 필요성이나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까? 있다면 그 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 각자(참석한 담당자들)의 입장에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협의체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문제의식, 경험(좋은 사례)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표 4-46〉 2025년 권역별(대경권, 호남권) 관계자 포럼 개요

권역	일정	포럼 주제	발제자
대경권	7. 8. (화)	■ 지역의 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 - 대구·경북 지역 사례조사 포럼 -	박○○
			최○○
			조○○
			김○○
			김○○
호남권	7. 15. (화)	■ 지역의 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 - 광주·전남 지역 사례조사 포럼 -	문○○
			강○○
			최○○
			이○○
			박○○
			안○○

○ 포럼 진행 순서

- 1차 대경권 포럼: 2025. 7. 8.(화)

시간	세부 내용	비고
12:30-14:00	포럼 사전협의 및 행사장 준비	
14:00-14:10	참석자 등록	
14:10-14:30	연구 및 포럼 개요와 목적 공유	유진영 연구위원 (과제책임자)
14:30-15:30	참석자 발표 및 질의응답 박○○(경북 지역 인적자원 전문가) 최○○(경북 지역 직업계고 전문가) 조○○(경북 지역 사업체 운영, 특성화고 졸업) 김○○(대구 지역 행정전문가) 김○○(경북 지역 연구전문가)	참석자별 10분 내외
15:30-16:30	종합 토론	
16:30-	폐회	

- 2차 호남권 포럼: 2025. 7. 15.(화)

시간	세부 내용	비고
11:00-13:00	포럼 사전협의 및 행사장 준비	
13:00-13:30	참석자 등록	
13:30-13:40	연구 및 포럼 개요와 목적 공유	유진영 연구위원 (과제책임자)
13:40-14:30	광주 지역 참석자 발표 및 질의응답 문○○(광주 지역 교육전문가) 최○○(광주 지역 학교전문가) 강○○(광주 지역 행정전문가)	참석자별 10분 내외
14:30-14:40	휴식	
14:40-15:30	전남 지역 참석자 발표 및 질의응답 이○○(전남 지역 인적자원 전문가) 박○○(전남 지역 교육전문가) 안○○(전남 지역 행정전문가)	참석자별 10분 내외
15:30-16:00	종합 토론	
16:00-	폐회	

2. 관계자 포럼 운영 결과

가. 대경권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 방안

○ 포럼 개요

- 일시: 2025년 7월 8일(화) 12:30~17:00
- 장소: 동대구역 역사 회의실 2
- 참석자
  - 대구광역시: 김○○, 조○○
  - 경상북도: 김○○, 최○○, 박○○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진(5): 유진영, 변숙영, 김미란, 서유정, 정준서

○ 포럼 운영계획 소개

- (운영) 연구진 및 참석자 소개, 연구 개요 및 포럼 주제와 진행 사항 공유
  - 대구와 경북 지역별로 참석자 발제 및 자유 토론
  - 현안 발생 시 관련 추가 주제 논의
- 논의 주제
  - 대경권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의 협력체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및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주제를 선정하여 심층 논의

○ 발제 1. 대구·경북권의 직업교육 정책 현황 및 이와 관련하여 대구·경북권 수준에서 정책협의체나 협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방안 논의(이하 발제 제목 생략, 경북 지역 지역행정연구 전문가 김○○)

경북 지역 지역행정연구 전문가인 김○○은 정책협의체 구축 필요성 및 그 이유로 지역 산업구조와 학교 간 미스매치 해소, 마이스터고 중심의 고용성과 편중, 광역권 단위 산업협력 수요 증가, 산·학·관 거버넌스 필요 등을 들었고, 해결을 위해 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주체별 협의체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답하였다. 특히, 경북은 농산어촌 지역이 많고 지역별 학교 수가 제한적이어서 권역 단위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 과제 해결이 필수적이며, 이에 광역권 단위 정책 공조(대구-경북 RISE, 대경권 AI 캠퍼스 등)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중등 직업교육도 시·도 간 연계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대구·경북기능협의회, 대경산학협력포럼 등 지역 인력양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경북도교육청-경북도청-경북TP-경북산학협력단체 연계 MOU 체결(2022~)을 통해, 직업계고 인재의 취업 연계, 기업 현장실습 확대,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도내 일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산업체 연계형 교육과정 도입 등 성과를 도출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보았다. 이뿐만 아니라 2024년 경북형 RISE 기반 직업교육 혁신 논의(도-교육청 공동연구) 역시 RISE 추진 대학(금오공대, 한동대 등)과 고교·전문대 간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시·군 간 협업보다는 단위 시·군 및 학교 중심 협력에 그치고 있고 주로 대학교 및 산업체 위주로 운영되며,

직업계고 연계는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이 때문에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연계는 초기 논의 수준이고, 직업계고 중심 네트워크 수준으로는 미흡한 상태이며,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는 미비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예산 및 부처 간 역할 조정 문제 등에 기인하며, 그로 인해 중장기적 직업역량 육성 및 진로설계, 교육과정 공동 개발, 지역 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연계형 교육과정 재설계, 지자체 간 정보 공유 및 성과 확산 체계, 중등 직업교육 졸업자 지속 지원, 지자체와의 예산 협조 등을 미흡한 분야로 제시하였다. 직업교육 협의체 논의 여부 및 필요성 인식도 상황은 비슷하여 경북교육청 차원에서 '산업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협의체' 소규모 시범 운영, 구미산단과 연계한 특성화고 직무 재설계 필요성 논의 등 일부 직업교육 협의체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구조화가 이루어지지는 못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 및 중간 매개조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지자체는 교육정책 주체가 아니지만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책임이 커지고 있고, 교육청은 산업과의 거리감이 있어 고졸 취업 인프라 연계가 쉽지 않아 '지역 직업교육 협의체'와 같은 양측의 중간 매개조직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좋은 사례로 '경북 원자력마이스터고-한수원-울진군 협력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델은 졸업 후 지역 내 원자력 분야 취업 연계 체계 구축(교육-기업-지자체 3자 협약, 취업 약정 MOU → 취업률 제고), 주요 원전 관련 기업(한수원, 한전KPS, 포뉴텍 등)과의 MOU 체결, 졸업생의 200% 취업수요 확보, 2022년 기준 취업률 92.9% 달성 등이 특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공기업 및 대기업 취업자 비율이 높으며, 글로벌 현장실습 및 해외취업, UAE 원전현장 파견 및 미국 인턴십 등을 통해 해외 글로벌 실습·취업 연계 모델을 실현하는 등 바람직한 협력체계의 사례라고 언급하

였다. 부산광역시 직업교육지원센터 및 기업연계형 취업 지원 거버넌스, 경기도교육청 주관의 '고졸 취업 지원단'과 같이 기업·학교·대학·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대구와 경북 역시 대구·경북형 '중등 직업교육협의회' 모델 도입(광역권 단위 '교육청-지자체-산업계-대학-TP' 연계 거버넌스 설계), Glocal/RISE 사업과 연동(지역인재 생애이음 전략, 기술사관육성사업 후속 모델), 독일 BIBB(연방직업교육연구소) 모델[42]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법제화된 플랫폼 구축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국가 수준의 '직업교육법 기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 발제 2. 경북 지역 학교전문가 최○○

경북 지역 학교전문가인 최○○은 정책협의체 구축 필요성 및 그 이유로 광역 단위에서 지역 산업 특성과 인력수요를 고려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들었다. 지방의 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이 학교 졸업 후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산·학이 협력하여 발전적인 인재육성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현장 밀착형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생이 지역의 기업에 취업하여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은 학교와 협력하는 등 필요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적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42) ① 직업훈련 표준화 및 자격 설계(각 직업군별로 산업계·노동조합·주정부·교육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여 자격 기준과 직무 내용 설정), ② 이원제(Dual System) 운영 지원(학교+기업 병행교육체계를 설계하고 조정), ③ 정책 개발 및 자문, ④ 기업·학교·정부 간 협의 플랫폼, ⑤ 국제협력과 글로벌 컨설팅의 핵심 거버넌스 구조와 정책 조정 기능을 가짐.

하지만 기존 협의체 구축 시도 및 성과·한계 역시 지적하였다. 현재 대구·경북에 지자체, 유관기관, 정책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나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해 학생의 진로 희망, 기업의 요구 인재상, 지역 정주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이 미흡하다고 답하였다. 다만, 경북도청의 정책으로 경북형 직업교육 혁신플랫폼을 구축하여 3년간 5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내 직업계고와 지역 기업을 연계한 산업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43] 지역기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협력, 졸업 후 지역 기업 취업 및 후학습 등 성장경로 이행을 돕는 교육 모델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 후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중등 직업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 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인력 육성을 위한 협력 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기능경기대회와 같은 지자체 관심 분야 외에 중등단계의 인재 육성의 성과는 교육청의 몫이라는 시각이 강해 협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중등 직업교육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일부 협의체의 참여 범위나 네트워크 부족 한계를 극복해야 하고,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거버넌스 구축과 같은 방안을 통해 여건 조성,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 기업에 우수 인력 제공에 대한 의식 개선,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43) 경상북도청(2023. 10. 5.)

○ 발제 3. 대구지자체 행정관계자 김○○

대구 지역 지자체 행정관계자 김○○은 정책협의체 구축 필요성 및 그 이유로 생활·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인 대구·경북의 특수성을 들었다. 특히 미래차, 기계·금속, 의료, ICT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대구·경북을 넘나들며 활동 중이므로, 권역 차원의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취업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구와 경북은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일자리 미스매칭으로 인해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라는 이중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직업계고를 통한 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려면 지역 단위 대응을 넘어, 권역 전체가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대구·경북의 기존 협의체(네트워크)로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역협력위원회, 대구보건대 글로컬 치과기공 기술사관 육성사업 운영협의회, 대구보건대 환경보건 기술사관 육성사업 운영협의회, 영남이공대 기술사관 육성사업 운영협의회 등이 구축·운영되고 있으며, 각 위원회 및 협의회는 지자체-유관기관-참여 학교(직업계고, 대학교)-참여 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연 2~3회 정도 개최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 각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의 추진 방향, 계획, 경과 및 결과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논의 및 자문하며, 사업 운영에 대한 기관 간 협업 사항을 협의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양성 및 취업 연계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하였다. 중등 직업교육에서는 대구형 일·학습병행제,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 중이며, 특히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현장실습처 발굴 및 연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대구시가 중점 육성하는 미래형 자동차, 의료, 로봇 등

첨단산업과 일부 직업계고 학과와 연계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추진 사업별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운영되어 장기적 관점의 직업교육 발전계획이 미비하고, 중소기업의 낮은 인식 수준과 참여 부족, 학생·학부모의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 부족, 비인기 분야(전통산업 등)의 현장실습, 취업처 발굴의 어려움 등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통합적 중등 직업교육 정책협의체나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책 변화나 담당자 교체 시에도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발제 4. 대구 지역 특성화고 졸업생/산업체 관계자 조○○

산업계 관계자로 대구·경북권 포럼에 참석한 조○○은 기업의 입장에서 정책협의체 구축 필요성 및 그 이유를 답하였다. 기업의 입장에서 대구와 경북의 직업교육은 개별 학교 차원을 넘어 지역 단위의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며, 특히 대구·경북권과 같이 산업기반은 탄탄하지만 직업교육과 산업수요 간 연결고리가 다소 느슨한 지역에서는 정책적 지원과 지역 주체 간 유기적 네트워크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 직업계고와 함께 지자체, 산업체, 대학, 직업훈련기관이 연계된 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성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른 전문가가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 대학, 산업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개편과 진로를 연계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전국 평균에 비해 체계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실정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지속성과 지역 전체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본격적인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 원인으로 지역 내 유망 산업군(IT, 로봇, 의료, 스마트농업 등)과 직업계고 간 연계의 비정례화, 공동 프로젝트나 현장실습의 정기적 운영체계 미흡, 교육과 산업현장을 연결하는 중간조직의 부재, 지역 단위 협의체 운영의 미비, 성과 공유 및 확산 기전의 결여 등을 꼽았다. 다만, 최근 들어 직업교육이 단순한 '취업 준비'를 넘어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산업과 상생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중간지원 조직(거버넌스) 설립, 교원 및 기업 실무자 간 교류 확대, 학생 진로 매칭 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시도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책적 의지와 재정지원, 그리고 지역 구성원 간의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 발제 5. 경북 지역 인자위 관계자 박○○

경북 지역 인적자원 연구자 박○○은 초광역 수준의 정책협의체나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광역별로 산업이 이질적이라 하더라도 인력과 직무 단위로는 연계가 가능한 지점이 다수 존재하므로 직업교육의 목표가 단일 산업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인력기반 조성이라고 볼 때, 기능적 연계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에서는 도청, 도교육청을 비롯하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TP,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북RSC의 사업 책임자급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고, 연간 사업 결과 보고,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의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결과 상호 간 장비, 교사, 교육과정을 공유함으로써 각각의 광역 단위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실습장비나 실무교사의 풀을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초광역

권 연계를 통해 각각 최상위권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경북(1위, 69.5%), 대구(2위, 65.3%)가 연계하여 직업계고 협업 선도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국가 시범사업 등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정책실험·평가 플랫폼 구축의 선두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북RSC의 관점에서 경북은 직업교육과 지역 산업의 일치성 제고를 위해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으로, 경북RSC와 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2.0' 사업에 참여하여 산업 변화 분석 컨설팅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산업 변화-지역 교육과정 개편이 연계되도록 하고 있고, 교육청 주관의 취업지원협의회 등에 지역의 유관기관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역 우수기업의 학생 취업연계와 기업의 니즈 등을 간접적으로 교육청에 전달하는 체제가 구현되고 있다고 보았다.

다만 미래 육성 산업 중, 대구(스마트팩토리/로봇)와 경북(2차 전지/반도체)의 산업벨트가 한 생활권으로 엮여 있어서 융·복합형 교육과정과 장비 플랫폼에 대한 광역권 공동 설계가 필요함에도, 현재 활발히 운영 중인 직업협의체 네트워크인 '직업교육 혁신지구'가 지구별 협력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광역권 간 교차 의사결정 구조의 공백을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나. 호남권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 방안

○ 포럼 개요

- 일시: 2025년 7월 15일(화) 11:00~16:00
- 장소: 전남여성가족재단 회의실 206호
- 참석자
  - 광주광역시: 강○○, 문○○, 최○○

• 전라남도: 이○○, 박○○, 안○○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진(4): 유진영, 전종호, 서유정, 정준서

○ 포럼 운영계획 소개
- (운영) 연구진 및 참석자 소개, 연구 개요 및 포럼 주제와 진행 사항 공유
• 광주와 전남 지역별로 참석자 발제 및 자유 토론
• 현안 발생 시 관련 논의 주제 추가 가능
- 논의 주제
• 호남권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의 협력체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및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주제를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논의(위의 질문 내용 참고)

○ 발제 1. 호남권의 직업교육 정책 현황 및 이와 관련하여 광주·전남권 수준에서 정책협의체나 협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방안 논의(이하 발제 제목 생략, 광주교육청 관계자 문○○)

광주 지역 교육청 관계자인 문○○은 정책협의체의 구축 필요성 및 그 이유로 교육에 대한 산업체의 낮은 이해도를 들었다. 직업계고의 교육과정에 산업체 참여가 필수적인데, 낮은 이해도로 인해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거버넌스를 통해 학교가 교육에 집중하도록 기업·대학·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지원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광주는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2022~)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5개 전략산업 분야와 연계해 모든 직업계고 학생이 참여 가능하게 설계된 것이라고 밝혔다.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광주시교육청 주도로, 구성원의 교육 활동 집중을 유도하여 대학교

수 멘토링, 대학 탐방, 선이수 학점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3개 유관기관과의 협약 체결, 취업지원센터 중심의 산업체 발굴 및 매칭, 외부 진로 컨설턴트(60명) 배치를 통한 동아리별 진로상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체의 교육과정 이해 부족으로 교육과정 협업에 난항이 있고, 교육청은 기업 채용·취업까지 컨트롤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상공회의소와 같은 산업체 기관 협조를 받고자 하여도 상호 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광주의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산업 인력구조는 기존 뿌리산업 중심임에도 정부의 지원 역시 신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짐), 낮은 산업체 임금 수준 등으로 인해 지역 정주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자체 협력 부서를 통해 협조를 받고 있으나, 실질적 일자리·채용 정보의 제공이 부족한 만큼 선언적 위원회보다 실무 협의체의 지속적 회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너도나도 교육만 하겠다.'라는 기관 중심의 사고를 해소하여 거버넌스 참여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전담인력을 통해 각 기관의 역할을 증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자체 주도의 거버넌스 구축 시 중등 직업교육보다 성인/일반고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청 주도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호남권 광역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적 차이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 발제 2. 광주 지역 특성화고 행정관계자 최○○

광주 지역 특성화고 행정관계자인 최○○은 무엇보다 지속적인 직업교육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강조하였다. 광주형마이스터고 시범학교 운영 당시, 교육청·광주시청·참여 기업 간 정기적인 소규모 실무 회의를 통해 학과 개편, 장비 지원,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한 경험이 있으나, 다수의 정부 사업이 정권이나 담당자 교체에 따라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특성화고의 입장에서 현재 광주에서의 구체적인 협의체 구축 사례는 눈에 띄지 않지만 학교와 산업체 간에 MOU 체결, 광주시·교육청 간 현장실습 질 제고, 취업 연계 확대를 목표로 하는 산합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시도는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 광주형 일자리나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한 직업교육 협의 플랫폼 필요성 공론화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역 산업체 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학생의 취업 수요 충족이 어렵고, 산업체는 정부 사업 참여를 통한 가점이나 혜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학교와 기업의 입장 간 괴리로 인해 협의체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성을 갖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교육과정 개선과 취업 연계로 확장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권한과 실행력을 갖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독일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학생 대우 방식의 차이를 언급하며 학생들을 더 성숙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우하는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사례를 제시하였다.

○ 발제 3. 광주시 지자체 행정관계자 강○○

광주시 지자체 행정관계자인 강○○은 정책협의체·네트워크의 구축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생과 취업자의 경계'에 있어서 기존

정책 구조에서 누락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졸업 전까지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반면, 졸업 후 담당부서가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분산되면 일관성 없는 대응이 발생할 가능성 있으므로, 연속성 있는 정책 지원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광주는 타 시·도 대비 협력체계가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교육청과 시가 협력하여 혁신지구 사업, 협력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등을 공동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취업 유지 시 학생에게 500만 원, 기업에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등의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정주 유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학생 관리 업무가 광주시청 내에서 다양한 부서로 분산되어 일관성 유지가 어려워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졸업 후 학생들의 정책 대상 이탈 등) 업무의 부서 간 경계 모호로 인해 책임 회피 및 중복 업무와 같이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보았다. 그 과정에서 타 부서와의 협업 역시 제한적이며, 실질적 성과 중심 협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직업계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직업계고 정책 효과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 전략산업과 직업계고의 연계 역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평하였다. 그럼에도 광주는 직업계고부터 대학까지를 포함한 통합적 전략을 추진 중이며, 광주시 모델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하였다.

○ 발제 4. 전남 지역 교육청 관계자 박○○

광주광역시와 호남권으로 엮여 있는 전남 지역 교육청 관계자인 박○○은 광주광역시 관계자와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전남은 지역 전통산업에 따라 특성화고 학교 수가 많고, 졸업생의 동일 권역 정착률이 높아 지역 정주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역 내 대규모 산업단지와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직업계고 학생 수 감소와 예산 및 인력의 한계로 인해 정책 대응이 쉽지 않으므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협의체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전남 역시 광주·전남의 단일 거버넌스는 행정적·실무적 제약이 있다고 보았고, 지역 구성원들의 직업교육 정책 관심 부족과 책임 분산으로 인해 현재 교육청이 부담을 떠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답하였다.

현재 전남에는 여수석유화학고와 여수국가산업단지 간의 우수한 모델이 있으나, 개별 학교 중심의 산학협력 모델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 전남도교육청 교육협력위원회,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과 같이 보다 넓은 범위의 협의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산업계와 중등 직업교육기관의 참여는 부족한 편이라고 답해 지역 전체 차원의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앞서 크게 셋으로 나뉜 권역별 네트워크(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의 구축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1단계(2025년): '중등 직업교육 협력 TF' 구성 → 협력 기본계획 수립, 운영 조례 제정, 예산 마련
- 2단계(2026년): 권역별 특화 협의체 구성(예: 동부권-석유화학·기계, 서부권-해양·물류, 중부권-농업·바이오) → 산업 중심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3단계(2027년 이후): 여수석유화학고 모델 확산 → 전남형 중등 직업교육 협력 모델의 완성 및 전국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 4단계: 지속가능성 확보 → 조례 제정, 전담조직·예산 확보, 참여 동기 부여(세제 혜택, 우수 사례 포상), 기업 인센티브 제공,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 발제 5. 전남 지역 인자위 관계자 이○○

전남의 인적자원 연구자인 이○○은 지속가능한 정책협의체를 구축하려면, 우선적으로 현재 교육 주체만으로는 직업교육 관련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부터 공유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학교 내·외부 모두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으므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하고 상시적인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남 지역 중등 직업교육 관련 협의체 또는 네트워크 구축 시도에 대해서는 과거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있으나(예: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전남도교육청 교육협력위원회 등) 중등 직업교육 중심의 논의 비중이 낮고, 기존 협의체는 선언적 성격이 강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지역별·산업별 특화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단발적이며 간헐적인 운영으로 인해 구체적이며 지속적인 실행 계획 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처별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비효율적라고 답했다.

지자체·학교·지역사회 간 협력 역시 존재하나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전남에서는 산업별 문제 인식 공유 및 고용 대응 전략 논의(예: 조선업 분과위원회), 지역 내 유관기관의 기능 활용 및 연계 시도 등의 노력이 존재하나, 기업 정보 접근 및 지역 취업처 발굴에 한계가 있고 지역 산업체의 정보 공유가 소극적인 탓에 협력 기반 형성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그 결과 권역별 구체적 협력 네트워크가 부족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처럼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황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중등 직업교육 협의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기관장 중심의 비정기적·선언적 협의체를 벗어나, 의제 발굴·해결 중심의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실무 활동자 중심으로 구성하는 실효성 있는

구조 설계가 필요하고, 중등 직업교육 분야를 포함시켜 산업별·권역별로 소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재편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역인자위의 구성 인력과 운영체계를 참조하여 협의체를 디자인할 경우 기존 기관 기능을 적극 활용하면 별도 기구 설치 없이도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으로 지역인재양성-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평가 및 개선 기능을 포함한 상설 구조의 설계와 교육·산업·지역 문제를 공동 과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의제 설정 방식으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 발제 6. 전남 지역 지자체 행정관계자 안○○

전남 지역 지자체 행정관계자인 안○○은 정책협의체·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이유에 대해 광주시청 담당자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광주·전남 간 행정 단위의 분리(주소지 기반)로 인해 교육 및 취업 지원의 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의 지역 이동과 취업까지 고려한 공동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광주·전남권 간 정책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전남도청 차원의 지자체-학교-지역사회 협력은 대학을 통한 일부 특성화고 학생 지원과 일부 산업 맞춤형 고등교육 연계 정도로 기초적인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안○○은 중앙부처 주도의 획일적 정책 전달 방식으로 인해 지역 특색의 반영 및 자율성의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피력했다. 협의체 구성 시 학생 등 수혜자 중심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3절 소결 및 정리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와 기업 간의 인식은 부분적으로 다르지만, 협력의 필요성과 의지, 개선의 방향성에서는 분명한 접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접점을 현실적인 제도 설계와 운영체계로 구체화하는 것이 향후 지역 직업교육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이다.

먼저, 학교와 기업 모두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협력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공감하고 있었다. 학교 측은 학생 진로 지원과 교육의 질 제고를, 기업 측은 우수 인재의 조기 확보와 인력 충원의 용이성을 주요 이유로 들며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를 인식하였다. 실제 협력 경험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약 90%는 향후에도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의 중도탈락 원인에 대해서도 양측의 인식은 매우 유사하였다. 학교와 기업 모두 진학 및 진로 변경, 적성 불일치, 참여 의지 부족을 탈락의 주요 사유로 지적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 성숙도, 참여 동기, 사전준비도가 협력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변수임을 양측이 모두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장 운영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학교는 전담인력 부족, 과도한 행정 부담, 예산 확보의 불안정성을 가장 주요한 운영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특히 학교 내부에 산학협력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고, 업무를 겸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도 다수였다. 기업은 실습 이후 채용에 대한 부담, 실습지도 인력의 부족, 기업 내부 여건의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지자체의 지원 부족 등을 주된 문제로 인식하였다. 즉, 학교는 주로 교육기관 내부의 실행 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기업은 외부 환경과 행정 지원 체계의 미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한 학

교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적 가치와 학생 중심의 성과에 비중을 두는 반면, 기업은 프로그램 참여가 실질적인 채용과 연결되는가에 따라 효용성을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이런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학교와 기업 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한 소통 구조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기업은 학생 평가 결과를 학교에 환류하고, 학교는 기업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설계나 사전 교육을 체계화하여 신뢰를 높여야 한다. 둘째, 지자체와 지역 교육청의 실질적 역할 강화가 절실하다. 양측 모두 지역사회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족을 지적했으므로, 협력체계의 조정자이자 보조자 역할을 수행할 공공기관의 기능 정립이 요구된다. 셋째, 산업체와의 협력에서 학생의 전공 일치성 확보, 근무 환경 개선, 학생 맞춤형 진로탐색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생의 중도 이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진학-취업 경로를 아우르는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기업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산점, 보조금 지급 등 구체적 인센티브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결국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는 학교,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이 각자의 목적과 관점을 이해하면서 공동의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로 정비되어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의 품질과 학생의 진로를 중심에 두고, 기업은 실질적인 채용과 직무 적합성을 고려하며, 지자체는 이를 조율하고 자원을 연결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대경권과 호남권의 포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경권의 경우, 특히 경북은 농산어촌 지역이 많고, 지역별 학교 수가 제한적이어서 권역 단위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과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지방 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이 학교 졸업 후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중등 직업교육의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경북은 광역권 단위의 협의체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일부 시도도 했지만, 제도화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도-교육청-산업계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협의체와 실무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며, 광역권 단위 정책 공조(대구-경북 RISE, 대경권 AI 캠퍼스 등)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제안 가운데 대구·경북형 '중등 직업교육 협의회' 모델 도입 필요도 나왔고, 광역권 단위 '교육청-지자체-산업계-대학-TP' 연계 거버넌스 설계에 대한 논의도 전개되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등직업교육 단계에서의 Glocal/RISE 사업과 연동하여 지역 대학뿐 아니라 직업계고도 포함하여 '지역인재 생애이음 전략'을 실현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 기업에 대한 우수 인력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의식 개선이 필요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계점으로 거론된 것이 직업교육협의체 필요성 인식과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의 장기적·통합적 중등 직업교육 정책협의체나 플랫폼이 부재한 점을 꼽았고, 정책 변화나 담당자 교체 시 협력관계가 약화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좀 더 구체적인 논의로는 광역 공동협의체를 설치해 장비투자 통합계획, 교육·커리큘럼 공동 개발, 취업·후학습 통합 플랫폼 운영 등으로 예산 절감과 지역 정착률 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지역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산업별 접근보다는 직무나 기능 단위로 세부적 기술 역량 강화에 교육적으로 접근한다면 보다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무엇보다 지역인재양성에 주요 축인 지자체장의 중등 직업교육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현재 고등교육에 집중된 인재양성 관련 지원의 중등 직업교육으로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지자체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도 논의되었다.

호남권 포럼에서는 대경권과 달리 광역권 논의보다는 지역 안에서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지역 사정으로 특히 전남은 특성화고 수가 많지만, 정책적 지원은 부족하다고 보았고,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발생하며, 매해 4~5천 명의 청년 인구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 지역인재 정책은 중등·고등 나눌 필요 없이 정주·성장·재교육까지 포괄해야 하며, 협력체계 논의는 중등 직업교육보다는 지역인재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지금까지는 정책 사업의 주체 및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단발성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산학협력법」이 고등교육에만 적용되어 중등 직업교육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고, 지자체 내의 타 부서와의 협업은 제한적이며, 실질적 성과 중심 협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광주의 경우 직업계고부터 대학까지를 포함한 통합적 전략이 추진 중이고, 시청과 교육청의 협력이 잘되고 있는 편이지만, 역할 분리가 더 분명해야 하고 교육청 중심의 직업교육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광주와 전남 모두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등 직업교육을 유지하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실상 교육청 직업교육팀만이 중등 직업교육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광역권 협의체 구축에 있어서는 광주·전남의 행정적 차이로 인해 단일 호남권 거버넌스 구축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광역 거버넌스 구성은 이상적이나 행정적으로 현실상 어려움이 크다고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광역 단위로 접근하기보다는

소규모 지역 단위로 협의체를 시범 운영해 점진적으로 확장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제5장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운영 개선 과제

제1절 이슈와 쟁점 정리

제2절 정책 개선 방안 및 제언

제5장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운영 개선 과제

제1절 이슈와 쟁점 정리

본 장에서는 앞의 제2, 3, 4장에서 다룬 주요 논의와 이슈를 정리하였다.

1. 지역인재양성 법제와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미흡

지역인재양성과 관련된 법제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대육성법」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역에 정주하는 인재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급자의 시각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즉, 지역인재 정책의 대상과 수단이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지역인재양성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실효성이 낮고,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의 수도권 유출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인재양성정책이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보다는 중앙의 인력정책 우선순위에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또한,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법」이 고등교육에만 적용되어 중등 직업교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등 직업교육 관련 협력체계 측면에서 지역인자위(RSC)와 산업별인자위(ISC)는 인재양성정책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하지만,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에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교육훈련 분야와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통합에서는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지역 중심의 협업체계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2. 정주 지역인재 확보는 중등 직업교육을 위한 학력 자원 확보와 활성화가 우선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인력양성 이슈 중 하나는 우선 15세 미만 연령이 연평균 2.4%씩(전북, 전남, 경북은 3%대, 경남은 약 2.4%의 감소율) 감소하고 있어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자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인 서울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경기, 경북, 경남, 충남은 서울보다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많다. 지역의 기능원 및 조작·조립 직종 인력의 감소와 제조업 인력의 감소는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가 줄어드는 것에 기인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감소 이유가 존재한다(백원영 외, 2024, 123-124).

중등 직업교육 입학 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특성화고 학교 수와 학생 수가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교 수 감소 폭에 비해 최근 들어 학생 수 및 충원율 등의 감소 폭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향후 많은 특성화고가 정원 미달 및 폐교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중등 직업교육의 비중 감소와 더불어 특성화고 운영 성과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증

가하여 특성화고의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관련정책의 중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열악한 환경과 인식 속에서 중등 직업교육을 정주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인재양성정책의 핵심 축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대입 중심의 지방대학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실질적인 중등 직업교육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선취업·후진학 정책을 강화해 지역의 중등 직업교육과 지역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사다리를 공고히 해야 한다. 또한, 지역 정주를 위한 정책의 수혜 대상인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인구·산업·문화 등 복합적 요소를 연계한 통합적 지역정주 인재양성정책 설계가 절실하다.

3.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의 지역협력체계 운영 실태 점검·보완

그간 중등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8년 평생직업교육 혁신 방안과 2023년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 직업교육 혁신지구, 교육발전특구 등을 추진하였다. 협약형 특성화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교육발전특구 등은 모두 지자체-교육청-기업-학교 간 협력을 통한 지역기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중등 직업교육 정책이 실질적으로 지역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와 운영 성과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 내 협력체계의 운영 실태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4. 지역별로 산업수요와 직업계고의 특성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필요

2024년 기준으로 경북(69.5%)과 대구(65.3%) 등 일부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직업계고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교육부, 2024. 11. 6.). 또한 동일 권역 내에서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정착률은 평균 69%로 지역정주형 인재양성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특히 대경권은 82.5%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권은 59%로 낮아서 지역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교육부, 2024. 11. 6.).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중등 직업교육 운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 1순위는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지역의 특성화고 수 및 학생수, 2순위는 산업수요와 관련하여 중등 직업교육 인재수요, 3순위는 지역기반의 협력체계 및 프로그램 참여율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운영과 협력체계에 있어서 주요한 정책으로 지역수요 및 중등단계 직업교육 인재에 대한 지원 인식 및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은 산업수요를 바탕으로 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인재양성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전략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 두 지역에서는 직업교육과 지역인재 축적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한 높은 인적자본 축적과 시장의 생산성(임금)이 서로 매칭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 교육시장과 노동시장 간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력 업종의 전문성 부족 및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호남권의 당면 문제는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이 겪고 있듯이 인구 감소, 고령화, 인재 유출이 심각한 것이다.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의 경우,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학과를 개설하고 이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협력을 통한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고도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광주형 마이스터고 운영을 통한 지역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5. 지역별로 직업계고 졸업생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정책 필요

대구의 인재 정책은 지역인재양성을 통해 정주 인재 자원을 확보하고, 역외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의 인재 정책은 19세 이상 청년의 일자리 및 교육에 대한 지원과 대학생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수립 및 운영되고 있을 뿐,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대구에서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인재양성의 중심축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경북도청은 '경북 4대 교육대전환'에서 청년이 태어난 곳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정주하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을 비롯하여 기업체, 고교, 평생교육기관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즉,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성공할 수 있는 '고졸청년 인식대전환'의 일환으로 경상북도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경북형 직업교육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광주의 경우 광주시교육청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통한 학생의 입학, 졸업, 취업, 지역 정주 등을 위한 지역인재 정책의 범주 가운데 학교를 둘러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은 교육청-학교가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하며, 20세 이상의 청년 인재 양성에는 관심이

있으나, 20세 미만 청년 취업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에만 일임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학령인구의 감소,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 등으로 인해 직업계고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7년간 직업계고 학교 수, 학급 수, 입학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형 교육자치 모형'을 통해 전남교육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교육청-지자체-기업-지역사회의 연계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남 교육발전특구 추진체계도 갖추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6. 지자체-교육청-산업체-학교 간 협력체계 합리적 모델 개발 필요

대경권에서는 지방 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이 학교 졸업 후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지·산·학이 협력하여 발전적인 인재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현장 밀착형 교육 실행이 필요하다.

경북의 인재 정책과 관련하여 지자체-교육청-산업협의회 등 기관과 중등단계 직업교육 간 협력체계의 대표적인 사례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라고 할 수 있다. 경북의 직업교육 혁신지구의 사업 분야는 첨단부품소재 가공, 스마트 제조, 차세대 배터리(2차 전지)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경북 지자체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지원은 타 시·도에 비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청-지자체-산업체-학교 간의 역할 확대 및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지원 방안 마련을 포함한 지역 정주 산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연계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역 단위의 공동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직업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을 연계하는 모델 필요

해외 사례 중 대만의 경우, 지역인재양성에 필요한 산학협력의 실질성 제고를 위해 연계 범위를 '지·산·학'으로 확대하고 있다. 즉 산학협력의 출발을 지역 산업 및 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 두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책임실천(University Social Responsibity, USR)'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교는 지역의 전문대학-기술대학-과학기술대학 등과 연계하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대학 등 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지식, 시설, 기자재 등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지역과 공생공영(共生共榮)할 수 있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중등 직업교육기관은 지역의 기술직업교육대학과 연합하여 참가함으로써 직업교육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회생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가운데 지역의 산업 발전에 관심을 두고 취업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직업교육과 일반 인문교육은 진학과 진로의 경로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모든 청소년이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은 25세까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도 졸업 이후 고등직업교육으로의 연계가 잘 되어 있다. 또한 이원화 직업훈련은 다양한 형태의 모듈로 실행되는데, 모듈의 형태를 다양화한 이유는 기업과 직업훈련생들에게 교육훈련을 보다 유연하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경북에서도 Glocal/RISE 사업과 연동하여 지역 대학뿐 아니라, 직업계고도 포함한 '지역인재 생애이음 전략' 실현이 필요하다. 이 외에, 기술사관육성사업(기술사관학교 육성사업) version Ⅱ 기획이 필요하다. 호남권에서도 지역인재 정책은 중등교육과·고등교육으로 이원화할 필요 없이 정주-성장-재교육까지 포괄해야 한다.

8. 지역인재양성정책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개선안 마련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학교와 기업 간의 인식은 부분적으로 다르지만 중등 직업교육 단계에서 협력의 필요성과 의지, 개선의 방향성에서는 분명한 접점이 있었다. 그러나 양측이 인식하고 있는 현장 운영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학교는 전담인력 부족, 과도한 행정 부담, 예산 확보의 불안정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학교 내부에 산학협력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업무를 겸직으로 수행한다는 응답이 다수이다. 기업은 실습 이후 채용에 대한 부담, 실습지도 인력의 부족, 기업 내부 여건의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을 주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즉, 학교는 주로 교육기관 내부의 실행 여건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기업은 외부 환경과 행정 지원 체계의 미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적 가치와 학생 중심의 성과에 비중을 두고 있고, 기업은 프로그램 참여가 실질적인 채용과 연결되는가에 따라 효용성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부처 내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시·도의 청년정책과 등 타 부서 및 중등 직업교육과의 협업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대경권과 달리 호남권에서는 시와 교육청 간 역할 분리가 분명하며, 교육청 중심의 직업교육 운영이 강조된다. 협력과 거버넌스의 단절 문제는 분산된 주체 구조에서 비롯된 근본적 구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 산업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 문제 해결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에 광역 단위로 접근하기보다는 소규모 지역 단위로 협의체를 시범 운영해 점진적으로 확장하자는 의견이 있고,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등 직업교육 유지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9. (지역별) 학교와 기업 간의 신뢰 구축 체계 필요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 학교와 기업 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한 소통 구조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기업은 학생 평가 결과를 학교에 환류하고, 학교는 기업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설계나 사전교육을 체계화하여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의 실질적 역할 강화가 절실하다. 두 기관 모두 지역사회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협력체계의 조정자이자 보조자 역할을 수행할 공공기관의 역할 기능 정립이 요구된다. 셋째, 산업체와의 협력에서 학생의 전공 일치성 확보, 근무 환경 개선, 학생 맞춤형 진로탐색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도 이탈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진학-취업 경로를 아우르는 유연한 설계가 있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산점, 보조금 지급 등 구체적 인센티브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처럼,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는 학교-기업-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이 각각의 지역인재양성의 목적과 관점을 이해하면서 공동의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로 정비되어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의 품질과 학생의 진로에 중심을 두고, 기업은 실질적인 채용과 직무 적합성을 고려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조율하고 자원을 연결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10. 지역인재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필요

지역별로 지자체, 교육청, 인자위 등에서는 지역인재양성 및 지역 기업에 우수 인력 제공 필요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국가 수준의 '「직업교육법」 기반 협의체'가 필요하다. 하나의 실례로 독일 BIBB(연방직업교육연구소) 모델을 벤치마킹해 법제화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측면의 협의체가 현장기반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적 의지와 재정 지원, 그리고 다양한 주체 및 지역 구성원 간의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업 역시 '인재수요자'를 넘어, 적극적인 공동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자각하도록 더욱 확고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업의 중등 직업교육 참여는 채용과 인력 확보가 중심이 되지만, 기업 스스로 학교와 접촉하기보다는 직업계고의 요청을 받고서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69.9%). 기업 쪽 담당자도 훈련을 전담하지 않고 대부분 겸직을 하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진행할 시간과 역량이 확보되기 어렵다. 학생에게 배

정되는 업무 또한 전공 연계는 유지되나 단순 업무가 적지 않아, 실무 역량을 축적하여 장기 정착으로 연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학교의 적극성에 비해 지자체 지원 수준에 대한 기업의 체감이 낮아, 현장 운영 부담이 기업과 학교에 과도하게 전가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요컨대 현재의 참여 방식은 채용 중심의 기회 제공을 넘어, 학습 중심의 공동훈련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여하는 기업을 법·제도적으로 '현장훈련기관'으로 규정하고, 최소 훈련 기준과 역량기반 커리큘럼·평가체계를 학교와 공동 설계·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조화된 OJT와 보완적 OFF-JT의 결합, 멘토–학습자 기준과 단순 업무 상한 설정, 개인별 훈련계획·학습기록·포트폴리오의 의무화, 중간 점검과 재배치·피드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 등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센티브는 단순 참여가 아니라 훈련 품질과 성과(모듈 이행, 역량 향상, 채용·잔존)에 연동해 차등화하고, 지자체는 운영비·멘토 양성·주거·통근 등 실비 중심의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공동훈련센터와 컨소시엄을 통해 장비·멘토풀·교과모듈을 공유하고, 투입 전 기초기술 브리지 과정을 통해 직무 적합도를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 재정의–내부 책임체계–공동 설계–품질 연동–지역 인프라'의 패키지 접근은 기업을 단순 수요자에서 교육 파트너로 전환시키고, 산학협력의 고용 전환과 잔존 성과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11. 직업교육 기반 협의체 구축을 위한 접근 전략 및 예산 확보 필요

학교-기업-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광역 공동

협의체를 설치해 장비투자 통합계획, 교육·커리큘럼 공동 개발, 선취업·후학습 통합 플랫폼 운영 등으로 예산 절감과 지역 정착률 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 지역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산업별 접근보다는 직무나 기능 단위로 세부적 기술역량 강화에 교육적으로 접근한다면 보다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권에서의 협력체계 논의는 중등 직업교육보다는 지역인재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책 사업의 주체 및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단발성 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점도 한계이다. 또한, 전남 내 학교 간 격차가 심하므로 군 단위와 시 단위 학교를 구분한 모델 운영이 필요하며, 지역 산업 기반 인력수급과 정주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12. 광역권 단위의 협의체 구축 필요

중등 직업교육의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경북의 경우 광역권 단위의 협의체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협의체 구성을 시도했지만, 제도화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향후 시·도-교육청-산업계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협의체와 실무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며, 이를 기반으로 직업교육-고용 연계 구조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대경권의 경우, 더 나아가 대구와 경북을 아우르는 대구·경북형 '중등 직업교육 협의회'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즉 광역권 단위 '교육청-지자체-산업계-대학-TP' 연계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할 수 있다.

제2절 정책 개선 방안 및 제언

앞에서 살펴본 이슈와 쟁점에 따라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 및 정책을 1. 실태 파악 및 인식 개선, 2. 운영 지원, 3. 모델 개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다음의 〈표 5-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5-1〉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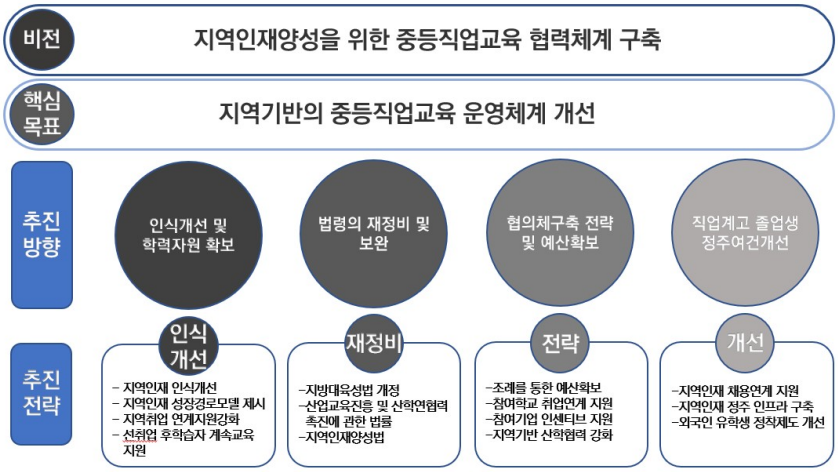
구분	이슈와 쟁점	개선 방안/제언
1. 지역인재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현황 파악	1. 지역인재양성 법제와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미흡 10. 지역인재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지역인재의 대상 확대와 지원을 위한 법령 제·개정 -「지역인재양성법」 개정으로 지역인재에 지역 대학 졸업자 외에 지역 고교 졸업자도 포함, 지역인재 지원 확대 방안 강화 -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 제시
	3.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의 지역협력체계 운영 실태 점검·보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실태 모니터링 체제 구축
	8. 지역인재양성정책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개선안 마련	지역별 직업계고의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성공 모델 개발
2. 협력체계 개선을 위한 운영 지원	2. 정주 지역인재 확보는 중등 직업교육을 위한 학력 자원 확보와 활성화가 우선 5. 지역별로 직업계고 졸업생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정책 필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 정주 지원 방안 - 지역별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방안 포함
	11. 직업교육 기반 협의체 구축을 위한 접근 전략 및 예산 확보 필요	지역별 지·산·학 기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 - 직업교육 기반 협의체 구축 및 운영 전략 수립 - 직업교육 기반 협의체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표 계속〉

구분	이슈와 쟁점	개선 방안/제언
3. 협력체계 개선을 위한 모델 개발	4. 지역별로 산업수요와 직업계고의 특성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필요 6. 지자체-교육청-산업체-학교 간 협력체계의 합리적 모델 개발 필요	지역별 지역 산업인재 양성을 위한 지·산·학 기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7.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을 연계하는 모델 필요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지역인재 양성 연계 방안
	9. (지역별) 학교와 기업 간의 신뢰 구축 체계 필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와 지역 산업체의 산학협력 방안 - 지역별로 산업수요와 직업계고의 특성에 따른 협력체계 모델 구축
	12. 광역권 단위의 협의체 구축 필요	광역권 단위의 협의체 모델 개발 - 광역권 협력 모색과 광역권 협의체의 법정·상설화 및 기존 프로그램 활성화

이러한 개선 방안과 정책을 반영하여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다음의 [그림 5-1]과 같이 추진방향, 핵심목표,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5-1]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방안



자료: 연구진 작성.

1. 지역인재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현황 파악

가. 지역인재의 대상 확대와 지원을 위한 법령 제·개정

1) 지역인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인재양성법」 개정을 통한 지역인재 지원 확대 방안 강화

지역인재양성에 대한 지원은 지역별로 지자체장의 교육 관점과 인재 육성 철학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지자체장 및 지역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중등 직업교육인재 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득이 중요하다. 특히, 대학 졸업자와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대우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상승 전망은 부정적이며, 취업이 가능한 기업 기반 자체가 약한 곳에서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교육·훈련을 함께 설계하거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지역인재에 대한 개념에 지역 대학 졸업자 외에 지역의 중등 직업교육 졸업자도 포함시켜서 지역인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대육성법」)의 정의(제2조)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에 근거한 인재 개념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의 직업계고 졸업생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인재양성법」 개정이 필요하다.

2)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 제시

지역의 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연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지역인재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한 사항이다. 가령,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2025)에서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하기 위해 지방대학 및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를 지원하는 내용(제2조 2. 가)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운영 조례를 통해 지방대학 졸업자 위주의 인재 정책이 아니라 직업계고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한 맞춤형 지역인재 정책이 필요하다.

직업계고가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의 중심이 되게 하고,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과 더불어 법령의 재정비 및 보완도 필요하다. 특히 산학협력의 근거 법령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보완이 요구된다. 이 법은 교육기관과 산업체의 효율

적인 연계와 관련된 법이지만,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김기홍 외, 2018). 현 정부의 국정과제 96번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의 (가칭)「지역고용활성화법」에서 지역 일자리 예산 지원이 강화되면 직업계고를 통한 지역인재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의 제11조의 2 중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3.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등의 내용에 근거하여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조항에 명시적인 산학협력 교육 촉진에 관한 지역인재 지원 장려금 제도 조항을 신설하여 보완해야 한다(김기홍 외, 201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는 제3조와 제7조 및 제18조 등에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관련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경우 제8조를 수정·보완하여 지역 산업체의 지역 맞춤형 교육 운영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지역의 인재 정책과 중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보완과 더불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시스템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김기홍 외, 2018).

〈표 5-2〉 산학협력 관련 법령의 정비 및 보완

구분		관련 법 조항	수정·보완점
수정·보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제11조의 2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3.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 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상기 조항을 활용하여 중등 직업교육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협력 지원 체제 구축 ·지역인재양성체제 구축과 지역인재양성체제 운영 지원을 명시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지역인재 장려금 조항 신설 ·지역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의 재정 지원 대상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지역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제7조(현장실습)	·일정 규모의 지역 산업체 현장실습 지원 의무화
		제18조(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정책협의회 내용 보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체제에 대한 연계 지원 사항 보완 필요
특별법	「지역인재양성법」	주안점: 지역인재양성과 관련한 지원 및 연계 협력 촉진	
		가칭: 「지역인재양성법」 제정	

자료: 연구진에서 지역인재양성정책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관련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실태 모니터링 체제 구축

1) 중등 직업교육 활성화와 지역인재양성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전담기구(가칭 '중앙센터') 설치·운영

중앙정부와 시·도자치단체는 중등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인재양성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 전담기구(가칭 '중앙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이 '중앙센터'는 지역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산업체 및 산업별 협회, 모든 관련 지원기관들을 네트워킹하고 지원하며, 모든 교육 수요자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제반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 교육부의 중앙취업지원센터 및 시·도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을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무부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일반회계 혹은 특별회계를 통해 매년 실행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중앙센터'는 지역인재양성과 관련한 정보를 참여 학생과 산업체에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해야 하며, 관련 정책의 실행을 지원해야 한다. '중앙센터'는 참여 예상 학생과 학교 및 기업에 실질적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 연계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부처의 정책에 관한 지원 연구를 수행한다.

둘째, 지역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DB 자료(참여 교육 수요, 교육공급, 졸업자의 선호 관리 등)의 생산·수집·가공·분배, 지역인재양성 제도의 개선, 지역인재양성 교육의 질 확보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기능 등을 수행한다.

셋째, 지역인재양성에 관련된 참여 학생의 진로와 학과 상담, 참여 대학과

산업체 연계·협력 사항 지원, 교육비 지원 사항 등 참여 주체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중앙센터'는 기존의 유사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여 업무를 위탁하거나 신설 기관을 설치·운영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전담기구나 조직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중앙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 지역별 직업계고의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성공 모델 개발

지역별로 지역인재양성에 대한 운영 성공 모델이 형성되어 있다. 대경권의 경우, 울진 원자력마이스터고-한수원-울진군 협력 모델이 대표적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역협력위원회, 대구보건대 글로컬 치과기공 기술사관 육성사업 운영협의회, 대구보건대 환경보건 기술사관 육성사업 운영협의회, 영남이공대 기술사관육성사업 운영협의회 등이 구축 운영 중이다. 호남권의 경우, 협력 사례로 여수석유화학고 ↔ 여수국가산업단지(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지역인자위 내에 지역인력양성협의회, 산업별 분과위(조선, 석유화학, 철강, 전기에너지)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 내 주요 직업계고 관계자(교장, 취업부장 등)들이 참여하고 있다.

본 장의 제1절 이슈와 쟁점 정리에서 중등 직업교육의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언급한 시·도자치단체-시·도교육청-산업계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협의체와 실무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며, 이를 기반으로 직업교육-고용 연계 구조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역권 단위 '교육청-지

자체-산업계-대학-TP' 연계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교육발전특구 모델이 지역협력체(교육청+지자체+대학+산업체 등) 구축을 통해 공교육 혁신을 지향하는 방향도 이와 같다. 경북의 경우, '(가칭)경북 프리 휴스타(Pre-HuStar) 프로그램'은 경북 지역에서 지역인재를 기르는 사업으로 고교 때부터 연계하여 대학교육과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

지역의 인재양성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부처 간과 시·도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등의 긴밀한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정책지원 협의회'와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운영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정책지원 협의회'는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과 관련한 정부부처들과 행정사무 협력 및 통합과 조정을 하며, 중앙정부와 시·도 자치단체의 관련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운영 지원단'은 관계 부처 담당자와 산업별 협의체 담당자 그리고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여 직업계고와 산업체에서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정책과 교육이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력 시스템이다. 이러한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운영 지원단'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과 관련한 운영 제도의 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정책지원 협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은 경북혁신도시(김천) 내 전문계고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한 방안으로, 이를 사례로 제시한다.

〈사례〉 경북혁신도시(김천) 내 전문계고 전문 인력 채용 방안

(1) 맞춤형 학과 개편 및 전공 신설
○ 김천·구미·상주권 특성화고에 스마트인프라 설비과(도로·교통 계측, 센서 유지보수), 철도시스템과(신호·차량 정비, 물류 자동화 설비), 에너지안전과(전력설비 운전·검사, 수소·ESS 안전관리) 개설·개편 추진.
○ 교육부·경북교육청·지자체 협의로 RISE·글로컬대학 사업 연계 '직업계고 학과 개편 지원금' 확보

(2) '이전기관 연계 기능 인턴십 프로그램'
○ 기관별로 연 20~30명 수준의 고교 재학생 현장실습 트랙 운영
- (KAIA) 도로·UAM 계측 장비 설치·유지보수 실습
- (KRRI) 철도 시험선 신호시스템 보조 실습
- (KETEP) 에너지 설비 안전점검 참여
○ 참여 학생은 기관 명의 수료증 + 국가기술자격 응시 우대연계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김천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제시

(3) 고교-폴리텍-기관 연계형 '3단계 자격 트랙'
○ 고교→ 기능사 취득(전기, 기계, 철도, 에너지 등)
○ 폴리텍/지역대학→ 산업기사·기사 과정(야간/계약학과)
○ 이전기관 협력→ 시험·검사 보조인력, 현장 운영직 채용
→ 단계별로 도·시 장학금/훈련수당 지원, 기관은 채용 시 가점 부여

(4) 지역 기반 자격시험·인증센터 유치
○ 교통안전공단(드론·자동차 검사)과 연계해 드론/UAM 운항·정비 자격시험장 김천 설치
○ KETEP 연계 에너지설비 안전검사 교육센터 신설 → 고졸 기능인력이 곧바로 지역 내에서 자격 취득 가능

(5) "김천 기능인력 취업보장 협약"
○ 기관·지자체·교육청·고교가 취업보장형 협약 체결 → 졸업생 일정 비율을 기관 산하 연구소·실증센터·협력업체 채용으로 연결
○ 경북도와 김천시가 채용보조금(예: 2년간 인건비 일부 보조)을 기업·기관에 지급해 초기 채용부담 완화

(6) 정주지원 + 커리어 업그레이드
○ 김천혁신도시 내 청년 근로자 기숙사/공공임대 주거단지 확보 등
○ 기능직 근로자도 재직자 학위 과정(야간·온라인 대학 과정) 연계 → 장기적으로 엔지니어·중간관리자로 성장 경로 보장 등

자료: 김용현(2025), 경상북도 지역인재활성화 방안, 경북연구원 발표자료(2025. 10. 29.).

2. 협력체계 개선을 위한 운영 지원

[그림 5-2]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



자료: 연구진 작성.

가. 지자체 중심 지역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 정주 지원 방안

1) 지역별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방안

최근에 교육현장에서도 직업계고 학생들의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2024년 교육발전특구사업 연계 울산형 직업계고 혁신지원사업 성과 나눔회'를 개최했다. 울산형 직업계고 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다양한 취

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본 사업으로 고졸자 취업을 활성화하고, 졸업생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울산시교육청은 2024년 9월 전국 최초로 직업교육복합센터를 개관해 직업계고 변화 사업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에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부산시교육청, 부산시청, 부산시의회와 지역 대학·기업 등 지·산·학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직업계고 인재양성 허브 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에서는 직업계고의 질 좋은 취업처를 발굴하기 위한 협의체 구축, 직업계고 채용 연계·지역 정주 지원, 지역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역 기술인재 양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청년고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이 가운데 직업계고 직무 특화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주지영, 2025. 1. 23.).

지역인재의 취업과 정주를 위해서는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도 필요하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들의 경우, 재학과 취업 이후 주변 환경이 잘 구축되어 교통적으로 접근가능성이 커야 할 것이다. 이 외에 청년월세지원, 교통비지원, 지역 정주 지원 등의 생활여건도 고려되어야 한다(유진영 외, 2023, 198-199). 정책은 대부분 공급자 시각 위주로 수립되고 있는데, 지역 정주와 관련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의견 청취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지역별 다양한 노력을 살펴보고, 각 지역의 방향을 갖춘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 정착하고 삶을 개선해 나가도

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정주 여건 개선 패키지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청년 기숙사·공공임대, 통근 교통, 배우자 취업·전환 교육 바우처를 직업계고 취업자에게 기준 충족 시 자동 부여하는 등의 제도를 모색할 수 있다. 관련하여 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 정주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2)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주 방안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호남권과 대경권 등 지역별로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하면서 지역에 적응하고 졸업한 뒤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가장 먼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은 2024년 경북도교육청 산하 8개 직업계고등학교에서 4개국 45명의 유학생을 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올해는 경북도교육청에서 4개국 68명, 전남도교육청에서 5개국 77명을 선발했으며, 내년에는 모집 예정 교육청이 7개로 늘어날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집계했다(뉴스1, 2025.7.11.).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수한 성적을 보인 직업계고 유학생들이 재학 중에 지역에 적응하고, 졸업한 뒤에도 해당 지역과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광역형 비자'에 '우수 졸업생 교육청-지자체 공동 추천 경로 신설'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광역형 비자는 올해 4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지역특화 체류비자 제도로서 지역 정주를 위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을 유치해 인구 감소와 산업 공백을 동시에 해소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최근에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외국인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D-4-3 비자는 졸업 후 국내 취업 비자로의 연계가 어려워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뉴스1, 2025. 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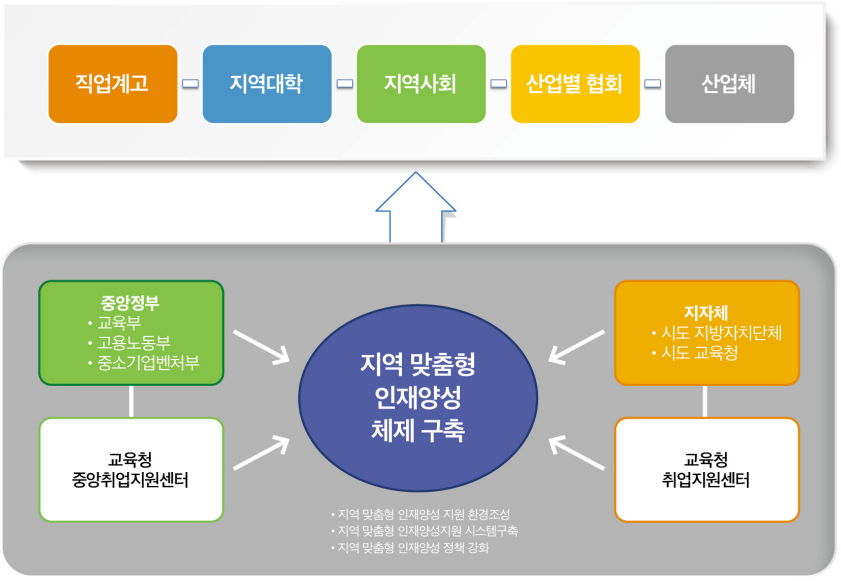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업계고 유학생은 태국,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출신들로 현재 1, 2학년 모두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라면서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곽현아, 2025.7.30.).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정착 트랙이 필요하며, ‘교육청-지자체 공동추천’ 경로를 경북에서 선도 도입하여 언어·안전·주거패키지를 도비로 매칭할 수 있다. 이처럼 직업계고 유학생들이 재학하면서 지역에 적응하고 안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추후 지자체별로 이러한 적응 방안과 사례를 공유하며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나. 지역별 지·산·학 기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

1) 직업교육 기반 협의체 구축 및 운영 전략 수립

지역인재양성정책에서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에 필요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협력과 지원을 위해 [그림 5-3]과 같이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한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림 5-3]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출처: 연구진 작성.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협력 지원 체계는 거시적으로는 AI 활용을 비롯한 직업세계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미시적으로는 지역 산업의 인력수요에 따른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한편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산업별 협회와 산업체, 전문교육기관인 직업계고와 지역 대학이 상호협력의 관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 지원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중앙정부와 시·도자치단체 및 시·도교육

청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협력 및 운영 지원 모형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체로서의 역할보다는 지역의 직업교육과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별 협회와 지역사회 및 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이 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단위에서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과 같은 관련법에서 제도적인 지원책이 실체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와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 단위에서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은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체계의 실효성과 성과 및 경쟁력 확보를 담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단위에서의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체계는 다음과 같은 모형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체계 구축은 중등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계고를 축으로 하여 산업별 협회와 산하 산업체가 실질적인 주체이나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별 협의체, 전담 지원기관인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밀접한 관계망을 가져야 한다. 다만,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과 관련된 주체 간의 네트워킹 시에는 연계 및 협력 정도에 따라 지원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환경 조성,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과 운영 지원을 위해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정책 지원 협의회'와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운영 지원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협의체 구축이 직업계고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서 안정적인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성장경로와 관련을 맺어야 한다. 직업계고 학생의 노동시장 안착과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목표 및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접근이 갖추어져야 하고 지역의 협력체계 안에서 패키지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류지은 외, 2022, 210-211).

2) 직업교육 기반 협의체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프라 지원과 더불어 지역 학교의 긍정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지역의 직업계고는 학령인구도 적지만, 졸업 후의 취업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인재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한 우수학교 인증이나 취업 연계 지원 혹은 재정 지원 등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될 것이다.

지자체별로 예산구조에 제약이 있는데, 예를 들어 대구시와 같은 경우는 재정 상황 악화로 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에 집중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중등 직업교육이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인재양성과 관련한 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재정 지원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며, 자율적으로 교육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조달·세제·병역의 '고용연동 보상'이 필요하며, 조달 가점(지역 고졸자 채용·잔존 실적), 지방세 감면, 병역지정업체 가산점을 훈련품질·잔존율에 연동(자료의 기업 인센티브 강화 제언 보완) 등도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협력체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존 중등 직업교육의 인적자원투자 구조(예산액과 투입 구조)를 재확립하고, 중등 직업교육 투자의 방향과 정합성을 갖춘 협력체계 모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3. 협력체계 개선을 위한 모델 개발

가. 지역별 지역산업인재 양성을 위한 지·산·학 기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1) 지역별로 협력체계의 주체 설정 및 지속적인 참여 동기 부여

지역별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 주체가 모호하여 지자체와 교육청 중에서 어느 기관을 중심으로 구축해야 하는지 논의되고 있다. 앞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광주 지역에서는 중등 직업교육의 관점에서 지자체, 학교, 지역사회 간의 협력이 일부 분야에서는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 전반적으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는,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를 들 수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현장실습처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서 대전교육청에서는 2024년부터 대전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라 대전교육청과 대전시가 직업계고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전시교육청은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교육청-市-직업계고-대학-기업)를 구축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대전의 4대 핵심 전략산업을 비롯해 지역 특화 산업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뉴스파고, 2025. 6. 17.)는 점도 주목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지역별 협력체계 모델 구축에 있어서는 협력체계 모델에 대한 다양성이 필요하다.

앞의 개선 방안 1에서 제시한 대로 '(가칭)중앙센터'의 역할과 같이, 교육부의 중앙취업지원센터 및 시·도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와 같은 역할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학교현장의 입장에서는 협의체나 네트워크가 형식적 모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과정

개선과 취업 연계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크게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간담회나 회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거나, 학교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험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의사결정 권한과 실행력을 갖춘 협의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기업의 참여 또한 단기 수익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 방안이 필요하다.

2) 지역별 지자체 내 과별 협의회 및 업무 파트너 협력 지원

지역별로 직업교육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나 기업 파트너의 지속적 참여가 중요하며, 실제로 이러한 기반이 갖추어진 좋은 사례가 있다면 참고할 수 있다. 호남권의 경우, 광주형 마이스터고 시범학교 운영 당시, 교육청과 광주시, 참여 기업 간에 정기적으로 소규모 실무회의가 열렸고, 이를 통해 학과 개편 방향, 장비 지원,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빠르게 실행된 경험이 있다. 이처럼 담당자 간의 책임 있는 소통과 연속성 있는 참여가 협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대구·경북과 같은 초광역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업무 협력 파트너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중등 직업교육 담당부서의 이름이 달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자체의 경우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활성화 업무 추진국이 '복지건강국 공공의료과'로 되어 있어 담당자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전문가 면담에서 실제로 협력을 하고자 해도 담당 파트너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중등 직업교육 담당부서의 이름을 알기 쉽게 통일시켜야 협력이 수월할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 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RSC) 경험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위원회는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재 정책에 따라 지방노동관서, 지자체,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등이 협력하여 구성한 지역 거버넌스이다. 이 기관이 그동안 지역에서 축적한 교육 및 고용, 산업체 수요에 대한 경험을 중등 직업교육 협의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참여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지역인재 양성 연계 방안

1) 후학습자 친화적인 계속교육 운영

직업계고 졸업 이후 계속적인 학업을 위해서는 기존의 선취업·후진학 정책을 강화하여 지역의 중등 직업교육과 지역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사다리를 공고히 해야 한다. 또한, 지역 정주를 위한 정책의 수혜 대상인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인구·산업·문화 등 복합적 요소를 연계한 통합적 지역정주 인재양성정책의 설계, 즉 지역 선취업-후학습 모형 개발 및 교육 지원이 요구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직업계고와 전문대 등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을 연계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졸업 후 지역 산업체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주하려는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이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 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 산업체에서 현장실습과 취업을 연계하는 교육훈련 트랙도 새롭게 구안할 필요가 있다.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을 연계하는 모델의 경우, 지역 취업 후 후

학습 참여 시 희망 대학과 학과 수요의 반영, 후학습 참여 시기와 학위 취득 수요의 반영, 재정 지원 및 수업 운영 시간의 요구 반영 등이 필요하다. 또한 후학습자 친화적인 계속교육 운영 모델의 경우, 정규 학생을 위한 학과 운영과 달리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탄력화, 학기 운영의 다양화, 교육 지원 서비스의 체계화, 후학습자에 대한 지속적인 경력 관리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김기홍 외, 2015).

〈표 5-3〉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 연계 모델의 운영 개발

운영 모형 개발의 원칙	운영 내용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탄력화	·주말, 야간, 온라인, 블록 수업 및 세미나 등
학기 운영의 다양화	·다학기제, 시간제등록, 학점당등록제 등 운영
교육 지원 서비스의 체계화	·중도탈락 및 수업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 및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경력 관리 지원	·진로 및 경력개발 지원

자료: 연구진 정리.

기존의 선취업·후진학 정책을 강화하여 지역의 중등 직업교육과 지역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사다리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정주를 위한 정책의 수혜 대상인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인구·산업·문화 등 복합적 요소를 연계한 통합적 지역 정주 인재양성정책의 설계, 즉 지역 선취업-후학습 모형 개발 및 교육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취업-후학습 학위 루트와 같은 시간표를 개편하여 야간·주말·블록·다학기제·학점당 등록을 지자체별 RISE 대학과 표준화(고교-전문대-학사 전환 코스)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재직 중 학위는 도비 학습계좌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2) RISE와의 연계 안에서 중등 직업교육의 역할 논의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RISE사업 안에서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연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북형 RISE 기반 직업교육 혁신 논의(도-교육청 공동연구)를 통해 RISE 추진 대학(금오공대, 한동대 등)과 고교·전문대 간 연계 방안이 모색되었으나,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 연계는 초기 논의 수준이며, 직업계고 중심 네트워크 수준으로는 미흡한 상태이다. 광주시도 2029년까지 추진되는 5년간의 RISE를 통해 교육, 산업, 문화·복지·정주를 총망라한 이른바 '라이즈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며, 지역 정주 취업률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의 AI인재양성도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단계 직업교육에서 연계하여 인재양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부 국정과제 99번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교육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AI인재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고등교육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RISE사업에서 중등 직업교육과의 연계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며, 이를 개선하고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림 5-4] RISE 사업에서 직업계고와 대학 연계 방안



자료: 교육부(2023a), 연구진 일부 수정.

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와 지역 산업체의 산학협력 방안

1) 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필요

지역별로 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앞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았듯이 학교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적 가치와 학생 중심의 성과에 비중을 두는 반면, 기업은 프로그램 참여가 실질적인 채용과 연결되는가에 따라 효용성을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런 관점에서 학교와 기업 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한 소통 구조의 정례화가 필요할 것이다. 즉, 기업은 학생 평가 결과를 학교에 환류하고, 학교는 기업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설계나 사전교육을 체계화하여 신뢰를 높여야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직업계고 학점제교육과 같이 경직적인 직업계고의 학과 체제 한계를 벗어나 산업체 수요와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을 '현장훈련기관'으로 법제화하고, 이에 따른 품질연동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장훈련기관 규정·OJT/Off-JT 결합·멘토기준·학습기록 의무화를 지자체 차원 조례와 협약 표준안으로 즉시 적용할 수 있고, 인센티브는 '채용 건수'가 아니라 '훈련 품질·잔존 성과'와 연동(모듈 이행률, 자격취득, 12개월 고용 유지 등)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2) 지역별로 산업수요와 직업계고의 특성에 따른 협력체계 모델 구축

지역별로 성공적으로 운영된 모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 대로 '경북도교육청 – 경북도청 – 경북TP – 경북산학협력단체 연계 MOU 체결(2022~)'을 통해, 직업계고 인재의 취업 연계, 기업 현장실습 확대,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한 경험을 살릴 수 있다. 이 외에도 '경북 원자력마이스터고–한수원–울진군 협력모델'을 통해 졸업 후 지역 내 원자력 분야 취업 연계 체계 구축(교육–기업–지자체 3자 협약, 취업 약정 MOU → 취업률 제고), 2022년 기준 92.9%에 이르는 취업률, 높은 공기업 및 대기업 취업 비율, 글로벌 현장실습 및 해외취업 등의 실현을 구체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직업계고의 직업교육 메커니즘을 일 기반 학습으로 개선해 지역 산업의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유럽의 고등학교 직업교육이 실제 일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을 결합함으로써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및 청년 실업률 완화에 효과적인 결과를 얻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산학협력의 출발점을 지역 산업 및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 두도록 권유하는 대만의 '사회책임실천(USR)' 프로그램을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지산학협력

교육을 강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 재정 묶음(funding braid)과 같은 방안도 중요한데, 가령 직업계고-중소기업-지자체 삼자 패키지를 모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i) 훈련모듈당 지자체 지원비용의 바우처, (ii) 취업·잔존 성과급, (iii) 공동훈련센터 설비 보조 등의 시스템을 모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앞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산점, 보조금 지급 등 구체적 인센티브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3) 기능적 연계 중심 접근 필요

지역별 산업구조는 다르지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직무 단위에서는 연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의 산업별 접근보다는 직무, 역할, 기능 단위로 접근하여 협력하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예산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운영된 협의체 가운데 기능적으로 연계된 성공적인 협의체를 중심으로 하여 전체적인 협의체를 구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직무 단위' 수요 정의와 공동훈련센터(Cluster)를 확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산업별이 아니라 직무·기능 단위(예: 전장배선, 설비예지, 공정계측, 수소·ESS 안전)로 모듈화하여 권역 공동훈련센터에서 운영(장비·멘토 풀 공유)할 수 있다. 권역 공동훈련센터에서는 직무별 필요 장비를 갖춘 공동교육 실시도 가능한데, 지역의 직업계고와 여러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해당 직무에 필요한 최신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내 마이스터고·특성화고-폴리텍-TP를 클러스터로 묶고,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장비·멘토 비용 바우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마. 광역권 단위의 협의체 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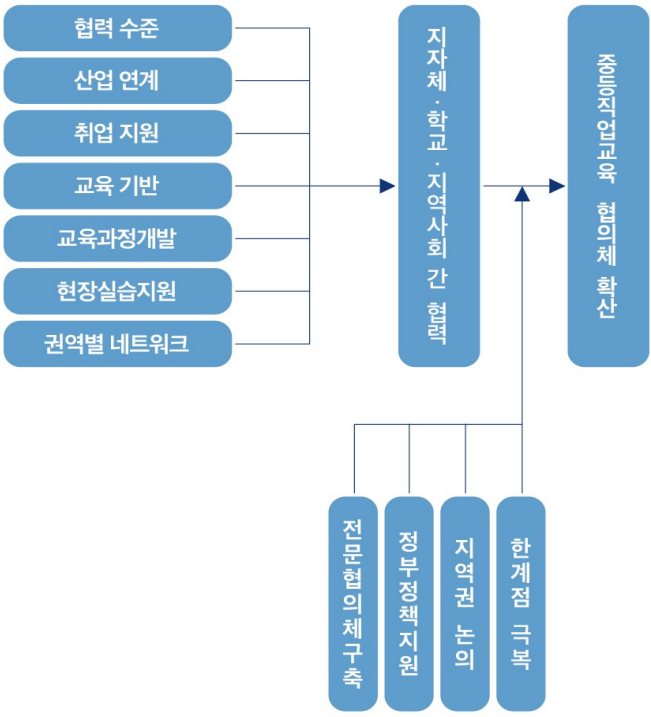
1) 광역권 협력 모색과 광역권 협의체의 법정·상설화

경북의 직업교육 현황을 보면, 경북은 특성화고 취업률이 전국 1위(66%)로 개별 성과는 우수하나, 전체적인 협력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광역권 협력이 필요한데, 대구와 경북은 생활·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다. 특히 미래차, 기계·금속, 의료, ICT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대구·경북을 넘나들며 활동 중이다. 이에 권역 차원의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취업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호남권의 광주는 타 시·도에 비해 교육청과 협력은 잘 되는 편이나,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부서별로 경계가 심해서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 예를 들면, 초중등교육협력과와 청년정책과의 경계가 있어서 협력이 어려우므로,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졸업 전 지원과 졸업 후 지원 관련 정책 연계가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방향 제시에 있어서 지역 산업구조와 학교 간 미스매치 해소, 마이스터고 중심의 고용 성과 편중, 광역권 단위 산업협력 수요 증가, 산학관 거버넌스 필요 등의 사유로 인력양성의 다양한 주체별 협의체 구축이 요구된다. 각각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5-5] 중등 직업교육 협력을 위한 주체별 협의체 구축 방안



자료: 연구진 작성.

1) 권역별 특화 거버넌스 구축 및 성공 사례 확산

◦ 지자체·학교·지역사회 간 협력
- 협력 수준: 중간 정도, 분야별 편차 존재
- 산업 연계: 직업계고-산업체 연계 등
- 취업 지원: 지방 공무원 특별전형 운영
- 교육 기반: 직업교육특구 사업, 미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정 개발: 지역 산업수요 반영 미흡
- 현장실습 기업 발굴 및 질 관리 미비
- 권역별 네트워크 부재(지역 각 권역별)

◦ 중등 직업교육 협의체 논의
- 논의 현황: 전문 협의체 구축은 초기 단계
- 정부 정책 방향: ISC/RSC 협의체 운영, 지역인재-취업-정주 선순환 모델 구축,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활용
- 각 지역권 논의: 지역별 혁신 플랫폼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청 교육협력위원회 운영, 개별 산학협력 성공 모델 확산 논의
- 한계점: 구체적인 실행 계획 부족, 권역별·산업별 특화 협력 네트워크 부족, 제도적 기반 미비로 운영의 지속성이 낮음.

2) 단계별 거버넌스 구축 및 기반 마련

◦ 지속가능한 중등 직업교육 협의체 구축을 위한 여건과 사례
- 단계별 실행 방안 [그림 5-6] 참조

[그림 5-6] 지속가능한 중등 직업교육 협의체 구축 단계별 실행 방안



자료: 연구진 작성.

이러한 광역권 협의체를 법정·상설화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의 사례와 같이 중등 직업교육협의회를 조례로 설치하고, 분기별로 의결-연말 평가를 의무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의제로서 (i) 직무표준 개정, (ii) 취업처 질 관리, (iii) 예산 배분 등을 모색할 수 있다.

2) 성과 측정, 평가 모델 운영

그렇다면, 지역별로 구축된 협력체계의 성과를 어떤 지표로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지, 협의체 모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과 기반 '지역인재 콤팩트(Compact)'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광역(경북)-교육청-시군-RSC/ISC-기업 컨소시엄이 매년 성과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계약하는 방식으로 핵심은 (i) 직업계고 취업률, (ii) 12개월 지속 고용률, (iii) 지역 잔존율(동일 권역 근무), (iv) 중위 임금 상향, (v) 전공 일치율 등이며, 이들의 달성도에 따라 도비 매칭·세제·조달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으로, 앞의 모니터링·DB·중앙센터 구상과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다.

참고문헌

경상북도청. (2023. 10. 5.). **경북도, 4대 교육대전환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 열어간다!.** [보도자료]. 경상북도청. https://www.gb.go.kr/Main/page.do?mnu_uid=6792&dept_code=&dept_name=&BD_CODE=bbs_bodo&bdName=%EB%B3%B4%EB%8F%84%EC%9E%90%EB%A3%8C&cmd=2&Start=200&B_NUM=344665601&B_STEP=344665600&B_LEVEL=0 (검색일: 2025. 09. 23.)

고용노동부. (2024. 2. 21.).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선언**.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4. 11. 7.). **"미래 기술인재, 함께 키워요"**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216 (검색일: 2025. 09. 23.)

곽현아. (2025. 7. 30.).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정주·취업 연계 추진.** 데이터솜. https://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10 (검색일: 2025. 9. 14.)

관계부처합동. (2016).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관계부처합동. (2017).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안.**

관계부처합동. (2018b).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관계부처합동. (2023a). **국가교육통계.**

관계부처합동. (2023b).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

관계부처합동. (2024a). **2024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매뉴얼.**

관계부처합동. (2025).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선정심의 안내서(2025년 개정판)**.

광주광역시. (2024).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2025a). **내부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2025b).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계획서(내부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2025).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서(내부자료)**.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육부. (2020). **제3단계(2020~2024) 학교기업 지원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교육부. (2022a).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2022. 4. 1. 기준).** 교육부.

교육부. (2022b).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교육부. (2022c). **산학협력 마일리지 세부 시행계획.** 교육부.

교육부. (2023a).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본격 시도** [보도자료].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411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검색일: 2025. 10. 22.)

교육부. (2023b).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교육부.

교육부. (2023. 11. 1.). **2023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교육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7118 (검색일: 2025. 10. 22.)

교육부. (2023. 12.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 결과 발표** [보도자료]. 교육부. https://blog.naver.com/moe

blog/223283781547 (검색일: 2025. 10. 22.)

교육부. (2024a).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 교육부.

교육부. (2024b). **2025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공모 계획(안)**. 교육부.

교육부. (2024, 11. 6.).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교육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9008 (검색일: 2025. 10. 22.)

교육부. (2025a). **2025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추진계획(안)**. 교육부.

교육부. (2025b). **2025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계획**. 교육부.

교육부. (2025c).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 계획**. 교육부.

교육부. (2025d). **경북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 교육부.

교육부. (2025. 2. 6.).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2차 공모 실시** [보도자료]. 교육부. https://blog.naver.com/moeblog/223749646948? (검색일: 2025. 10. 22.)

교육부. (2025. 3. 19.).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1년, 우수사례를 한자리에 모아 공유** [보도자료]. 교육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9697 (검색일: 2025. 10. 22.)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22). **2021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교육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24). **2024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교육부.

국토교통부. (2018).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198호, 국토교통부.

김기홍, 강일규, 이수경, 허영준, 조희경. (2015). **후진학 계속교육 수요조사 및 장·단기 발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기홍, 홍선이, 주홍석. (2018).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대학 역량기반**

교육 운영 내실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미란, 임언, 유한구, 정재호, 이주희. (2019). **지방분권화시대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성남. (2024). 전환 시대의 협약형 특성화고 정책 도입 및 과제. The HRD Review, 27(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0-23.

김성남, 고혜원, 류지은, 전승환, 허영준, 오혁제. (2022).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용현. (2025). **경상북도 지역인재활성화 방안**. 경북연구원.

김종우, 김남희. (2022). **특성화고 학교, 학생, 교원 수 변화 동향 분석.** KRIVET Issue Brief, 제233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뉴스1.(2025.07.11.).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일꾼으로”…권익위 "제도개선 추진",** https://www.news1.kr/politics/pm-bai-comm/5843007(검색일: 2025.10.27.)

뉴스파고. (2025.06.17.). **대전교육청, ‘2025년 대전교육발전특구 대전희망인재 발대식’ 개최,** https://www.newspago.com/112494(검색일: 2025.10.27.)

동북지방통계청. (2024. 5. 28.). **시도간 지표 비교로 살펴본 대구 변화상.** [보도자료]. 동북지방통계청. https://mods.go.kr/boardDownload.es?bid=12000&list_no=431122&seq=1 (검색일 2025. 12. 18.)

대구광역시청. (2024). **대구광역시, 초고령사회 진입... 고령친화도시 본격 추진!**. https://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todaylist&mkey2=2&aid=265763&bpage=451&stext= (검색일: 2025. 12. 18.)

대구광역시청. (2025). **2025년 5월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구광역시청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로 닻 올린다.** 보도자료(2023. 9. 14.). https://www.balance.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1&boardNo=9228&searchCategory=&page=8&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41 (검색일 2025. 10. 24.)

류기락, 안우진, 박나실, 조성익, 김윤아, 여영준, 최영렬. (2023). **복합 전환과 직업능력정책의 미래: 디지털·그린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의 결합을 위한 전략.**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류지은, 김성남, 안재영, 강서울. (2022). **직업계고 졸업자의 경력경로 유형과 특성**,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문한나, 정은진, 장혜정, 박상오, 나동만, 안선민. (202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역할 및 운영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민숙원, 송창용, 장굉남. (2023). **대학-기업-지자체 협업을 통한 지역 중심의 해외인재 유치 방안** (기본연구 2023-3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동열, 허영준, 안재영, 김성남, 나현미. (2021). **직업교육 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The HRD Review, 24(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5-50

백원영,이상준,주휘정,정재호,안선민,박동,김형만. (2024),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지역인재 정책 전략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2024a). **2024년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공표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024b). **2024년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분석자료집.**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024c). **2024년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조사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025). 2025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송낙현. (2023).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의 현황과 개선과제. 산업 및 기술변화에 대응한 미래 인재 양성.**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총서 2023-27, 139-155.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오부윤. (2018). **해외직업교육실태조사보고서 – 대만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오부윤. (2019). **대만 고등직업교육 개혁-직업교육의 존중과 보호-**.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9(2), 53-59.

유진영, 허영준, 전종호, 백원영. (2023). **지역 산업인력 양성에 기반한 중등 직업교육 산학협력 모델 구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덕기. (2025. 04. 23.). **대구에 '미래직업교육센터 개관'… "창의적 기술인재 양성".**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3069700053 (검색일: 2025. 09. 23.)

이상돈, 김종우, 박동열, 윤여인, 최호. (2020).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혁신 공동체 활성화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상훈, 최동선, 안재영, 류지은, 김남희, 최지희, 길혜지. (2024). **인구감소 시대의 직업교육 정책 연구: 저출생에 대응하는 직업교육 체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승봉, 김봄이, 박상오, 박명준. (2023). **지역 숙련 거버넌스 제도화의 조건과 과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장명희. (2022). **평생학습사회에서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한국교육학회 2022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161-188.

장혜정, 전재식, 유한구, 백원영, 박상오, 김승보. (2024). **지역균형발전과 지**

역주도 일자리-인재육성 연계방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라남도교육청. (2025). **전남도교육청 내부자료**.

전라남도청. (2025). **2024년도 전남교육 통계연보** [데이터 세트]. https://www.jne.go.kr/open/cm/cntnts/cntntsView.do?mi=1830&cntntsId=647 (검색일: 2025. 09. 23.)

전성만, 정현민. (2023).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20(3), 57-83.

전재식. (202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지역인재 정책 이슈 및 전략.** THE HRD Review, 26(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7-23.

전재식, 김선태, 김형만, 박상준. (202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인재 전략.**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재호, 안우진, 박상오. (2023).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1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지영. (2025. 1. 23.). **직업계高 졸업생도 떠난다… 지역 취업 여건 개선하려면?**.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74241 (검색일: 2025 . 9. 14.)

차재권, 류태건. (2014). **지역경제발전을 향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 성장동력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8(12), 157-180.

최수현, 류지은, 윤종혁. (2023). 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 정착. KRIVET Issue Brief, 249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최아진. (2023. 2. 7.). **경북교육청, 지역인재 양성 네트워크 구축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교육연합신문. https://www.eduyonhap.com/news/print.php?no=70365 (검색일: 2025 . 12. 18.)

하혜수, 김철회, 박경순. (2018).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허영준, 이수정, 이상훈, 이정민, 신동준. (2021). **교육자치 및 평생교육 확대에 따른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2024).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발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0). **학교기업 업무 매뉴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5). **2024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매뉴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외 문헌)

국가발전위원회. (2024). **國家人才競爭力躍升方案(국가 인재 경쟁력 도약 방안) 2023-2027**. 국가발전위원회.

대만 교육부. (2016). **105年中華民國技術及職業教育簡介-一流職人養成之路(105년 중화민국 기술 및 직업 교육 소개-일류 직업인 양성의 길)**. 대만 교육부.

대만 교육부. (2021a). **十二年國民基本教育課程綱要(12년 국민 기본 교육 교육과정 강요) 수정본**. 대만 교육부.

대만 교육부. (2021c). **我國技職教育推動産學合一現況及減少學用落差成效與檢討專題報告(우리나라 기술직업 교육 추진 산학 일체 현황 및 학용 낙차 성과 및 검토 전문 보고)**. 대만 교육부

대만 교육부. (2021d). 기술직업교육 및 산학협력개혁 정부보고. 대만교육부

대만 교육부. (2022a). **十二年國民教育技術型高級中等學校一般科目領域科程綱要(12년 국민 교육 기술형 고급 중등학교 일반 과목 영역 과정 강요)**. 대만 교육부

대만 교육부. (2022b). **建置區域產業人才及技術培育基地計畫(구축 지역 산업 인재 및 기술 배양 기지 계획)**. 대만 교육부

대만 교육부. (2022c). **中華民國技術及職業教育簡介(중화민국 기술 및 직업 교육 소개)**. 대만 교육부

대만 교육부. (2024a). **111學年度高級中等學校應屆畢業生升學就業就學概況調查(111학년도 고급 중등학교 당해 졸업생 진학 취업 진학 개황 조사)**. 대만 교육부.

대만 교육부. (2024b). **112學年度高級中等學校概況統計(112학년도 고급 중등학교 개황 통계)**. 대만 교육부

대만 교육부. (2024c). **112學年學校基本概況統計結果提要分析(112학년 학교 기본 개황 통계 결과 분석)**. 대만 교육부 통계처.

대만 입법원. (2021). **立法院第10屆第3會期**教育及文化委員會第19次全體委員會議議報告**(입법원 제10계 제3회기 교육 및 문화위원회 제19차 전체 위원회 보고서)**. 대만 입법원

대만 행정원. (2015). **技術及職業教育法(기술 및 직업교육법)**. 대만 행정원.

대만 행정원. (2025). **技術及職業教育政策綱領(기술 및 직업교육 정책강령) 수정본**. 대만 행정원.

張嘉琪, 鐘聰美. (2011). **經濟發展與臺灣職業教育的變革(경제 발전 및 대만 직업 교육의 변화)**. 南港工高學報, 0(29), 40~42.

張仁家, 陳琨義. (2017). **從技術及職業教育法看我國技術型高中的發展與因應(기술 및 직업 교육법으로 본 우리나라 기술형 고등학교 발전 및 대응)**. 技術及職業教育學報, 7(2), 64~65.

許永昌. (2022). **高級中等學校技職教育的問題, 因應策略與展望(고급 중등학교 기술 직업 교육 문제, 대응 전략 및 전망)**. 臺灣教育評論月刊, 11(5), 33~35.

張錫輝. (2022). **當前中等職業教育學制面臨的困境與對策(현재 중등 직업 교육 체제의 어려움 및 대응책)**. 臺灣教育評論月刊, 11(5), 27~32

張慶勳. (2024). **地方教育治理的問題與解決策略(지방 교육 거버넌스 문제 및 해결 전략)**. 台灣教育研究期刊, 5(2), 65~68.

AMS-Arbeitsmarktservice Österreich. (2023). **Annual Report 2023**. Data source: AMS Data Warehouse (AMS-DWH), Cube 2023.

Bundesanstalt Statistik Őesterreich. (2025). **STATISTIK AUSTRIA**. Gute Chancen am Arbeitsmarkt mit BMS-Abschluss. .Pressemitteilung: 13 521-015/25.

Bundesministerium fur Arbeit und Wirtschaft. (2023). **Die Lehre. Duale Berufsausbildung in Osterreich**. Wien.

Bundesministerium fur Arbeit und Wirtschaft. (2024). **Arbeitsmarktpolitik Osterreich – ein Uberblick 2023**. Wien.

Institut fur Bildungsforschung der Wirtschaft. (2024). **Lehrlingsausbildung im Uberblick 2024. Strukturdaten, Trends und Perspektiven**. ibw-Forschungsbericht Nr. 221, Wien.

OECD. (2025). **Vocational education and traning.** https://www.oecd.org/en/topics/vocational-education-and-training-vet.html (검색일: 2025. 1. 21.)

Oesterreich. (2025). **Unterstutzungen und Forderungen fur Lehrlinge**. https://www.oesterreich.gv.at/themen/bildung_und_ausbildung/lehre-und-berufsbildende-schulen/Seite.333903.html. 연구자가 재작성 정리함. (검색일: 2025. 4. 20.)

Qualitaet-lehre. (2025). https://www.qualitaet-lehre.at/lehrlingsausbildung/lehrlingsausbildung-in-oesterreich/lehrberufe/ (검색일: 2025. 4. 20.)

WKO. (2023). **Stichtag: Ende Dezember 2023**. (검색일: 2025. 4. 20.)

(웹사이트)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gbe.kr/main/main.do (검색일: 2025. 5. 8.)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https://www.gb.go.kr (검색일: 2025. 09. 23.)

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https://kosis.kr/visual/eRegionJipyo/themaJipyo/eRegionJipyoThemaJipyoView.do (검색일:2025. 12. 18.)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제정) (검색일: 2025. 12. 18.)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 2016. 4. 29., 법률 제13931호, 2016. 1. 28., 타법개정) (검색일: 2025. 12. 18.)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일부개정). https://law.go.kr (검색일: 2025. 10. 22.)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검색일: 2025. 12. 18.)
-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시행 2020. 6. 1., 국토교통부예규 제639호, 2020. 6. 1., 일부개정) https://law.go.kr (검색일: 2025. 5. 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18호, 2025. 10. 22., 타법개정) (검색일: 2025. 12. 18.)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57호, 2025. 5. 27., 일부개정). https://law.go.kr (검색일: 2025. 12. 18.)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7. 10., 법률 제19514호, 2023. 7. 4., 타법개정) (검색일: 2025. 2. 14.)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https://law.go.kr (검색일: 2025. 10. 22.)
- 「**초·중등교육법**」(시행 2025. 10. 1.. 법률 제20862호, 2025. 4. 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5. 10. 2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5. 10. 2., 대통령령 제35784호, 2025. 9. 3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5. 10. 23.)
- 「**평생교육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https://law.go.kr (검색일: 2025. 5. 1.)

대구시청 홈페이지. https://dge.go.kr/main (검색일: 2024. 10. 31.)

대만 경제부 산업인재발전정보망 홈페이지. https://italent.org.tw (검색일: 2025. 7. 3.)

대만 대학사회책임추진센터 홈페이지, usr.moe.gov.tw. (검색일: 2025.7.5.)

대만 중화민국통계정보망(*中華民國統計資訊網*) 홈페이지. *www.stat.gov.tw (검색일: 2025.5.7.)*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s://dje.go.kr/main. (검색일: 2025. 5. 5.)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경기 안산·경북 포항 '직업교육 혁신지구' 선정**.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317 (검색일:

2025. 12. 18)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s://pen.go.kr/main (검색일: 2025. 5. 5.)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홈페이지. www.hrdkorea.or.kr/1/1/3/6 (검색일: 2025. 5. 6.)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s://jne.go.kr/main (검색일: 2025. 5. 5.)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hrd4u.or.kr/rsc/ (검색일: 2025. 5. 14.)

직업교육 혁신지구 경북지원센터.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소개**. https://educluster.kr/pbl/center/introduce/gyeongbukIntro.do (검색일: 2025. 05. 12.)

직업교육 혁신지구 대구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educluster.kr/daegu/main.do (검색일: 2025. 5. 2.)

직업교육 혁신지구 대구지원센터.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소개**. https://educluster.kr/pbl/center/introduce/daeguIntro.do (검색일: 2025. 09. 23.)

직업교육 혁신지구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educluster.kr/ (검색일: 2025. 5. 1.)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parentId=D.1;D_2.2;#D_2.2 (검색일: 2025. 12. 1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kiat.or.kr/ (검색일: 2025. 12. 18.)

부 록

1. 설문지-직업계고용
2. 설문지-산업체용

지역 기반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에 관한 인식 조사 (학교)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올해 "지역의 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등 직업교육에 관련된 연구는 지역과의 산학협력하에 학교교육의 개선에 포커스를 두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거버넌스, 교육행정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실제 지역에서 학교와 어떻게 매칭되는지는 깊이 고찰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별 사정이 다른 상황에서 학교교육은 지역의 산업과 노동시장의 수요와의 순환구조 속에서 개선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의 일환으로 본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중등 직업교육기관이 지역의 산업수요 및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직업교육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 수요와 밀착된 현장형 교육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의 사업체 및 대학 등과 어떤 협력을 맺고 있는지, 그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고 혜 원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문의처]

▣ 주관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연구책임자)
▣ 조사기관: ㈜○○○○○○ ○○○ 연구원(070-○○○○-○○○○, ○○○○@○○○○○○○.com)

A. 학교 정보

(2025년 3월 기준)

학교명			
설립 유형	① 국공립 ② 사립	학교 소재지역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농촌(읍,면)
주요 개설학과 분야 (※중복응답 가능)	① 농생명산업 ② 공업 ③ 상업정보 ④ 수산·해운 ⑤ 가사·실업	학교 규모	① 300인 이상 ② 100~300인 미만 ③ 50~100인 미만 ④ 50인 미만
인근지역 주요산업 분야	① 농업, 임업,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관련업 ⑤ 건설업 ⑥ 음식점업 ⑦ 과학 기술 및 서비스업 ⑧ 기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분류에 따름

B. 최근 3년간 졸업생의 진로현황을 %로 기술
(※ 정확한 비율을 모르시더라도 대략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연도 4월 기준)

연도	취업율		진학율	중도탈락율	기타	합계 (100%)
	취업률	1년 이상 잔존율				
2023						
2024						
2025						

C. 귀교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해 주세요.

구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응답 (택 1)	①	②

D. 귀하께서는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① 취업 부장 (→E로 이동)
② 진로진학상담 부장 (→E로 이동)
③ 보직 없음 (→Part Ⅰ로 이동)
④ 기타 ( )(→E로 이동)

E. 그 역할을 맡으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3년 미만
④ 3년 이상

Ⅰ	학교-지역 사업체-대학-지자체 협력 현황	다음은 귀교가 중등 직업교육을 위해 지역의 사업체나 대학, 지자체 등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교육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그 외에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면 본 항목의 질문에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교에서는 지역의 산업현장과 연계된 중등 직업교육교육 운영에 있어서 지역의 사업체나 대학, 지자체 등과 협력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해당 사항 모두 선택)

① 학교가 위치한 지역 내 사업체와 협력하고 있음 ②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대학(연구센터) 및 교육훈련기관과 협력하고 있음

③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음 ④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교육청과 협력하고 있음

⑤ 타 지역의 사업체와 협력하고 있음 ⑥ 타 지역의 대학(연구센터) 및 교육훈련기관과 협력하고 있음

⑦ 협력하지 않고 있음 (→ 4번으로 이동)

2. 위의 사업체, 지자체, 대학,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협력이 얼마나 밀접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1번에서 선택한 곳에 대해서만 응답)	협력의 밀접도				
	거의 교류가 없는 편	-	보통	-	매우 밀접
학교가 위치한 지역 내 사업체	①	②	③	④	⑤
학교가 위치한 지역 내 대학(연구센터) 및 교육훈련기관	①	②	③	④	⑤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	①	②	③	④	⑤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타 지역 사업체	①	②	③	④	⑤
타 지역 대학(연구센터) 및 교육훈련기관	①	②	③	④	⑤

* 매우 밀접: 매년 적극적으로 중등 직업교육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활동을 지원해 줄 것으로 의지할 수 있는 수준

3. 위의 사업체, 지자체, 대학,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협력 활동 중 수행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구분 (1번에서 선택한 곳에 대해서만 응답)	각 기관과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모두 선택						
	현장실습		단기 진로 체험	NCS 실무 교원 연수	직장인 멘토링	교육 과정 컨설팅	시설 및 기자재 설비 이용
	취업 연계형	일반형					
학교가 위치한 지역 내 사업체	□	□	□	□	□	□	□
학교가 위치한 지역 내 대학(연구센터) 및 교육훈련기관	□	□	□	□	□	□	□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	□	□	□	□	□	□	□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교육청	□	□	□	□	□	□	□
타 지역 사업체	□	□	□	□	□	□	□
타 지역 대학	□	□	□	□	□	□	□

4. 귀교에서 과거부터 최근까지 실행했던 사업체/대학/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중 특별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되는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표에 맞춰 말씀해 주세요.

구분		내용
1) 프로그램 수행 경험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질문 6번으로 이동)
2) 실행연도	첫 실행연도	① 2022 ② 2023 ③ 2024 ④ 2025
	마지막 실행연도*	① 2022 ② 2023 ③ 2024 ④ 2025 ⑤ 실행 중
3) 구체적인 활동 내용		
4) 활동 기간 (학생의 사전+현장+사후 활동 합산 기준)	프로그램 운영 기간	( )개월
	해당 기간 내 총 활동 시간	( )시간
5) 처음 계획을 세운 교사		① 응답 교사 본인 ② 전에 해당 업무를 맡았던 다른 교사 ③ 학교장 ④ 기타 ( )
6) 활동 운영에 필요한 자원	예산 규모	( )천 원
	인력	교사 ( )명
7) 자원 확보 방법		
8) 학생 만족도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비교적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9) 지자체의 지원		① 전혀 없음 ② 별로 없는 편임 ③ 보통 ④ 비교적 많은 편임 ⑤ 매우 많음
10) 사업체/대학의 참여		① 전혀 없음 ② 별로 없는 편임 ③ 보통 ④ 비교적 많은 편임 ⑤ 매우 많음

*계속 실행 중인 협력활동이라면 마지막 연도 대신 '실행 중'으로 작성해주세요.

4.1 앞에서 응답하신 그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까?

① 예 (→ 4.2 응답 후 5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4.3 번 응답 후 5번으로 이동)

4.2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 2개 택)

① 학교장/학교감의 적극적인 지지 ② 활동 운영 예산 및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③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④ 지역 사업체/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⑤ 협력활동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담당 교사의 의지 ⑥ 학생 및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
⑦ 기타 ( )

4.3 활동을 중단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 2개 택)

① 학교장/학교감의 미온적 태도 ② 활동 운영 예산과 인력의 부족
③ 지자체의 소극적 지원 또는 지원 부재 ④ 지역 사업체/대학의 소극적 참여 또는 불참
⑤ 담당 교사의 의지 부족 ⑥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과도한 요구 사항
⑦ 기타 ( )

5. 귀교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 해당되는 것 모두 선택)

① 협약형 특성화고 ② 직업교육 혁신지구
③ 해당 없음(→ Part4로 이동)

6. 귀교는 어떤 목적으로 지자체와 지역 사업체, 대학 등과 협력하는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① 교육의 질 향상 ② 지역 내 인력 수요 파악
③ 졸업생 취업률 제고 ④ 졸업생 지역 내 잔존률 제고
⑤ 기타 ( )

7. 귀교는 어떤 계기로 지역의 인재 양성 협력체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① 지자체의 홍보/공문 ② 중앙부처의 홍보/공문 ③ 타교 교원으로부터 관련 정보 습득
④ 지역 협의체로부터 관련 정보 습득 ⑤ 교육청 또는 상위기관의 협약 ⑥ 기타 ( )

8. 귀교는 지역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직업교육 운영에 전혀 필요 없음					직업교육 운영에 필수

II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운영 현황

다음은 귀교의 지역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운영 현황에 관한 항목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학협력위원회 설치 여부

설치 여부	① 설치 (※ 아래 사항 기재) ② 미설치 (→ 2번으로 이동)		
위원회명		운영 예산	( )만 원
주요 활동 (※ 중복응답 가능)	① 지역 협력 프로그램 검토 및 자문 ③ 지역 협력 관련 시설·장비 지원 ⑤ 지역 내 최신 산업 동향 및 인력 수요 검토	② 취업 및 진학 정보 제공 ④ 지역 협력 관련 학생조직 지원 ⑥ 기타: ( )	
전담인력 또는 전담조직 구성	① 전담 부서가 있음 ② 전담교사 1인이 있음 ③ 없음		

※ 관련 위원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위 양식을 복사하여 작성해 주세요.

2. 성공적인 지역의 인재양성 협력체계를 위하여 단위학교에 전담인력/조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담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함 (→ 2-1번으로 이동)
② 전담 조직은 필요 없으나, 전담인력만 필요함 (→ 2-2번으로 이동)
③ 둘 다 필요 없음 (→ 3번으로 이동)

2-1. (①에 응답한 경우)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중복 가능)

① 체계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② 조직 내 위상을 위해
③ 대외 기관과의 소통 용이 ④ 교원의 업무 과중화
⑤ 추수 지도 및 학생 직장 적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⑥ 취업 사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⑦ 기타

2-2. (①과 ②에 응답한 경우) 학교 규모 별로 전담 인력은 몇 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00인 미만 ( )명
100~200인 미만 ( )명
200~300인 미만 ( )명
300~500인 미만 ( )명
500인 이상 ( )명

3. 귀교는 협력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① 예 (→ 3-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4번으로 이동)

3-1. (①에 응답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 해당 사항 모두 선택)

① 학생 피드백 수집 ② 협력 기관 피드백 수집
③ 수집된 피드백 검토(개별 교사) ④ 수집된 피드백 검토(협의회)
⑤ 개선 방안 논의 및 실행 (협의회) ⑥ 기타 ( )

4. 귀교가 위치한 지자체에서는 지역 기반 협력체계를 위한 중등 직업교육 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예 (→ 4-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4-1번으로 이동) ③ 모름 (→ Part 3으로 이동)

4-1. (5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귀교는 지자체의 협력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2. (5-1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 귀교가 협력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Ⅲ	지역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역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애요인과 운영 실태에 대한 항목입니다.

1. 귀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 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문제점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의 정도				
	① 전혀 아님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임	④ 그러함	⑤ 매우 그러함
1) 협력업체 모집의 어려움					
2) 협력업체 참여의 어려움					
3) 학교 교육과정 연계의 어려움					
4) 실습 과정 설계의 어려움					
5) 실습과제 운영·관리의 어려움					
6) 소요 재원 확보의 어려움					
7) 전담 인력 확보의 어려움					
8) 인적교류(교·강사)의 어려움					
9) 기대보다 낮은 학습효과					

2. 귀교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각 사전교육이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구분	① 전혀 안 됨	② –	③ 보통임	④ –	⑤ 매우 잘 됨
1) 직업윤리 및 직장 에티켓					
2) 필수 노동 법규					
3) 안전사고 예방					
4) 성희롱 예방 교육					
5) 사업장 내 관련 규정 이해 및 준수 지도					
6) 전공기초 이론 교육					
7) NCS 직업기초능력교육					
8) 학습 일지 및 학습관리 프로그램 작성 교육					
9) 경제 및 사회적응력 함양 프로그램					
10) 기타 ( )					

3. 귀교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느끼는 용이성 및 중요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이성					중요도				
	① 전혀 쉽지 않음	② –	③ 보통임	④ –	⑤ 매우 쉬움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	③ 보통임	④ –	⑤ 매우 중요함
1) 운영관리										
2) 학생관리										
3) 산업체 발굴 및 관리에 대한 인식 및 요구 파악										
4) 관계부처와의 협력										
5) 프로그램 운영 예산 확보										

4. 귀교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의 정도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임	④ 그러함	⑤ 매우 그러함
1) 학교교육과정 연계 및 프로그램의 낮은 만족도					
2) 학교 전담인력의 부재					
3) 기업 전담인력의 부재					
4) 학생관리의 어려움					
5) 성과관리체계(양적 및 질적 평가)의 부재					
6) 지자체 협조 부족					
7) (센터, 지자체, 기업, 학교의) 운영상 참여 및 경험 부족					
8) 학생 및 학부모 수요 부족					
9)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과다한 규제 조항					

5. 귀교의 지역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 미만 ② 10%~30% 미만 ③ 30%~50% 미만 ④ 50% 이상

5-1. 중도 탈락의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2개 선택)

① 대학 진학 및 진로 변경 ② 가정사/경제적 문제 ③ 적성 불일치
④ 기업/조직 환경 부적응 ⑤ 열의 부족(근무태도 부족) ⑥ 실습 환경 열악(임금/복리후생/실습비)
⑦ 취업에 대한 낮은 기대 ⑧ 현장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부화 ⑨ 전공과 무관한 단순노동 반복
⑩ 담당자/멘토의 부재 ⑪ 사회적 인식 문제 ⑫ 군복무 문제
⑬ 고용 불안정 ⑭ 낮은 임금

6. 귀교에서 학생들의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공과 일치한 프로그램 운영 ② 중도탈락 보류 프로그램 운영(학업중단 숙려제와 유사 형태)
③ 순회지도 철저 ④ 사전교육 철저
⑤ 의무적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 ⑥ 기타 ( )

7.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협력 사업장과 연계하는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① 산업체에 관한 정보 및 네트워크 부족 ② 산업체의 열의 및 호응 부족
③ 학생 수요 또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산업체 선정 ④ 산업체의 학생 요구 역량 미스매치
⑤ 산업체 협력 인력풀 관리의 부재 ⑥ 직업계고와의 교육협력에 대한 산업체 측의 부정적 인식
⑦ 사업 담당자의 인센티브 부족 ⑧ 기타 ( )

Ⅳ	지역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활성화)를 위한 요구조사 및 건의/제안	다음은 귀교에서 실시하는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개선(활성화)를 위한 요구 및 건의/제안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아래 제시된 프로그램 별로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운영의 필요도				
		① 매우 불필요함	② 불필요함	③ 보통임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프로그램	협약형 특성화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그 외 지역협력 프로그램					

2. 아래 제시된 프로그램 별로 얼마나 운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운영 효과				
		① 전혀 없음	② 별로 없음	③ 보통임	④ 약간 있음	⑤ 매우 있음
프로그램	협약형 특성화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그 외 지역협력 프로그램					

3. 아래 제시된 정책·프로그램 별로 지역사회 협조가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지역사회 협조에 대한 운영 효과				
		① 전혀 안 됨	②	③ 보통임	④	⑤ 매우 잘 됨
프로그램	협약형 특성화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그 외 지역협력 프로그램					

4. 지역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어떤 변화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지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필요도				
		① 매우 불필요함	② 불필요함	③ 보통임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A. 산업체	1)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 참여 확대					
	2) 산업체의 지역 협력 프로그램 전담인력 참여 확대					
	3) 산업체의 지역 협력 프로그램 참여 확대					
	4) 참여 기업에 대한 정책 인센티브 적용					
B. 단위학교 및 교원	1) 학교장 및 교원의 적극적 열의					
	2) 혁신적인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교육 프로그램					
	3) 전담인력 강화					
	4)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 역량 강화					
	5) 산업체 협력 매뉴얼 개발 및 관련 규정 세분화					
C. 지원체제	1) 지역주도의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지원 구심체 구축					
	2) 우수 산업체-특성화고 연계 지원 강화					
	3) 참여 산업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 강화					
	4) 운영경비지원					
	5) 대학과의 통합적 운영					

5. 지역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지자체, 지역교육청)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한지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지역사회 협조의 필요성				
		① 매우 불필요함	② 불필요함	③ 보통임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프로그램	협약형 특성화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그 외 지역협력 프로그램					

6. 귀교가 소재한 지역사회(지자체, 지역교육청)에서 중등 직업교육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①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학교 교육과정 및 구조
② 학교와 지역사회 간 상호 협력 경험 부족 (지자체-교육청-산업체 간 상호 협력체계 미흡)
③ 산업체 부족
④ 학생 수 감소
⑤ 열악한 정주환경
⑥ 사회적 인식 및 관심 부족
⑦ 기타 ( )

7. 귀교에서의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어떠한 지원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처 및 조직에 따라 자유롭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술형으로 기술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중앙부처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 ▸ ▸
교육청	▸ ▸ ▸
지자체	▸ ▸ ▸
산업체 /기타	▸예시) 별도 재정지원사업 신설, 유관 부처(중기부, 고용부)와의 협업체계 구축 ▸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 기반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에 관한 인식 조사 (산업체)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올해 “지역의 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중등 직업교육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중등 직업교육에 관련된 연구는 지역과의 산학협력하에 학교교육의 개선에 포커스를 두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거버넌스, 교육행정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실제 지역에서 학교와 어떻게 매칭되는지는 깊이 고찰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별 사정이 다른 상황에서 학교교육은 지역의 산업과 노동시장의 수요와의 순환구조 속에서 개선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의 일환으로 본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중등 직업교육기관이 지역의 산업수요 및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직업교육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 수요와 밀착된 현장형 교육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의 사업체 및 대학 등과 어떤 협력을 맺고 있는지, 그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5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고 혜 원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문의처]

▣ 주관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연구책임자)
▣ 조사기관: ㈜○○○○○○ ○○○ 연구원(070-○○○○-○○○○, ○○○○@○○○○○○○.com)

A. 기업 유형

(2025년 3월 기준)

사업체명					
업종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⑤ 건설업 ⑥ 도매 및 소매업 ⑦ 숙박 및 음식점업 ⑧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⑨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⑩ 정보통신업 ⑪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⑫ 기타 : ( )			기업 규모	① 대기업(1,000인 이상) ② 중견기업(300~1,000인 미만) ③ 중기업(100~300인 미만) ④ 소기업(10~100인 미만) ⑤ 소상공인(10인 미만)
연 매출 규모	① 10억 미만 ② 10억 이상 ~50억 미만 ③ 50억 이상 ~ 100억 미만 ④ 100억 이상 ~ 500억 미만 ⑤ 500억 이상 ~ 1,000억 미만 ⑥ 1,000억 이상	소재지	① 대경권 (대구, 경북) ② 호남권 (광주, 전남)	소재 지역	① 대도시(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읍·면)

B. 최근 3년간 귀사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현황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대략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연도 4월 기준)

연도	참여 학교 수	참여 학생 수	(프로그램 이후) 정식 채용한 인원	채용 이후 1년 이상 잔존한 인원
2023				
2024				
2025				

I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에 대한 이해/인식	다음은 귀사의 지역 인재양성 정책 및 협력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인식에 관한 항목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사는 주로 어떤 경로로 지역기반의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직업계고에서 직접 요청이 들어옴
② 유관기관(지자체, 시·도교육청, 노동부, 중소기업청, 협회, 조합 등)에서 연계
③ 회사의 필요에 의해 직접 조사하여 요청함
④ 기타( )

2. 귀사가 위의 지역기반의 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우수한 인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② 인력 충원에 용이하기 때문에
③ 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를 위하여
④ 지원금/인센티브
⑤ 사회 환원 및 지역사회 봉사 측면에서
⑥ 이미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타 기업의 추천 (또는 효과 확인)
⑦ 기타

II	지역기반의 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운영현황	다음은 귀사의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현황에 관한 항목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기반의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귀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업계고의 수를 입력해주세요.

( )개

2. 귀사와 협력 학교와의 연간 교류 횟수는 대략 몇 회입니까?

(임시/정기 교류 모두 포함하여 지난 3년 간 전체 학교와의 교류횟수 기준, 없으면 0 입력)

( )회

3. 귀사에서는 위와 같은 교육기관과의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관련 업무를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① 직업계고 관련 전담인력이 담당
② 업무 관련 개별 부서에서 담당
③ 다른 업무 담당인력이 겸직
④ 담당인력 없음

4. 귀사에서는 지역 지역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직업계고의 적극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소극적임					매우 적극적임

5. 귀사에서는 지역 지역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자체 지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지원이 매우 부족함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음

Ⅲ	지역기반의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다음은 직업계고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직업교육 혁신지구, 협약형 특성화고, 그 외 학교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항목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사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의 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동기를 주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졸업 후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산업체 취업 ② 전공분야 현장체험 및 기술 습득
③ 직업 탐색· 준비 ④ 경제적 이유
⑤ 기타 ( )

2. 귀사의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업무 수행 태도 및 능력은 대체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임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태도	1) 대인관계, 사회성, 기본예절 등					
	2) 일에 대한 긍정적이고 진지한 태도					
	3) 조직 이해 및 적응					
지식 및 기술	4) 기초적인 문해능력(읽기, 쓰기, 셈하기, 영어 기초 등)					
	5)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3. 귀사의 지역기반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업계고 학생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십니까?

① 전공분야 기능 및 기술 활용 업무 ② 전공분야 단순업무
③ 비전공분야 기능 및 기술 활용 업무 ④ 비전공분야 단순업무
⑤ 기타 :

4. 귀사에서 지역기반의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① 산학·연관 협력 시설의 부재 ② 참여기관(기업체, 지자체, 학교 등)간의 협력 부족
③ 직원 중 실습훈련 담당 인력 배정의 어려움 ④ 연수 후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
⑤ 낮은 정주율 ⑥기타 :

5. 귀사의 지역기반의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 미만 ② 10%~30% 미만 ③ 30%~50% 미만 ④ 50% 이상

5.1 중도 탈락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① 대학 진학 및 진로 변경 ② 가정사/경제적 문제 ③ 적성 불일치
④ 기업/조직 환경 부적응 ⑤ 열의 부족(근무태도 부족) ⑥ 실습 환경 열악(임금/복리후생/실습비)
⑦ 취업에 대한 낮은 기대 ⑧ 현장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부화 ⑨ 전공과 무관한 단순노동 반복
⑩ 담당자/멘토의 부재

6. 귀사에서 학생들의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공과 일치한 프로그램 운영 ② 사내 전담인력 확보
③ 근무조건/작업환경 개선 ④ 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
⑤ 지역 정주율을 높이기 위한 비전 제시 ⑥ 기타 ( )

7. 귀사에서 운영하는 지역기반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하여 평가 계획을 세우고, 평가 결과를 학교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① 하고 있음 ② 실시하지 않음

8. 귀사는 앞으로도 지역기반의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계속 운영할 예정임 (→ Part4로 이동) ② 운영을 중단할 예정임 (→ 8.1로 이동)

8.1 (②로 답한 경우) 운영을 중단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참여학생이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② 직업계고생의 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③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건(인력, 프로그램, 시설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④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에
⑤ 해당 사업이 기업의 참여목적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서
⑥ 기타 ( )

Ⅳ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건의/제안	다음은 귀사에서 실시하는 지역 인재양성 및 협력체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건의/제안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사가 그간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중등 직업교육 단계에서의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진 과제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다중 선택 가능, 주제별로 하나 이상 선택)

구분		선택
A. 산업체	1)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 참여확대	
	2) 산업체의 지역 협력 프로그램 전담인력 참여 확대	
	3) 산업체의 지역 협력 프로그램 참여 확대	
B. 단위학교 및 교원	1) 학교장 및 교원의 적극적 열의	
	2) 혁신적인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교육 프로그램	
	3) 전담인력 강화	
	4)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 역량 강화	
	5) 산업체 요구에 부합하는 인력양성노력	
C. 지원체제	1) 지역주도의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지원 구심체 구축	
	2) 우수 산업체-특성화고 연계 지원 강화	
	3) 참여 산업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 강화	
	4) 운영경비지원	
	5) 관련 대학과 체계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운영 방식	

2. 귀사는 지역 내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각각에 대해 필요한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① 매우 불필요함	② 불필요함	③ 보통임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1) 우수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산업체 대상 병역지정업체 추천 확대					
2) 지역주도 사업 산업체 선정 시 가산점 부여					
3) 중소기업 지원 사업 우대권 부여					
4) 우수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산업체 세제지원(법인세 감면 등)					

2.1 위에 제시된 인센티브 제도 외에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중 귀사에서 참여할 의향이 있는 중등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분류	프로그램	개념	참여 의향
프로그램	협약형 특성화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그 외 자체적인 프로그램		

4. 사업 운영 시 귀사가 위치한 지역사회(지자체, 지역교육청)에서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선택)

①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학교 교육과정 및 구조
② 학교와 지역사회 간 상호 협력 경험 부족(지자체-교육청-산업체 간 상호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미흡)
③ 학생 역량 부족 ④ 지자체 지원 부족
⑤ 잦은 이직 ⑥ 인구 감소
⑦ 낮은 정주율 ⑧ 기타( )

5. 귀사의 지역의 인재(인력)양성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단계에서의 협력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어떤 지원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교육청, 지자체, 산업체 등의 역할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관점에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UMMARY

A Study on Improving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and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System

Jin-young Yu, Miran Kim, Sook-young Byeon, Jong-ho Jeon, Yu-jeong Seo, Jun-seo Jeong

1. Introduction

The need for this study arose from the following issues. Currently, the population cliff and regional extinction crisis caused by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are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Cultivating Regional Human Resources is crucial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owever, policies to date have largely focused on local universities. While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are more likely to settle in their local areas than university graduates, they receive little policy support.

Whil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aligned with regional industrial demand are developed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regional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systems (curriculum,

governance, infrastructure, etc.) lack a coordinated framework. This study aims to identify effective operational strategies for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improvements, focusing on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and cooperative systems fo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2. Review of Previous Research and Issues on Regional-Based Talent Policy and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Systems

The concept of Regional Human Resources has been addressed in 〈the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Act on Balanced Local Decentralization and Development〉,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Local Universities〉.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have been discussed and promoted with a focus on supplier-centered balanced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rather than on resident talent. Furthermore, policy targets and means have been narrowly defined. The exodus of talent from the metropolitan area has worsened, demonstrating that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have prioritized central government policies over local needs.

In terms of cooperative systems related to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Regional Skills Councils (RSC) and Industry Skills Councils

(ISC) play a crucial role i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However, their direct role at the secondary level remains unclear. In particular, the link between their roles in establishing and integrating governance systems with the education sector is insufficient. Previous research has emphasized the need for a regionally-focused collaborative system that integrates higher education with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entral to cooperative governance.

The challenge facing regionally-based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workforce development lies in the nationwide decline in the number of children under 15, which is declining by an average of 2.4% annually. North Jeolla, South Jeolla,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s are seeing declines in the 3% range, while South Gyeongsang Province is seeing declines of approximately 2.4%. Therefore, securing resources for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is urgently needed.

Under these circumstances,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must be recognized as a key pillar of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Beyond a strategy focused solely on university entrance exams and local universities, practical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policy support linked to local industries is needed. In particular, to foster an environment where young people, the beneficiaries of these policies, can settle in and develop their capabilities, an integrat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design that integrates complex factors such as population, industry, and culture is crucial.

3. Case study and analysis of regional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In this chapter, we examine cases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operation,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Daegyeong Area(Daegu, Gyeongbuk) and the Honam Area (Gwangju, Jeonnam) in Korea. We also examine major policies and programs of Taiwan in Asia and Austria in Europe as overseas cases.

As mentioned in the previous chapter, Daegu and Gyeongbuk have been experiencing limited vocational training and Regional Human Resources accumulation. Therefore,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e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and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ligned with industrial demand, and developing a response strategy are crucial. Local governments (e.g., Daegu Metropolitan City Hall) and the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hould take the lead, working collaboratively with industries, local universit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to develop and implement a concrete cooperative system that will enable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to secure employment at local companies and achieve long-term settlement and growth.

The G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proposed the following policies for its "Gyeongbuk Four Major Educational Transformations." These policies will accelerate ushering in a hopeful era for local communities through the Four Major Education Transformations,

which involve local universities, businesses, high schools, and lifelong learning institutions, enabling young people to receive education in their birthplace, settle in their communities, and pursue their dreams.

The immediate challenges facing the Honam region, including Gwangju and South Jeolla Province, include the triple whammy of population decline, aging, and talent exodus, all of which are common in most non-metropolitan areas. As the nation'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re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gap betwee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is widening.

In the case of the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t appears that improvement is needed in the cooperative system with related organizations surrounding schools within the scope of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for student admission, graduation, employment, and local settlement through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South Jeolla Province is facing a significant threat of regional extinction. Consequently, the need to foster local, high school graduate talent capable of responding to this challenge is growing.

Taiwan's Vocational Education Policy: Many people worry about the educational crisis posed by rapid technological changes and a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but concerns about vocational education are even more acute. Taiwan's situation is even more dire than ours. Nevertheless, they anticipated this situation over a decade ago and developed solutions. By expanding vocational education into

a lifelong learning platform for all citizens, the government is pursuing the creation of new employment opportunities, higher wages,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ustria,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has a similar education system to that of Germany and Switzerland, both German-speaking countries. Austria'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s divided into two parts: vocational training centered on vocational schools and on-the-job training centered on industrial sites. Regarding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xisting macro-level cooperation system among government ministries and to specify the scope of cooperation between relevant ministries 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Korea,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is primarily school-centered, so collaborative efforts are needed to strengthen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support centered on on-the-job training at companies, similar to those in Germany and Austria.

4. Survey and Analysis of Regional-Based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The survey confirmed that while perceptions between schools and businesses differ somewhat, there is a clear overlap in the need for and commitment to cooperation, as well as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Translating this alignment into a realistic institutional

design and operational framework is a key task that will determine the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of regional vocational education in the future.

Above all, it was agreed that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to improve the awareness of local government heads regarding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which is a key axis in fostering local talent, and measures to secure a stable budget for local governments were also discussed to expand support for fostering talent, which is currently focused on higher education, to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Unlike the Daegyeong region, the Honam region forum focused primarily on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and the creation of a consultative body within the region, rather than discussing the metropolitan area.

5. Tasks for improving the operation of regional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Based on the preceding researc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surveys, and forum results examined above, this study summarizes the issues and controversies regarding regional talent development policies and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systems as follows.

1. Inadequate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legislation and cooperative systems fo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2. Securing Regional Human Resources requires securing and

revitalizing academic resources fo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3. Review and improve the operation of regional cooperative systems for policies for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4. Establish cooperative systems tailored to industrial demand and the characteristics of vocational high schools by region.
5.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supporting the settlement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in each region are needed.
6. Develop a reasonable model for cooperative systems among local governments, education offices, industries, and schools.
7. A model linking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and higher vocational education is needed.
8. Review the status of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and develop improvement plans.
9. (Regional) A system for building trust between schools and businesses is needed.
10. A legal basis is needed to improve awareness of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11. Establish an approach strategy and secure a budget for establishing a vocational education-based consultative body.
12. Establish a consultative body at the metropolitan level is needed.

□ 저자 약력

- 유진영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 변숙영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종호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서유정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준서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원
- 김미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명예위원

지역의 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 연구

· 발 행 연 월 일 2025년 10월 31일 인쇄
2025년 10월 31일 발행
· 발 행 인 고 혜 원
· 발 행 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44)415-5000, 5100
팩 스: (044)415-5200
· 등 록 일 자 1998년 6월 11일
· 등 록 번 호 제16-1681호
· I S B N 979-11-424-0810-6 (93300)
· 인 쇄 처 ㈜다원기획(044-865-8115)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값 8,000원〉

www.krivet.re.kr

값 8,000원

93300

9 791142 408106

ISBN 979-11-424-0810-6